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2004. 12

성명재·김종면

서 언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불평등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가 치러질 때뿐만이 아니라 소득불평등 문제는 약방의 감초처럼 이미 일상적인 뉴스의 소재거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소득불평등 문제는 각계각층에서 무수히 많은 연구결과와 사례가 보고되면서 그 심각성이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작금의 소득불평등도 확대 현상이 얼마간 지속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또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정확한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역시 사실에 대한 진단 내용만큼이나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의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증상은 알지만 원인분석이 불충분하여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분배와 관련한 연구의 역사는 매우 길다. 그렇지만 소득분배 연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외환위기 이후이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소득분배 관련 연구는 총량적인 분석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각종 부문별, 교육수준별, 가구유형별 등과 같은 세부적 형태로의 분석은 부족하였다.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총량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개별부문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가구유형별, 교육수준별, 맞벌이 여부별, 산업부문별로 부문을 나누어 각각에 대

해 소득분배 구조를 살펴보면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착수되었다.

각 부문별로 소득분배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총량적인 분석에서는 밝혀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본격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미개척분야가 매우 많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 하나만으로 모두 완료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부문별 소득분배 연구에서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 밝혀낸 분석결과가 기초자료가 되어 추후의 보완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의 기틀을 제공하고, 소득분배 및 세부담의 형평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밝혀낸 연구의 성과로서, 고등교육 육성정책이 종전에는 소득분배 격차 축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교육수준의 상향평준화가 거의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학력화를 지향하는 교육정책으로는 결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성공적이거나 효율적인 정책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맞벌이가구 육성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육아보육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보완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과, 사업소득세의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점 역시 본 연구가 일궈낸 대표적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성명재 박사와 김종면 박사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이 자리를 빌려 본 연구의 준비·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초자료 분석·정리와 원고작성,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등 연구의 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질적 수준의 개선을 위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논평을 아끼지 않은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께도 충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담고 있는 연구내용의 주된 핵심정책 사항과 결론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은 것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기초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시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2004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연구의 방향

1997~1998년의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구조에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대외개방이 일시에 이루어지면서 경쟁이 격화되었으며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였다. 특히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 부문의 쇠퇴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전통산업과 신흥산업간에 명암이 엇갈리면서 양자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경기양극화 현상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산업구조와 성장동력의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특이한 현상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는 전체적인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부문별 성장 또는 쇠퇴 양상을 비대칭적으로 나타내면서 소득분배 구조도 부문별로 매우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는 산업별로 변화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 매우 다양한 양상의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도 부문별·부문간 분배구조의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연구의 대부분은 가구 전체 또는 가구유형별로 소득분배 문제에 국한하고 있어 각 부문별 특성에 근거한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요인이나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 격차의 발생요인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에 있어 그동안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특화하여 소득분배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가구유형별 접근방법에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분배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에 의한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문제를 비롯하여 산업별·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격차 문제에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문별로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향후 관련 분야의 기초연구 및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도시가구의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가.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래 19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니계수가 하락추세를 보여 상대소득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에는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0.28678이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2년에는 0.24147로 낮아졌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저점부근에서 안정추세를 보이면서 1995년에 0.24280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우리나라의 상대소득 격차는 확대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경제위기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초과상승(overshooting) 현상을 보였다. 즉, 1996년에 지니계수가 0.24685로 소폭 상승한 이후 1998년의 경제위기에는 0.31121로 급상승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

에 접어들면서, 다소의 등락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0.27~0.28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8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니계수가 추세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의 기간 동안 지니계수가 하락추세를 보였던 데에는 지속적인 경제발전,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교육수준의 상향평준화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니계수가 상승추세로 반전된 데에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몰락 또는 고소득층의 괄목할 만한 소득증가 현상 등이 기간에 따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의 급변 등에 따라 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장기실업 추세가 확산되었다. 취업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등 고용상태가 불안한 비율이 높아지는 등 극빈층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 둔화 또는 몰락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대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반면에 IT 및 금융산업 등에서 소수의 고소득층의 경제적 도약 또한 이 기간 동안 상대소득 격차를 확대시킨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에는 지니계수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전반적인 추세를 논하자면 소득분배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연령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생애소득의 흐름을 보면 청년기(또는 시장진입기)에는 소득수준이 낮지만 연령과 경험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다가

장년층에 접어들면서부터 퇴직, 은퇴, 실직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점차 소득이 낮아지는 역U자 형태의 소득흐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적으로 시장진입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의 평균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져 40대 또는 50대에서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50대 후반 이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은 연령별 소득분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난 20여년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1997~1998년의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모든 연령층의 평균소득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20대 초반 이하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소득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는 소득 1~2분위의 최저소득층에서 소득감소세가 현저하게 두드러졌다. 이들 소득계층이 연령적으로는 20대 초반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연령층 중 상당히 많은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연령별 소득패턴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고소득층에서는 ‘소득확장기’가 길고 저소득층에서는 ‘소득하강기’가 긴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소득 직종에서 오래 생존하기 때문인 반면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급여수준이 낮은 시장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는 현실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고소득층의 소득확장기가 길어지는 추세가 일생을 두고 지속된다면 생애소득(lifetime income) 분배격차는 경상소득(current income) 분배격차보다 더 커질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실제의 상황이라면 부의 분배격차는 고

연령층으로 갈수록 더 커질 것이므로 향후 고령사회에서의 노인 복지 문제는 단순히 최저생계 보조 이상의 형평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소득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생애소득에 대한 소득분배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보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위의 논의는 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에서 일단 소득순위가 결정되면 생애를 통틀어 소득순위가 변동 없이 일정하게 고정된다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강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위에서 제기한 생애소득 분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이 문제는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 가구원수별 소득분배 구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분포상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첫째,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4인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대가족 형태의 가구비중이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소수가구의 비중이 급상승하는 핵가족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자수가 많으며 따라서 소득수준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원수와 평균소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비례관계는 아니다.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평균소득도 증가하지만 소득의 증가속도는 가구원수의 증가속도보다 느리다.

가구원수별로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2인가구가 3인 이상 가구보다 높다. 그러나 3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지니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 2인가구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2인 가구의 구성이 이질적인 2개 또는 그 이상의 부류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가구원수별 소득분포의 특징을 고찰해 봄으로써 검증해 볼 수 있다.

3.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가. 교육수준과 소득분배간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

사회 전반의 교육수준 변화를 소득분배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세 가지 경로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교육수준의 분포가 장기간에 걸쳐 변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교육수준별 계층에 적용되는 가중치의 구성이 변화하는 문제이다. 둘째, 각 계층간 상대소득의 격차가 변한다면 각 교육계층별 가중치(계층의 상대적인 크기)에 변화가 없더라도 소득분배 구조가 달라진다. 이는 ‘계층간 지니’, 혹은 계층간 소득분배의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셋째, 계층분포(가중치)나 계층간 상대소득의 변화가 없더라도, 각 계층내에서 전반적인 상대소득 격차가 변한다면 전반적인 소득분배 구조도 변할 것이다. 이를 ‘계층내 지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 가구주 교육수준의 변화추이

지난 20여년간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분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학력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의 표본비

중은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가구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다. 7단계의 교육수준 중 가장 점유비중이 높은 것은 고등학교 학력이다. 1985년에는 가구주의 학력이 고등학교인 가구가 전체의 37.7% 정도였으며 1990년대 초까지 상승하여 45% 수준에 도달한 이후 안정추세를 보이다가 비교적 최근에 대학 및 대학원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추세적 변화현상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빠르게 상향평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표본구성을 살펴보면 학력별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층 점유비가 높아지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소득층 점유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학교를 분기점으로 그 이하와 그 이상의 학력층으로 확연히 구별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소득분포의 특징을 찾자면, 첫째,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도 함께 상승한다는 점과, 둘째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에 동일 학력수준내 가구들의 상대소득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다.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특징

고졸 가구주의 비중은 1985년 37%에서 1988년 44%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이후 45%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가구주 중 고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1980년대 후반에 이 계층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니계수 변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졸 가구주 비중의 변화와는 대조적으로 중졸 및 초졸 가구주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무학 가구주의 비중이 지난 18년 동안의 관측기간에 걸쳐 사실상 불변인 점도 눈에 띈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 비중은 전반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초졸과 중졸 가구주 비중은 199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동 기간에 발생한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 하락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학력 가구주의 비중이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 가구주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함으로써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가 상승하도록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주 교육수준별 계층내 지니의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계층내 지니가 다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정 가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과 다르기보다는 유사한 집단을 자신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간주하기 쉽다고 보았을 때, 같은 집단내에서의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사실은 집단간 소득격차가 벌어진 경우보다도 그 가구가 체감하는 소득분배 악화의 정도가 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당시 전 계층에 걸쳐 소득에 심한 타격을 입고 전반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지니계수가 폭등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당시인 1997~1998년의 2년 동안 지니계수가 폭등하면서도 교육수준에 따라 타격의 정도가 뚜렷이 다르다. 즉,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지니계수의 상승폭이 크

며, 이러한 학력수준별 순위에 다만 예외적으로 전문대졸 가구주 계층의 지니계수가 고졸 계층보다 높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저학력 계층 안에서도 무학, 초졸, 중졸 가구주 계층의 차이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계층이 우선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기서도 저학력 가구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계층일수록 계층내 소득형평성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층내 지니의 학력수준별 서열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관측되나, 이 기간에는 대졸 계층이 고졸보다 계층내 지니가 높은 현상 등 일부 예외도 관측된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학력수준별 계층내 지니 서열화는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무학, 초졸, 중졸 순의 서열화가 매우 뚜렷해서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같은 계층 안에서도 소득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교육수준이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

1980년대 중반 이래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연관지어 살펴볼 때, 소득분배 구조 변화의 양상과 원인별로 대략 4기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대략 1980년대 후반으로서, 이 기간중 지니계수의 급격한 하락은 초·중졸 가구주 비중의 급감 및 이에 상응하는 고졸 가구주 비중의 증가로써 주로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제2기는 1990년 초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지니계수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하락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이는 가구주 학력이

서서히 고학력 위주로 바뀌고 아울러 교육계층간 상대소득의 격차가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데 기인하였다.

제3기는 좁게 보아서 1997년과 1998년 두 해에 걸친 외환위기 기간으로서, 전 계층에 걸쳐 소득이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특히 눈에 띄는 사실은 환란으로 인한 타격의 정도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의 이러한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서열화 현상은 환란 이후인 제4기에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4기의 특징 중 또 다른 것으로는, 외환위기 직전과 비교하여 교육수준의 분포나 교육수준별 상대소득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수준별로 계층내 소득격차가 커짐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환란 이전에 비하여 지니계수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준거집단 내의 소득분배가 악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소득형평성 악화의 체감 정도는 더 클 수도 있다.

4. 맞벌이가구 비중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가. 맞벌이가구의 소득변화 추이

도시가계조사자료 중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경향은 가구주의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고학력층의 맞벌이가구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고학력층의 맞벌이가구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취업근로자가구의 연간 평균 총소득은 2003년 현재 3,794만원으로 추정된다. 맞벌이가구의 평균 총소득은 4,083만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3,470만원보다 약 18% 정도 높다. 1980년대 후반에는 비맞벌이가구의 총소득 수준이 맞벌이가구보다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 20여년 동안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비맞벌이가구보다 더 높은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주의 소득은 2003년 현재 비맞벌이가구(2,792만원)가 맞벌이가구(2,683만원)보다 약 90만원 정도 많다. 배우자소득은 맞벌이가구에서 921만원이다. 이는 가구의 소득구성을 보았을 때 맞벌이가구의 자산소득과 기타가구원 소득수준이 비맞벌이가구보다 작음을 시사한다.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은 비맞벌이가구보다 많다. 그러나 소득세 부담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와 초과누진세율 구조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누진과세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도 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부의 합산소득 수준이 동일한 경우라면 단일소득자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높다.

나. 맞벌이가구 비중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 사이의 상대비중 변화는 소득 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여년 동안 맞벌이가구의 비중 변화가 소득분배(상대소득 격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여년간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은 최소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소득격차를 축소시켜 주는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맞벌이가구의 비중 확대가 상대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인가구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곤 한다. 그렇지만 맞벌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2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있다면 이는 1인가구까지 포함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

가. 산업부문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문을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④ 건설업 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⑥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⑦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 ⑧ 기타의 8개 부문으로 대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상기 분류에 의한 8개 산업부문 가운데 분류가 불분명한 기타 부문을 제외하면, 제조업 부문의 가구구성비가 가장 높다. 제조업의 경우 1980년대에는 가구비중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제조업의 가구비중은 하락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20% 수준까

지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제조업의 가구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가구비중이 높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가구비중은 1980년대에는 2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점유비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10%대 중반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건설업 부문은 1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가구비중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광업부문과 전기·가스·수도 부문의 가구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그 밖에 운수·창고·통신과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은 최근 10%에 육박하는 점유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경우에는 가구점유비가 상승하고 있어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부문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가구구성비가 변하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부문의 가구구성비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산업부문의 다양화를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산업부문별 소득분배 구조의 특징

산업부문 중 평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전기·가스·수도 부문이다. 2003년 현재 이 부문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4,990만원으로 도시가구의 평균소득 3,535만원보다 27.0% 정도 높다. 최근 이 부문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자리잡고 있는

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우리 경제구조가 정보화 체제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1990년대 말의 IT 산업을 위주로 한 증시의 폭발적 활황 현상은 그러한 경향을 잘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다음으로는 제조업과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소득수준이 각각 3,857만원과 3,821만원으로 도시간구의 평균소득보다 각각 9.1%와 8.1% 정도씩 높다. 이 가운데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 중 하나였다. 다만 최근에는 전기·가스·수도 부문에 비해 신장세가 떨어지면서 수위를 내주었다.

전기·가스·수도 부문의 경우에는 도시간구의 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비가 전통적으로 1을 초과하는 대표적인 고소득 부문인데 최근 들어 상대소득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경우에는 상대소득비가 여전히 1을 상당히 크게 초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1980년대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광업부문의 경우에는 2003년의 평균 총소득이 3,011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도시간구의 평균소득에 14.8% 정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운수·창고·통신업, 건설업, 기타부문은 평균소득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산업부문별 소득세 부담 구조의 특징

도시간구의 가구당 평균 소득세 부담액은 1982년 12만원에서

2003년에는 137만원으로 지난 21년간 약 11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소득증가율보다 소득세 증가율이 다소 더 높아 실효소득세 부담률은 3.13%에서 3.88%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문별로 소득세 부담을 추정해 본 결과 대체로 소득수준의 차이 순서대로 소득세 부담의 순위도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경우에는 이 부문과 평균소득 수준이 비슷한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 부문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은 운수·창고·통신업 부문과 소득수준 및 소득세 부담 순위상으로 순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2003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주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으면서도 실효소득세부담률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요인으로 크게 가구원수, 취업인수, 근로자가구 또는 자영업자가구와 같은 가구유형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외에도 본 연구에서 도시간조사자료를 분석할 때,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에 대한 소득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추정오차로 인해 실제와 상관없이 분석오차에 의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자영업자가구의 종합소득세(또는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등과 같은 인적공제가 소득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영업자가구의 면세점이 근로소득의 경우보다 낮게 산출된다.

그런데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은 운수·창고·통신업 부

문을 포함하여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자영업자가구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실효소득세부담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가구유형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

산업부문별 소득세부담률을 비교해 본 결과, 소득유형(또는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세 부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간의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분석방법론적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본 연구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할 때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정보는 역소비함수를 이용한 추정소득에 의존하는 만큼, 만약 소득추정 오차에 의해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의 문제를 점검함에 있어서는 소득추정 방법에 대한 개선된 방법을 동원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6. 결론 및 시사점

가.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정책시사점

1980년대 중반 이래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연관지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 후반(제1기)에는 지니계수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이는 초·중졸 가구주 비중의 급감과 이에 상응하는 고졸 가구주 비중의 증가 등 교육수준의 상승으로써 주로 설명된다. 1990년 초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기간(제2기)에는 지니계수가 전

반적으로 완만하게 하향안정세를 취하였다. 이 기간에는 가구주 학력이 서서히 고학력 위주로 바뀌었다. 아울러 학력계층간 상대소득의 격차도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였다. 제1~2기의 소득분배 구조를 합하여 요약하면,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굳이 세분하자면 1980년대 후반에는 가구주 학력분포의 급속한 변동이, 1990년대 초반에는 학력계층간 상대소득 격차의 빠른 감소가 소득격차 축소의 주된 요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 근저에 작용한 주요 정책수단은 기간에 따라 달랐을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1997~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제3기)에는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소득이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환란으로 인한 타격의 정도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외환위기 당시 이와 같은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서열화 현상은 환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4기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으로, 제3기부터 시작된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서열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직전과 비교하여 교육수준의 분포나 교육수준별 상대소득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수준별로 계층내 소득격차가 커짐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환란 이전에 비하여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준거집단내의 소득분배가 악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소득형평성 악화의 체감 정도는 더 클 수 있다.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와 관련하여 정책측면에서 4개 기간에 걸친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해석하였을 경우, 제1~2기의 상황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물리적인’ 정부정

책이 주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꾸준히 고등교육 확대 정책을 견지한 결실로 1980년대 후반에 소득형평성 제고를 달성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제2기에서는 주로 계층간 상대소득 격차 감소를 통하여 소득형평성 제고를 달성하였다. 이 역시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세·재정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인 제4기에서는 교육수준 분포의 급속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제4기에서는 계층간 상대소득 수준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위적 재분배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더 이상 좁히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유인과 구조가 많이 변했다고 사료된다.

결국 적어도 교육수준이라는 요인을 놓고 보았을 때, 1980년대 초·중반 이후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기간에서와 같이 정부정책이 소득분배 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던 상황을 이체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학력화를 통한 소득격차 축소 정책은 별로 매력적인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¹⁾.

나.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가 소득분배 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른 정책시사점

1990년대 후반부터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이 소득분배 격차를 완화시켜 주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과 2003년 사이에 도시간구의 취

1)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빈곤의 세습 탈피를 위해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더 유효할 수 있다.

업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35.57%에서 52.04%로 19.39%p 상승하였으며, 지니계수는 0.27104에서 0.26626으로 0.00478지니p만큼 하락하였다. 만약 최근의 맞벌이 양상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매우 유사한 형태로 맞벌이가구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지니계수를 낮출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가구의 육성·지원은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정책의 중요한 정책방안의 하나로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맞벌이 문제는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육아보육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논의가 매우 단선적이지만 육아보육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면 여성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맞벌이가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보육 장려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육아보육 비용과 관련된 수요측면에서의 직·간접적 지원에 추가하여, 공급측면에서도 유관 시설의 신설·유지·확대정책 등도 함께 추진하여야 효과적이다. 또한 이 정책은 인구의 노령화 추세 등과도 연계해 볼 때 여성노동력 공급 육성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산업부문별 소득분배 및 세부담 구조 분석에 따른 정책 시사점

산업부문별로 소득격차가 존재하지만 그 격차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소득격차에 비해 세

부담의 격차가 다소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소득세제의 누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부담률은 자영업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부문에서 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 중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소득을 탈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의 소득세제도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에 대응하여 근로소득세에는 높은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에는 소득공제 수준을 낮게 책정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개별사업자 각각에 대한 소득탈루율은 파악할 수 없더라도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율을 알 수 있다면 소득탈루의 정도를 감안하여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최소한 평균적으로는 근로소득세와의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득유형별로 과세체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자칫 또 다른 형태의 과세 불공평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현행의 소득공제 수준이 평균적인 소득탈루율 수준을 적정 수준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유형간에 여전히 소득세 과세의 불공평이 잔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영수증 복권제도, 과세당국의 탈루소득 포착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표가 크게 양성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이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수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해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세 실질부담이 상승하였다. 그러므로 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의 변화는 자칫 소득유형간 수평적 과세의 형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해 본 결과,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이고 정치한 연구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일부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부담이 자칫 근로소득세 부담과 관련하여 수평적 과세의 형평 원칙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더 과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를 감안하여 소득유형별로 소득공제 수준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세의 형평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차선책(second best choice)으로서 제안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평균적인 소득탈루율을 파악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이것조차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만큼 해결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볼 때 현행 소득세제하에서의 소득유형별 소득공제 수준의 차이는 적정 수준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는 분석에 따른 추정오차에 의한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유형간 소득세 과세의 형평 문제에 대해서는 분석오류의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문제의 제기	41
1. 연구의 방향과 대상	41
2. 소득분배 관련 기존의 연구성과	44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6
II. 연구의 목적과 분석방법	48
1. 연구의 목적	48
2. 분석방법과 연구의 주요 내용	49
가. 분석의 범위와 주요 내용	49
나. 기대효과	50
3. 불평등도 지수 : 지니계수	51
가. 지니계수의 정의	51
나. 지니계수의 분해와 Q지수	53
4. 불평등도 지수 : SCV, MLD, Atkinson 지수	56
5. 분석자료	58
가. 분석자료의 범위	58
나.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가공	59
III.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62
1.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변화추이	62
가. 소득분포	62
나. 소득분배 구조: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65
2. 연령별 소득분배 변화추이	68
가. 소득분포	68

나. 소득분배 구조: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73
3. 가구원수별 소득분배 변화추이	76
가. 가구원수별 표본분포	76
나. 가구원수별 소득분포	78
4. 분기소득 대 연소득 지니계수	83
가. 연소득과 분기소득 지니계수간의 관계	83
나. 분기소득 및 연소득 지니계수의 비교	86
IV.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89
1. 개 요	89
2. 가구주 교육수준별 표본분포	90
3.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위의 구성분포	93
4.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포	97
5.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 분할에 의한 지니계수의 분해	101
6. 교육수준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모의실험 결과 ..	105
7. 교육수준별 계층내 및 계층간 소득분배의 변화	110
8.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115
V. 맞벌이가구 비중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118
1. 소득분포의 특징: 도시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118
가. 맞벌이가구의 분포	118
나. 맞벌이가구 대 비맞벌이가구의 소득분포	127
다. 맞벌이가구 대 비맞벌이가구의 세부담 분포	132
라. 상대소득분포의 비교: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141
2. 소득분포의 특징: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분석결과	152
가. 맞벌이가구의 분포	152
나. 소득세 부담의 비교	156
다. 지니계수	157
3. 정책시사점	160

VI.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정책시사점	163
1. 산업부문의 분류	163
2. 도시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164
가. 산업부문별 가구구성의 변화추이	164
나. 산업부문별 소득분포	166
다. 산업부문별 세부담 분포	171
라. 상대소득 분포의 고찰: 산업부문 지니계수의 분해를 중심으로	198
3.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2
가. 산업부문별 가구구성	202
나. 산업부문별 소득분포	203
다. 산업부문별 소득세 부담 분포	205
라. 상대소득 분포의 고찰: 산업부문 지니계수의 분해를 중심으로	210
4. 정책시사점	211
VII. 결 론	214
1. 요약 및 시사점	214
2. 제약점 및 향후 보완과제	221
참고문헌	224
<부록 I> 지수의 특성	227
<부록 II>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기준	229
<부록 III> 도시가구의 가구유형별 취업인수 분포	234

표 목 차

<표 III-1> 가구유형별 평균소득 추이	63
<표 III-2> 가구유형별 가구구성비 변화추이 (도시가계조사자료 기준)	64
<표 III-3> 가구유형별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67
<표 III-4> 연령별 총소득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69
<표 III-5> 연령대별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75
<표 III-6> 가구원수별 표본가구의 분포	77
<표 III-7> 가구원수별 평균소득 및 전체 평균소득 대비 소득 배수의 분포	79
<표 III-8> 가구원수별 취업인수 분포	80
<표 III-9> 가구원수별 소득 점유비중	81
<표 III-10> 가구원수별 지니계수(총소득)	82
<표 III-11> 분기소득 및 연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87
<표 IV-1> 가구주 교육수준별 표본구성 분포	92
<표 IV-2>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위 구성비 (각 분위별 비중합계=10%)	94
<표 IV-3>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위 구성비 (각 분위별 비중합계=10%)	95
<표 IV-4>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위 구성비 (각 분위별 비중합계=10%)	96
<표 IV-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위 구성비 (각 분위별 비중합계=10%)	97
<표 IV-6> 가구주 교육수준별 평균소득 분포	98

<표 IV-7> 평균소득 대비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배수	99
<표 IV-8> 교육수준별 지니계수의 분포추이	100
<표 IV-9> 교육수준별 지니계수의 분해(Yitzahki 분해)	102
<표 IV-10> 교육수준별 지니계수의 분해(Pyatt 분해)	103
<표 IV-11> 평균소득 대비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배수	104
<표 IV-12> 실제 지니와 교육수준 분포를 기준연도 불변으로 상정한 지니값의 비교	106
<표 V-1> 학력수준별 맞벌이가구의 비중 (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120
<표 V-2> 취업근로자가구 중 소득계층별 비맞벌이 가구의 비중	123
<표 V-3> 취업근로자가구 중 소득계층별 맞벌이 가구의 비중	124
<표 V-4> 소득계층별 취업근로자가구의 비율 (도시가계조사자료)	125
<표 V-5> 맞벌이가구 대 비맞벌이가구의 점유율 상대비 (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127
<표 V-6> 취업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29
<표 V-7> 취업근로자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의 평균소득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31
<표 V-8> 취업근로자가구의 소득세 부담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34
<표 V-9> 취업근로자가구의 소비세 부담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36
<표 V-10> 소비함수의 추정결과(OLS, 도시가계조사자료 중 취업근로자가구 기준)	138

<표 V-11> 취업근로자가구의 소득세+소비세 부담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39
<표 V-12> 소득획득 형태별 총소득 지니계수(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142
<표 V-13>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기준연도 =1982년)	146
<표 V-14>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기준연도 =1993년)	148
<표 V-15>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기준연도 =2003년)	150
<표 V-16> 소득획득 형태별 가처분소득(총소득-소득세) 지니계수(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151
<표 V-17> 교육수준별 맞벌이부부의 비중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154
<표 V-18> 소득계층별 맞벌이가구의 비중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154
<표 V-19> 소득계층별 맞벌이가구 대 비맞벌이가구의 상대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155
<표 V-20>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평균소득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156
<표 V-21> 소득획득 형태별 소득세 부담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157
<표 V-22> 지니계수(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158
<표 V-23>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기준연도=1996년)	159

<표 V-24>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기준연도=2000년)	159
<표 VI-1> 산업부문별 가구구성비(도시가계조사자료)	166
<표 VI-2> 산업부문별 평균소득 분포 추이 (도시가계조사자료)	168
<표 VI-3> 전체 평균소득 대비 산업부문별 소득상대배수 (도시가계조사자료)	170
<표 VI-4> 산업부문별 소득세 부담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173
<표 VI-5>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부담률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75
<표 VI-6> 산업부문별 가구당 가구원수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83
<표 VI-7> 산업부문별 가구당 취업인수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84
<표 VI-8> 산업부문별 자영업자가구의 비중 (도시가계조사자료)	185
<표 VI-9> 산업부문별 소비세 부담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188
<표 VI-10> 산업부문별 실효소비세부담률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90
<표 VI-11> 산업부문별 소득세+소비세 부담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93
<표 VI-12>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95
<표 VI-13> 산업별 지니계수의 Yitzahki 분해 (도시가계조사자료)	200
<표 VI-14> 산업별 지니계수의 Pyatt 분해 (도시가계조사자료)	201

<표 VI-15> 산업부문별 가구구성비(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2
<표 VI-16> 산업부문별 평균소득 분포 추이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4
<표 VI-17> 전체 평균소득 대비 산업부문별 소득상대배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4
<표 VI-18> 산업부문별 소득세 부담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7
<표 VI-19>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부담률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7
<표 VI-20> 산업부문별 가구당 가구원수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8
<표 VI-21> 산업부문별 가구당 취업인수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8
<표 VI-22> 산업부문별 자영업자가구의 비중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9
<표 VI-23> 산업별 지니계수의 Yitzahki 분해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10
<표 VI-24> 산업별 지니계수의 Pyatt 분해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11

그 립 목 차

[그림 III-1]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68
[그림 III-2] 연령별 총소득 분포의 변화추이	70
[그림 III-3] 연령별 총소득 백분위수(2002년 기준)	72
[그림 III-4] 연령별 총소득 백분위수(2003년 기준)	72
[그림 III-5] 연령별 총소득 지니계수 I	74
[그림 III-6] 연령별 총소득 지니계수 II	74
[그림 III-7] 분기소득 및 연소득 지니계수의 비교	86
[그림 IV-1] 평균소득 대비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배수	105
[그림 IV-2] 실제 지니와 교육수준 분포 불변 Pivot 지니의 비교	108
[그림 IV-3] 교육수준별 가구주 비중의 추이	109
[그림 IV-4] 가구주 교육수준별 계층내 지니의 추이	111
[그림 V-1] 맞벌이가구 비중의 변화추이(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121
[그림 V-2] 학력수준별 맞벌이가구의 비중(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121
[그림 V-3] 취업근로자가구 중 소득계층별 맞벌이가구의 비중 (도시가계조사자료)	125
[그림 V-4] 소득계층별 취업근로자가구의 비중 (도시가계조사자료)	126
[그림 V-5] 취업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30
[그림 V-6] 취업근로자가구의 소득세 부담 (도시가계조사자료)	135

[그림 V-7] 취업근로자가구의 실효소득세부담률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35
[그림 V-8] 취업근로자가구의 소비세 부담(도시가계조사자료) ..	137
[그림 V-9] 취업근로자가구의 실효소비세부담률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37
[그림 V-10] 취업근로자가구의 소득세+소비세 부담 (도시가계조사자료)	140
[그림 V-11] 취업근로자가구의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40
[그림 V-12] 소득획득 형태별 총소득 지니계수(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143
[그림 V-13] 소득획득 형태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취업근로자 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152
[그림 V-14] 교육수준별 맞벌이가구의 비중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155
[그림 V-15] 소득계층별 맞벌이가구의 비중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155
[그림 VI-1] 산업부문별 가구구성비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165
[그림 VI-2] 도시가구의 총소득 증가추이(도시가계조사자료)	169
[그림 VI-3] 산업부문별 총소득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169
[그림 VI-4] 전체 평균소득 대비 산업부문별 소득상대배수 (도시가계조사자료)	171
[그림 VI-5] 도시가구의 총소득세 부담 증가추이 (도시가계조사자료)	174
[그림 VI-6] 산업부문별 총소득세 분포 추이(도시가계조사자료) ..	174
[그림 VI-7] 실효소득세부담률의 비교: 광업과 제조업 (도시가계조사자료)	176
[그림 VI-8] 실효소득세부담률의 비교: 전기 등과 건설업 (도시가계조사자료)	176

[그림 VI-9] 실효소득세부담률의 비교: 도소매 등과 운수 등 (도시가계조사자료)	177
[그림 VI-10] 실효소득세부담률의 비교: 금융 등과 기타 (도시가계조사자료)	177
[그림 VI-11] 산업부문별 가구당 가구원수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82
[그림 VI-12] 산업부문별 가구당 취업인수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86
[그림 VI-13] 산업부문별 자영업자가구의 비중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186
[그림 VI-14] 도시가구의 총소비세 부담 증가추이 (도시가계조사자료)	189
[그림 VI-15] 산업부문별 총소비세 분포 추이 (도시가계조사자료)	189
[그림 VI-16] 실효소비세부담률의 비교: 광업과 제조업 (도시가계조사자료)	191
[그림 VI-17] 실효소비세부담률의 비교: 전기 등과 건설업 (도시가계조사자료)	191
[그림 VI-18] 실효소비세부담률의 비교: 도소매 등과 운수 등 (도시가계조사자료)	192
[그림 VI-19] 실효소비세부담률의 비교: 금융 등과 기타 (도시가계조사자료)	192
[그림 VI-20] 도시가구의 총소득세+소비세 부담 증가추이 (도시가계조사자료)	194
[그림 VI-21] 산업부문별 총소득세+소비세 분포 추이 (도시가계조사자료)	194
[그림 VI-22]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의 비교: 광업과 제조업 (도시가계조사자료)	196
[그림 VI-23]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의 비교: 전기 등과 건설업 (도시가계조사자료)	196

[그림 VI-24]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의 비교: 도소매 등과 운수 등(도시가계조사자료)	197
[그림 VI-25]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의 비교: 금융 등과 기타 (도시가계조사자료)	197
[그림 VI-26]	산업부문별 가구구성비(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2
[그림 VI-27]	산업부문별 평균소득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4
[그림 VI-28]	전체 평균소득 대비 산업부문별 소득상대배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5
[그림 VI-29]	산업부문별 소득세 부담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7
[그림 VI-30]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부담률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8
[그림 VI-31]	산업부문별 가구당 가구원수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9
[그림 VI-32]	산업부문별 가구당 취업인수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9
[그림 VI-33]	산업부문별 자영업자가구의 비중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10

I. 서론 :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방향과 대상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 이래 소득분배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제가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로 대표되는 내수가 극심하게 침체되면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다.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계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남발 및 무분별한 사용에 따라 양산된 무수히 많은 신용불량자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등도 상당히 심각하다. 더욱이 최근의 경제성장은 고용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용 없는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최근에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대부분의 소득분배 연구는 우리나라 가구 전체 또는 가구유형별로 소득분배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도 현황과악 및 정책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구의 폭이 고정되어 있어 다양한 현상을 분석·과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 격차의 발생요인에 대한 현황과악 및 원인분석에 있어 그동안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특화하여 소득분배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가구유형별 접근방법에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분배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에 의한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문제를 비롯하여 산업별·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격차 문제에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문별로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의 소득분배와 관련한 연구문헌을 보면 최근의 소득분배 상태는 1980년대 중반~후반 수준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는 지니계수를 평균적으로 비교하였기 때문에 도출되는 결론일 뿐이다. 그 이면에는 소득획득 과정에서 시장여건의 안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 기간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노동시장 여건을 살펴보자. 비록 노동운동이 활발하기는 하였지만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여건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그렇지만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고용여건이 새롭게 바뀌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최근의 소득분배 상태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와 아울러 소득획득과 관련하여 시장여건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여성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서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소득분배 구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공급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주체들이 소득을 획득하는 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만큼 소득분배 연구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현상(economic mechanism)은 흔히 부존자원(endowment)과 부존자원에 대한 평가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는 흔히 가격(price)이라고 불린다. 소득분배 구조도 가격과 부존자원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소득을 창출해주는 유형 또는 무형의 것들을 부존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시장기구 등을 통해 이들 부존자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를 가격으로 볼 수 있다.

소득분배 구조란 어떤 경제에서 주어진 가격과 부존자원의 분포가 특정한 지표를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이나 부존자원 중 어느 하나라도 변하면 전체적인 소득분배 구조도 함께 변하게 된다.

진술하였듯이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격차가 상당히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일부는 가격요소의 변화에 의해, 일부는 부존자원의 변화에 의해 그러한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대응하여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함에 있어 우리는 흔히 가격요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격정책의 대표적인 예이다²⁾.

그동안 분배정책 수단으로서 주로 부존자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³⁾. 본 연구는 주로 부존자원의 변화가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소득분배 연구의 틀을 확장하고 보다 현실성 높은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엄격히 말하면 조세정책도 가격과 부존자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자에 대한 영향이 후자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례로 소득세 부과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전형적으로 가격요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득분배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노동공급 등과 같이 경제행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정책을 순수한 가격정책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다만 전자의 효과가 후자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세정책은 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하지 않다.

3) 성명재(2001)와 박찬용·강석훈·김태완(2002) 등의 연구에서는 부존자원의 변화가 소득분배 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즉 각 구성원들의 구성비라는 부존자원이 변화하였을 경우에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의 연구는 아직 일부에 국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소득분배 관련 기존의 연구성과

경제개발 이래 현재까지 소득분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정책담당자는 물론이고 학계의 연구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수출산업 및 수입 대체산업 육성이라는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로서 정책지원을 많이 받은 부문의 소득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그렇지 못한 부문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균형 성장의 결과로서 경제의 한 부분에서만 소득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경제 전체적으로는 분배격차가 극심하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경제개발 초기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현재처럼 높지 않았고 수혜 계층의 범위도 산업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노동소득의 분배격차 역시 매우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분배문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3저 호황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대졸자들이 양산되면서 학력수준이 상승하였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지는 등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던 성장의 과실 분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소득증대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간 상대소득 격차가 축소되었으며, 상대적인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드는 듯하였다.

그러나 1997~1998년의 경제위기를 맞아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득분배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산업구조 변화를 초래하였고, 대외개방의 가속화와 세계화의 급진전, 무한경쟁의 가속화 등 새로운 환경이 전개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

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개발·수립·시행에 각계의 관심이 크게 증폭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학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소득분배와 관련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은 현진권·강석훈(1998), 정광수(2000), 정진호 외(2001), 성명재(2002A,B), 유경준·김대일(2003), 유경준 외(2004)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경제위기를 전후한 기간을 대상으로 소득분배 격차의 변화추이와 원인, 가구유형별 분배 특성의 변화,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학문적으로는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김진영·박창균(2001)과 김진영(2002)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산구성의 변화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을 자산분배로까지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성명재(2001)와 박찬용·강석훈·김대완(2002)의 연구에서는 소득분배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의 소득분배 구조가 어떤 요인에 의해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강석훈·박찬용(2003)의 연구에서는 소득분배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득-소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의 분석방법론상의 공과를 논하여 소득분배 연구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다.

김종면·성명재(2003)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방법론과 달리 소득분포 자체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소득분배 상태를 매우 단순한 형태의 지표로서 모두 표현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즉, 그들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분포가 자연대수 정규분포를 따르며, 그러한 특성은

경제위기라는 극히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시계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의 평균과 분산이라는 2개의 모수로 모든 소득분포의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평균과 분산에 대한 정보만 추정이 가능하다면 미래의 소득분배 상태는 물론이고 각종 재분배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 예측·분석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위의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분배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전체 가구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의 양대 가구유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은 소득분배 구조의 추이 변화를 분석하고, 개괄적인 측면에서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방향에 대한 예측·분석을 통해 소득격차 변화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책대응 방향 모색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선행 연구에서는 소득분배 구조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개발단계에서는 노동공급 양상의 변화에 의한 소득획득 형태별(또는 맞벌이 여부별), 산업별,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추이의 변화추이와 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정책대안 개발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각 부문별 발전속도와 산업 구조 개편 등과 같이 부문별로 성장속도와 분배구조 변화추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 차이를 무시하고 있어 좀더 구체적인 정책방안 모색에 어려움이 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범위를 세분화하여 가구의 노동공급 양상 및 부문별 및 부문간, 가구유형별, 그리고 교육수준별로 소득분배 구조를 분석·파악함으로써 각 부문별 소득분배 동향과

변화추이, 변화요인 등을 미시적으로 좀더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정부정책 대안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⁴⁾.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분석방법과 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득불평등도 지수와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를 소개한다. 제III장에서는 최근의 소득분배 변화추이를 살펴보면서 가구유형별·연령별 가구원수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를 고찰해 본다. 아울러 소득을 추정하는 대상기간의 장단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니계수를 분석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제IV장에서는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와 특징을 살펴보면서 정책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제V장에서는 최근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맞벌이가구의 확산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이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서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제VI장에서는 산업부문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와 특징 및 부문간 소득세 부담의 격차 문제 등을 짚어보면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제VII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정책시사점과 향후 보완과제 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본문에 소개된 각종 통계지수들에 대한 통계적 특성과 본문에 소개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소개한다.

4) 직종별 소득분배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 보았으나 직종별로 소득분배 구조의 특징적인 차이가 미미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직종별 소득분배 구조는 분석범위에서 제외하였다.

II. 연구의 목적과 분석방법

본장에서는 본 연구가 추구하고 있는 연구의 범위와 목적을 규정하고, 분석방법론과 분석자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가구유형별·교육수준별·맞벌이여부·산업별 소득분배 구조를 고찰해 봄으로써 소득분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세계화·국제화·개방화·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소득분배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1997~1998년의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구조에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대외개방이 일시에 이루어지면서 경쟁이 격화되었으며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였다. 특히 중국경제가 고도 성장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 부문의 쇠퇴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전통산업과 신흥산업간에 명암이 엇갈리면서 양자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부문별 성장 또는 쇠퇴 양상을 비대칭적으로 나타내면서 소득분배 구조도 부문별로 매우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최근의 경기 양극화, 즉 사상 최대의 수출 호황과 극심한 내수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구조와 성장동력의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특이한 현상들이다.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는 산업별로 변화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이 최근의 경제진행 상황을 놓고 보면, 부문별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도 부문별·부문간 분배구조의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의 소득분배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제반 여건의 변화가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고찰함으로써 각 부문별 소득격차와 부문간 소득격차의 변화추이의 흐름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전체적인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가 부문간 소득격차의 확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문내 격차의 확대에 의한 것인지 또는 부문간 구성비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문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각종 재분배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과 연구의 주요 내용

가. 분석의 범위와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소득·소비통계와 관련된 각종 미시서베이자료를 기본축으로 하여 가구유형, 산업 또는 교육수준별로 관찰대상군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소득분포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가구유형·교육수준·맞벌이 여부·산업부문·연령 등의 기준에 따라 관찰대상군을 구분하고 각각의 관찰대상군별로 소득분배 구조의 특성을 분석

하고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를 추적한다.

미시서베이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가구유형별, 교육수준별, 맞벌이 여부, 산업별(또는 업종별), 연령별 등으로 분류하여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각에 대한 소득분배 구조의 특성을 밝히고 변화추이를 토대로 향후의 변화방향을 예측한다.

위와 같이 부문별로 분석적인 연구방법을 택함으로써 기존의 총괄적인 분석에서는 포착할 수 없었던 분배구조의 양상을 파악하고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자 한다.

나. 기대효과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전문화·다양화 추세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에 따라 부문별 소득분배 구조도 부문별로 서로 상이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이 부문별 특성을 무시할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의 역할이 약화되고 분배의 정의 실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교육수준의 상승, 맞벌이 증가, 핵가족화 등과 같은 소득분배 구조와 관련된 부존자원의 구성 변화에 의한 효과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소득분배 구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문별·교육수준별·맞벌이 유형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을 분류하여 분석하고 각종 재분배정책의 실효성을 추정한다면, 적절한 소득재분배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불평등도 지수: 지니계수

가. 지니계수의 정의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수 중 하나로서, 45도 직선 아래의 삼각형 면적에서, 45도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의 비중을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1과 0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구조가 좀더 불균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구조가 좀더 균등해진다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에 대한 이론적·사전적 측면에서의 정의는 위와 같이 정의되지만 실제로 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추정공식이 사용된다.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자료를 오름차순(in ascending order)으로 재정리하자. 지니계수에 대한 대표적인 공식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Gini} &= \frac{2}{\mu N^2} \sum_{k=1}^N k \cdot y_k - \frac{N+1}{N} = \frac{2\text{Cov}(y_k, \frac{k}{N})}{\mu} \\ &= \frac{\frac{2}{N} \sum_{k=1}^N (y - \mu) \left(\frac{k}{N} - \frac{1}{N^2} \sum_{k=1}^N k \right)}{\mu} \end{aligned}$$

단, μ 는 전체소득평균, N 은 표본의 크기, y_k 는 재정리된 자료에서의 k 번째 관측치(observation)의 소득을 나타낸다. 상기의 공식은 OECD의 Burniaux et al(1998)의 연구에 의해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니계수 산출공식은 표본이 무작위추출(random sample)되었을 경우에만 국한된다. 만약 표본이 층화무작위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되었다면 변형된 공식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Milanovic(2001)의 연구에서는 다음의 공식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text{Gini} = \frac{1}{\mu} \sum_{i=1}^N \sum_{j>i}^N (y_j - y_i) p_i p_j$$

단, 위에서와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자료를 재배열한다. p_i 는 i 번째 표본관측치의 추출가중치를 나타낸다. 그런데 위의 식 외에도 가중치를 고려한 지니계수 추정을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

$$\text{Gini} = \frac{\sum_{i=1}^N w_i \cdot cw_{y_i}}{\sum_{i=1}^N w_i \cdot cw_i}$$

단, w_i , cw_i , cw_{y_i} 는 각각 i 번째 표본의 추출 가중치, 누적가중치, 누적가중소득비중을 나타내며, cw_i , cw_{y_i} 는 각각 $cw_i = \sum_{j=1}^i w_j$, $cw_{y_i} = \frac{\sum_{j=1}^i w_j \cdot y_j}{\sum_{j=1}^N w_j \cdot y_j}$ 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 식은 모두 45도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격자형(사각형)의 형태로 추정하기 때문에 미세하나마 오차를 수반한다. 이러한 오차는 다음과 같이 지니계수 추정공식을 수정함으로써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Gini} &= \left\{ \frac{1}{2} - \sum_{i=1}^N \frac{(cv_{i-1} + cv_i)}{2} w_i \right\} \div 0.5 \\ &= 1 - \sum_{i=1}^N (cv_{i-1} + cv_i) w_i \end{aligned}$$

단, cv 는 누적소득점유비 벡터를 나타낸다. $cv_0 = 0$ 이다.

우리는 흔히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연구자에 따라 서로 상이한 지니계수 값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연구방법이나 자료 가공 방법 등에 따라서도 추정치의 값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공식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상기의 공식들은 지니계수에 대한 이론적 정의로부터 출발하여 설정되어 동일한 대상을 추정하는 공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주어진 표본하에서 각기 다른 값을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어떤 공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추정치의 값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계산상의 오차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이 차이조차 표본의 크기가 무한대로 갈수록 0에 수렴하여 점근적으로 일치(consistent)하게 된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본 연구에서는 위의 공식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시된 공식을 사용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한다.

나. 지니계수의 분해와 Q지수

지니계수는 어떤 집단이나 사회, 국가 등을 대상으로 소득분배 상태를 측정(measure)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기본적으로 지니계수는 각 개개인의 상대소득 분배상태를 토대로 산출된다. 그러므로 지니계수는 각 구성원의 소득분포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 개인은 주어진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소득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다른 개인들과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이나 특성에 의존하여 변화하게 되는 경우라면 각 집단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의 차이 또는 집단간 구성비의 변화 등에 따라서도 지니계수가 변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요인별 분석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지니계수가 변한다고 할 때 그러한

변화가 어떤 요소의 변화에 의해 초래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소득분배 동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각 개인이 특정한 특성을 보유하였거나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모집단을 나누어서 분할(partition)을 이루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분할은 성별, 연령별 집단, 거주지역, 가구유형,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나 직업군, 학력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모집단을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동일한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대소득 격차와 각 집단이나 특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대소득 격차, 그리고 여타의 다른 특성에 의한 상대소득 격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소득분배 구조를 구성집단이나 구성요소별로 분해하여 분석할 수 있으므로 학문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바램은 지니계수의 정의(공식)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Pyatt(1976) 분해(decomposition)이다. Pyatt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지니계수를 분해하였다. 먼저 각 집단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집단자료를 재배열한다.

$$\begin{aligned} \text{Gini} &= \sum_{s=1}^k G_s p_s \pi_s + \sum_{s=1}^k \sum_{t>s}^k \left(\frac{y_t - y_s}{y_s} \right) \pi_s p_t + L \\ &= \sum_{s=1}^k G_s p_s \pi_s + \frac{1}{\mu} \sum_{s=1}^k \sum_{t>s}^k (y_t - y_s) p_s p_t + L \end{aligned}$$

여기서, y 는 소득, G_s 는 s 번째 집단($s=1, 2, \dots, k$)의 지니계수, π_s 는 s 번째 집단의 소득비중, p_s 는 s 번째 집단의 인구비중, μ 는 소득의 전체 평균을 나타낸다.

Pyatt는 위의 분해식에서 세 가지 항은 각각 집단내 요소(within-group component), 집단간 요소(between-group

component), 중복요소(overlapping component)라고 칭하였다. 집단내 요소는 소득비중을 가중치로 계산한 각 소집단 지니계수의 가중평균, 집단간 요소는 집단간 평균소득 격차에 따른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중복요소는, 지니계수가 앞의 두 가지 요소로 정확히 분해되지 않는 나머지(residual)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집단간의 중복성 또는 동질성을 나타낸다. 세 번째 항은 전체 지니계수로부터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차감한 후의 나머지(residual)로 구해진다.

Yitzahki(1994)도 Pyatt 분해와 유사하게 지니계수를 세 가지 항으로 분해하여 표현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셋째 항이 나머지 항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식과 같이 명시적인 항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Gini = \sum G_i w_i + \frac{2Cov(\bar{y}, \bar{F})}{\mu} + \sum_i \pi_i G_i Q_i (P_i - 1)$$

단, 자료는 각 집단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재배열되었으며, G_i , π_i , Q_i , w_i 는 각각 i 번째 그룹의 지니계수, 소득비중, Q 지수, 인구비중을 나타낸다. \bar{y} 와 \bar{F} 는 각각 i 번째 그룹의 소득비중과 상대누적위계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상대누적위계수란 i 번째 그룹의 표본추출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식에서 첫 번째 항은 그룹내의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그룹내 지니(within group gini, 또는 집단내 요소), 두 번째 항은 그룹간의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그룹간 지니(between group gini, 또는 집단간 요소), 세 번째 항은 계층화도(stratification term, 또는 계층화 요소)를 나타낸다. 이 가운데 세 번째 항에 나타난 Q_i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Q_i = \frac{Cov_i[(F_i - F_{Ni}), y]}{Cov_i(F_i, y)}$$

단, F_i 는 i 번째 그룹내에서의 (j 번째 관측치의) 상대표본위계수(누적표본확률), F_{Ni} 는 해당 관측치가 i 번째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표본에서의 상대표본위계수(누적표본확률)를 나타내고 y 는 해당 관측치의 소득을 나타낸다. F_s 는 s 번째 집단내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위계수(rank)를 정상화(normalization)한 것으로 누적비의 형태로 나타내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상대위계수를 나타낸다. F_{Ni} 는 i 번째 집단내의 한 개인을 대상으로 i 번째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단내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상대위계수, \bar{F} 는 각 집단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i 번째 집단의 상대위계수, \bar{y} 는 i 번째 집단의 소득평균을 나타낸다.

Pyatt 분해에서와 마찬가지로 Yitzahki 분해의 집단내 요소는 소득비중 기준의 각 소집단 지니계수의 가중평균, 집단간 요소는 집단간 평균소득 격차의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단, Yitzahki 분해의 집단간 요소는 Pyatt 분해의 집단간 요소보다 그 값이 작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층화 요소는 모집단 가운데 각 집단의 계층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집단내 요소와 인구비를 가중치로 사용한 Q지수(Q index)의 가중평균값이다.

개념상 Yitzahki 분해에서의 집단내 요소와 집단간 요소는 Pyatt 분해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일치시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불평등도 지수: SCV, MLD, Atkinson 지수

소득분배를 논함에 있어서는 지니계수와 함께 자승변이계수(SCV; Squared Coefficient of Variation), 평균편이계수(MLD; Mean Log-Deviation), Atkinson지수 등이 소득불평등지수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Burniaux et al(1998)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V

와 MLD, Atkinson 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CV = \frac{\text{var}(W_k)}{\mu^2} = \frac{\frac{1}{n} \sum_k (W_k - \mu)^2}{\mu^2}$$

$$MLD = \frac{\sum_k \log\left(\frac{\mu}{W_k}\right)}{n}$$

$$\text{Atkinson} = 1 - \left[\frac{1}{n} \sum_k \left(\frac{W_k}{\mu}\right)^{1-a} \right]^{\frac{1}{1-a}}$$

단, a 는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매개변수이다. a 는 불평등회피도라고 하며 0에서 무한대까지의 값($0 < a < \infty$)을 가진다. a 의 값이 커질수록 저소득계층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OECD의 Burniaux et al(1998)에서는 $a=0.5$ 를 사용하였다.

지니계수(G)와 Atkinson 지수(A)는 0과 1 사이, SCV는 0과 무한대 사이, MLD는 0과 $(1+\log(100))\log(\mu)$ 사이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변화에도 각 지표에 따른 불평등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SCV, MLD, Atkinson 지수 모두 각기 서로 다른 값을 지닌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함에 있어 절대수준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이들 지수의 값이 지니계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핵심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니계수만을 사용하고 상기 불평등지수는 본문에 설명하지 않았다.

5. 분석자료

가. 분석자료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가구유형별·산업부문별·직종별·연령별 소득분배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도시가계조사의 원시자료를 근간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의 원시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도시가계조사가 시행된 것은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으나 원시자료로서 신뢰할 만한 수준의 전산파일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은 1982년부터의 자료이다. 따라서 2003년까지 모두 22개년간의 자료가 이용 가능하다⁵⁾.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1991년과 1996년, 2000년을 대상으로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연간자료로서의 소득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1996년과 2000년의 두 해에 불과하다. 한국노동패널자료는 1998년부터 자료가 구축·제공되고 있다.

도시가계조사자료는 기본적으로 매월 피조사대상가구가 일정한 형식의 가계부, 즉 조사서를 기록·작성한 것을 토대로 자료가 작성된다. 따라서 수집한 정보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탈루하는

5) 2003년부터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조사대상의 범위가 도시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자료의 명칭도 2003년부터 가계조사로 개칭되었다. 2002년분 도시가계조사자료까지는 (취업)근로자가구의 경우 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정보가 모두 제공되었지만,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에 대해서는 소비지출 정보만 제공되었다. 그러나 2003년도분 도시가계조사자료부터는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에 대해서도 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2003년도 자료 중 읍·면지역 자료 및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의 소득 정보는 완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2005년 5월에 가서야 완전히 공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2003년분 자료도 종래와 같이 2인 이상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 가계조사자료라고 하더라도 2인 이상의 도시지역 거주 가구에 한정됨에 유의하기 바란다.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시에도 소득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피조사자의 소득 과소보고 등에 따라 실제와 달리 부정확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취업)근로자가구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었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연간소득의 경우에는 위와 달리 일회성 면접·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자료가 구축되었다.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포괄범위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로서 농어가 등은 제외하고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농어가 등 일부 유형의 가구를 제외하고는 읍·면지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자료의 포괄범위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도시가계조사자료의 중간 정도이다.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할 때 표본포괄범위가 가장 넓어 가장 대표성이 높은 자료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이다. 반면에 자료의 구축방법 및 그에 따른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도시가계조사자료가 우월하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한국노동패널자료는 구축되어 있는 자료기간이 짧은 반면에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에는 1982년부터의 원시자료가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추세분석을 위해서는 도시가계조사자료가 우월하다. 가구유형별·산업별·교육수준별·직종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소득분배 구조를 예측하고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해서는 추세과약이 우선시된다.

상기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주 자료로 사용하고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한국노동패널자료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가공

진술한 바와 같이,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농어가 등은 제외된다. 도시가계 조사자료에서는 대상 가구를 유형별로 (취업)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무직가구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도시가계조사자료는 크게 가구번호와 가구의 인적 구성과 특성, 취업 여부 등에 대한 정보와, 소득 관련 통계 및 지출 관련 통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자료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제공되지만 무직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경우에는 이 중 소득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에는 정보자료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의 포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활용도가 제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유형별로 소비-소득간의 상관관계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기본적으로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소득함수 또는 역소비함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의 소득을 추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⁶⁾. 구체적으로는 선행 연구, 그 중에서도 성명재(2001, 2002A,B)에서 채택한 방법을 수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강석훈·박찬용(2003)의 연구에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

상기 연구에서는 역소비함수의 형태를 선형구조로 가정하였으며 설명변수의 차수는 1차로 하였다.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의 실제 소득(Y)은 평균소득추정치(\hat{Y})와 추정오차($\hat{\epsilon}$)의 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불평등도는 \hat{Y} 의 소득불평등도와 $\hat{\epsilon}$ 의 소득불평등도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실제소득의 분산은 \hat{Y} 의 분산과 $\hat{\epsilon}$ 의 분산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실제소득의 소득불평등도를 알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추정치 \hat{Y} 뿐만 아니라 추정오

6)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소비관계가 동일하다는 가정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초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차 \hat{c} 까지도 함께 포괄해야 한다. 그런데 성명재(2001, 2002A, B)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모두 \hat{c} 만으로 실제 소득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hat{c} 에만 의존하게 되면 상대소득 격차를 나타낼 때 실제소득 Y 에 대한 소득불평등도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명재(2001, 2002A, B)의 연구에서 채택한 바를 수용함으로써 위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한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월별조사자료를 분기별로 묶어서 제공하는데 각 가구별로 연간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구별로 월별자료를 취합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사자료의 누락 등에 의해 특정한 달이나 분기의 자료가 모두 빠져 있는(missing) 경우에는 자료의 계절성(seasonality)으로 인해 나머지 분기의 자료만으로는 일치성(consistency)을 유지할 수 있는 연간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 만약 자료의 누락으로 인해 그러한 표본관측치를 불가피하게 분석표본에서 제외한다면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절성과 선택편의는 모두 분석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일치분석(consistent estimation)을 위해서는 이들 편이의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성명재(2002B)와 Sung(2002)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가계조사자료를 각 가구별로 묶어서 연간자료화하는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계절성과 선택편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일치분석을 위해 근린추정법(nearest neighbor estimation)을 이용하여 계절성과 선택편의를 제거하였다. 본 연구도 이들 선행 연구에서의 방법론을 채택하여 계절편의 및 선택편의를 제거하고 연간단위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Ⅲ.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본장에서는 가구유형별·연령별·가구원수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분기소득 지니계수와 연간소득 지니계수간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한다.

1.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변화추이

본 연구에서 가구유형은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로 대별한다. 논의의 편의상 근로자가구에는 무직가구(퇴직가구 등을 포함)와 불완전고용가구 등을 포함하였다.

가. 소득분포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가구당 총소득은 1982년 503만원에서 2003년에는 3,535만원으로 7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가구유형별로는 근로자가구보다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수준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Ⅲ-1> 참조).

근로자가구 내에서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고용상태가 지속된 가구(완전고용가구)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는 매우 작지만, 조사대상 기간 동안 고용상태가 부분적으로만 지속된 가구(부분고용가구)의 경우에는 무직가구보다 오히려 소득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소 배치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직가구는 완전실업가구뿐만 아니라 은퇴가구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등 가구구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Ⅲ.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63

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무직가구 중에서는 은퇴 등으로 인해 비록 근로소득수준은 매우 낮지만 기타의 자산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⁷⁾.

<표 III-1> 가구유형별 평균소득 추이

(단위: 만원)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계	완전취업	부분취업	완전+부분	부분+무직	무직	
1982	395	385	392	311	386	351	374	417
1983	433	421	429	363	425	379	388	461
1984	482	465	473	338	466	422	452	522
1985	503	493	505	363	498	414	440	528
1986	574	559	574	421	566	475	502	607
1987	673	649	659	517	654	577	598	738
1988	805	775	783	656	780	702	714	883
1989	981	948	957	799	950	872	918	1,058
1990	1,166	1,127	1,160	865	1,137	936	1,009	1,251
1991	1,413	1,374	1,396	1,213	1,385	1,226	1,236	1,498
1992	1,644	1,611	1,647	1,340	1,631	1,348	1,353	1,715
1993	1,777	1,725	1,776	1,239	1,748	1,349	1,425	1,896
1994	2,021	1,979	2,066	1,500	2,015	1,536	1,572	2,114
1995	2,300	2,248	2,330	1,737	2,280	1,818	1,893	2,410
1996	2,575	2,537	2,631	2,090	2,583	2,076	2,063	2,649
1997	2,630	2,508	2,815	1,487	2,699	1,068	725	2,876
1998	2,304	2,167	2,623	1,421	2,386	1,063	537	2,555
1999	2,571	2,517	2,745	2,060	2,619	2,011	1,961	2,675
2000	2,902	2,798	3,013	2,179	2,883	2,290	2,376	3,097
2001	3,038	2,966	3,221	2,312	3,087	2,318	2,323	3,168
2002	3,259	3,151	3,377	2,476	3,287	2,477	2,478	3,472
2003	3,535	3,484	3,794	2,680	3,604	2,681	2,682	3,641

7) 이는 무직가구를 보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그 이유가 설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도시가계조사자료에는 은퇴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이 어렵다.

지난 20여년간 가구유형별 가구구성의 변화추이를 요약하면 자영업자가구는 30% 내외에서 등락을 보였으며 근로자가구는 취업근로자가구와 무직가구로 양분할 경우 상당히 크게 변화하였다. 이는 실업률과 경기여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III-2> 참조).

<표 III-2> 가구유형별 가구구성비 변화추이(도시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

	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근로자계 (A)	무직(B)	부분취업 (C)	완전취업 (D)	C+D	B+C	B/A		
1982	67.70	6.67	4.00	56.94	61.03	10.75	9.85	32.30	100
1983	68.38	7.39	3.88	57.11	60.99	11.28	10.81	31.62	100
1984	70.18	7.75	2.91	59.52	62.43	10.66	11.05	29.82	100
1985	71.50	6.56	3.56	61.38	64.95	10.12	9.17	28.50	100
1986	70.78	6.57	3.47	60.74	64.21	10.04	9.28	29.22	100
1987	72.65	6.49	2.05	64.11	66.16	8.54	8.94	27.35	100
1988	72.40	5.23	1.43	65.74	67.17	6.66	7.22	27.60	100
1989	67.00	5.28	2.56	59.15	61.72	7.85	7.89	33.00	100
1990	65.31	4.15	3.73	57.43	61.16	7.88	6.35	34.69	100
1991	65.38	4.68	3.33	57.38	60.71	8.00	7.15	34.62	100
1992	65.49	4.16	2.94	58.39	61.33	7.10	6.35	34.52	100
1993	68.74	4.83	3.06	60.85	63.91	7.89	7.03	31.26	100
1994	67.16	5.06	5.15	56.95	62.10	10.21	7.54	32.84	100
1995	68.04	5.58	4.85	57.61	62.46	10.44	8.21	31.96	100
1996	66.88	6.18	4.89	55.81	60.70	11.07	9.24	33.12	100
1997	70.19	11.29	7.28	51.62	58.90	18.57	16.09	29.81	100
1998	67.95	12.73	13.59	41.63	55.22	26.32	18.74	32.05	100
1999	67.65	11.90	12.16	43.60	55.75	24.05	17.58	32.35	100
2000	65.12	10.57	7.55	47.01	54.56	18.11	16.23	34.88	100
2001	65.17	10.64	7.08	47.45	54.53	17.72	16.33	34.83	100
2002	65.64	10.62	4.86	50.15	55.02	15.48	16.18	34.36	100
2003	67.51	8.16	9.39	49.95	59.35	17.55	12.09	32.49	100

나. 소득분배 구조 :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래 19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니계수가 하락추세를 보여 상대소득 격차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에는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0.28678이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 1992년에는 0.24147로 낮아졌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저점부근에서 안정추세를 보이면서 1995년에 0.24280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후 우리나라의 상대소득 격차는 확대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경제위기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초과상승(overshooting) 현상을 보였다⁸⁾. 즉, 1996년에 지니계수가 0.24685로 소폭 상승한 이후 1998년의 경제위기에는 0.31121로 급상승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소의 등락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0.27~0.28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8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1990년대 중반이후 지니계수가 추세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의 기간 동안 지니계수가 하락추세를 보였던 데에는 경제의 성숙⁹⁾, 노동소득 분배율의 상승, 교육수준의 상향평준화¹⁰⁾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니계수가 상승추세로 반전된 데에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몰락

8) 이런 모습은 <표 III-3>의 통계청 추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9)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격차(지니계수)간에는 역U자 형태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쿠즈네츠 가설에 따르면 경제발전 초기에는 지니계수가 점차 확대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 지니계수가 작아진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경제의 성숙'이라 함은 경제발전이 본 궤도에 올라 안정화되는 시기, 특히 쿠즈네츠의 가설과 관련해서는 지니계수가 하락하는 시기를 지칭한다.

10) 대학 이상 학력의 지니계수가 그 이하 학력의 지니계수보다 작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학력화는 전체 지니계수를 낮춘다. 최근에는 시계열적으로 각 학력별 개별 지니계수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학력화로 인해 그나마 지니계수의 상승추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는 고소득층의 괄목할 만한 소득증가 현상 등이 기간에 따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의 급변 등에 따라 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장기실업 추세가 확산되었으며, 취업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등 고용상태가 불안한 비율이 높아지는 등 극빈층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둔화 또는 몰락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대소득 격차 확대를 주도한 한 요인이다. 반면에 IT 및 금융산업 등에서 소수의 고소득층의 경제적 도약 또한 이 기간 동안 상대소득격차를 확대시킨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에는 지니계수가 다소 등락을 거듭하면서 횡보, 즉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전반적인 추세를 논하자면 소득분배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III-1]과 <표 III-3> 참조)¹¹⁾.

본 연구에서 추정한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절대수준이 통계청 등을 비롯한 다른 연구보다 높다¹²⁾. 이는 상당부분 도시가계조사의 원시자료로부터 연간소득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분석방법상의 차이에 기인한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는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추정하는 데 비해 통계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분기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한다. 그런데 통계자료의 특성상 연간지니는 분기지니보다 낮은 값을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장의 제4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구의 구성은 매우 이질적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구를 취업근로자가구와 무직가구의 매우 이질적인 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묶고 있어 자영업자가구보다 근로자가구 전체의 지니계수가 더 크게 추정되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12) 본 연구의 지니계수의 절대수준은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상당수의 선진국보다 소득분배 격차가 작은 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분석방법의 차이에 의한 부분도 있다. 국가별로 자료축적 및 분석방법이 상이한 만큼 그러한 차이에 대한 조정없이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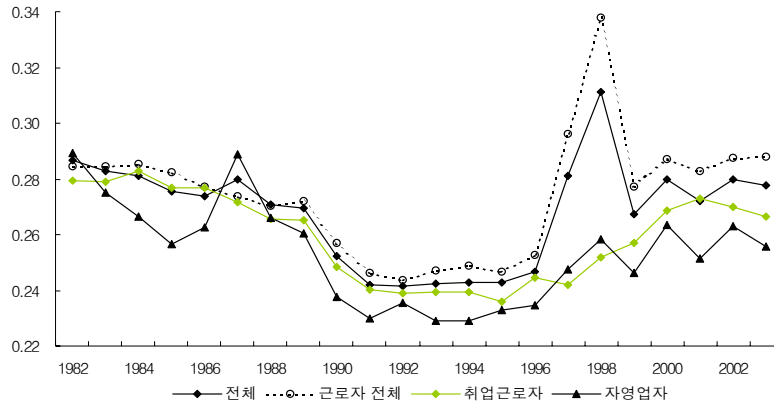
Ⅲ.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67

<표 III-3> 가구유형별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도시가 구 전체	근로자가구					자영업 자	실업률 (%)	경제활 동참가 율(%)	통계청 (근로자)	
		전체 (A+B+C)	무직+부 분취업 (A+B)	완전무 직(A)	부분취 업(B)	취업근 로자(C)				A	B
1982	0.28678	0.28444	0.29177	0.30699	0.30731	0.27920	0.28937	4.4	58.6	-	
1983	0.28270	0.28463	0.32379	0.29913	0.30854	0.27879	0.27512	4.1	57.7	-	
1984	0.28109	0.28539	0.29328	0.28661	0.29575	0.28276	0.26641	3.8	55.8	-	
1985	0.27563	0.28258	0.24750	0.31663	0.29893	0.27683	0.25639	4.0	56.6	-	0.3449
1986	0.27368	0.27732	0.21114	0.28011	0.26535	0.27678	0.26253	3.8	57.1	-	
1987	0.27986	0.27383	0.21840	0.29481	0.27845	0.27181	0.28886	3.1	58.3	-	
1988	0.27082	0.27034	0.30486	0.31291	0.31241	0.26569	0.26583	2.5	58.5	-	0.3355
1989	0.26957	0.27185	0.27017	0.34009	0.31780	0.26503	0.26058	2.6	59.6	0.3039	
1990	0.25236	0.25693	0.27199	0.29452	0.28632	0.24819	0.23780	2.4	60.0	0.2948	
1991	0.24189	0.24609	0.24658	0.29475	0.27559	0.24042	0.22973	2.3	60.6	0.2869	
1992	0.24147	0.24379	0.24924	0.26381	0.25806	0.23900	0.23529	2.4	60.9	0.2836	
1993	0.24242	0.24698	0.23341	0.28771	0.26908	0.23922	0.22883	2.8	61.1	0.2817	0.3097
1994	0.24293	0.24869	0.23553	0.27579	0.25729	0.23947	0.22901	2.4	61.7	0.2845	
1995	0.24280	0.24674	0.26380	0.29092	0.27918	0.23579	0.23308	2.0	61.9	0.2837	
1996	0.24685	0.25258	0.26030	0.27787	0.26979	0.24448	0.23473	2.0	62.0	0.2907	0.2954
1997	0.28102	0.29621	0.26396	0.31310	0.34519	0.24209	0.24737	2.6	62.2	0.2830	
1998	0.31121	0.33777	0.32365	0.27659	0.38836	0.25163	0.25824	6.8	60.7	0.3157	
1999	0.26726	0.27731	0.28898	0.29403	0.29181	0.25700	0.24630	6.3	60.5	0.3204	
2000	0.27988	0.28718	0.30007	0.31084	0.30803	0.26878	0.26323	4.1	60.7	0.317	0.351
2001	0.27222	0.28288	0.24743	0.29012	0.27242	0.27276	0.25156	3.7	60.8	0.319	
2002	0.27997	0.28733	0.28634	0.31623	0.30675	0.26991	0.26314	3.1	61.5	0.312	
2003	0.27747	0.28777	0.28261	0.33299	0.30688	0.26626	0.25549	3.4	61.4	0.306	

주: 1. 무직가구는 각 연도의 4개 분기 모두 무직인 경우, 부분취업은 4개 분기 중 1~3개 분기에 취업하고 나머지 분기는 무직인 경우, 취업근로자는 4개 분기 모두 취업가구인 경우
 2. 통계청 A의 지니계수는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각 분기별 소득분위의 소득을 분위별로 합산하여 연간소득분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추정된 것임.
 3. 통계청 B의 지니계수 중 1985년, 1988년, 1993년은 사회통계조사에 나타난 전국의 10분위 소득점유비를 기초로 추정한 값임. 1996년과 2000년은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 나타난 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임. 전체 가구의 경우에는 1996년과 2000년에 각각 0.290과 0.351이며, 사업자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0.293과 0.389임.

[그림 III-1]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2. 연령별 소득분배 변화추이

가. 소득분포

<표 III-4>는 가구주의 연령별로 도시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소득 분포를 나타낸다. 총소득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40대 또는 50대에서 최고점에 도달하였다가 그 이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3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대 후반 가구의 평균소득은 2,714만원이고 이후 연령이 상승할수록 점차 평균소득은 증가하기 시작하여 30대 후반에는 3,858만원에 이르고 40대 후반에는 약 4,230만원으로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5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60세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2,757만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기본적으로 지난 20여년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997~1998년의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모든 연령층의 평균소득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20대 초반 이하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소득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

Ⅲ.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69

타났다는 점이다. <표 Ⅲ-4>에서 소득계층별 소득분포의 변화추이를 볼 때, 저소득층, 특히 그 가운데 소득 1~2분위의 최저소득층의 소득감소세가 현저하게 두드러졌는데 이들 소득계층이 연령적으로는 20대 초반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연령층 중 상당히 많은 비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4> 연령별 총소득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연령	~20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1982	233.6	291.7	352.7	380.1	425.8	450.4	455.8	448.8	465.0	300.4
1983	224.0	342.7	383.1	433.7	471.2	485.9	476.5	504.5	439.3	313.8
1984	276.8	390.4	412.9	454.7	521.3	522.3	578.4	582.4	553.0	391.3
1985	289.4	392.1	422.6	467.3	524.3	540.0	564.2	611.1	589.1	382.6
1986	315.5	403.0	475.2	572.1	606.7	634.7	668.3	647.6	636.3	440.4
1987	402.6	502.6	584.2	628.4	688.4	727.8	800.6	836.2	818.5	586.7
1988	400.5	614.2	664.9	729.2	789.2	846.1	889.7	990.9	803.0	736.9
1989	699.9	916.5	945.8	1,053.1	1,196.4	1,321.4	1,349.0	1,433.9	1,407.2	1,142.5
1990	702.3	1,160.9	1,165.7	1,264.1	1,402.6	1,533.3	1,565.6	1,712.3	1,558.9	1,531.5
1991	1,018.3	1,459.7	1,424.9	1,477.3	1,671.5	1,827.0	1,891.4	2,001.1	1,986.4	1,494.4
1992	1,062.7	1,528.8	1,629.3	1,777.7	1,959.4	2,095.4	2,189.4	2,216.9	2,259.1	1,792.6
1993	1,188.3	1,266.8	1,632.0	1,642.2	1,766.2	1,963.4	2,058.7	2,203.2	2,172.8	1,648.2
1994	1,174.2	1,608.6	1,812.9	1,927.6	2,085.6	2,145.1	2,350.1	2,500.7	2,425.4	1,780.1
1995	1,339.7	1,616.3	2,171.1	2,249.0	2,332.1	2,465.3	2,602.1	2,762.4	2,832.8	2,088.2
1996	1,638.3	2,065.0	2,328.0	2,520.0	2,716.6	2,727.8	2,899.8	3,046.4	3,031.8	2,315.2
1997	859.5	1,498.6	2,160.9	2,235.7	2,489.5	2,511.9	2,577.5	2,812.4	2,589.7	1,360.1
1998	532.0	1,186.5	1,779.8	2,116.2	2,082.1	2,224.0	2,390.9	2,276.7	2,076.8	1,122.2
1999	1,313.5	1,626.6	1,870.4	2,250.6	2,356.1	2,486.9	2,662.5	2,559.9	2,340.0	1,784.6
2000	2,320.9	2,310.9	2,550.6	2,844.3	3,202.8	3,251.9	3,297.8	3,500.4	3,127.2	2,582.4
2001	1,899.8	2,016.4	2,685.0	2,946.6	3,219.5	3,382.6	3,559.2	3,575.4	3,321.5	2,593.6
2002	1,626.2	2,201.7	2,910.7	3,265.2	3,563.1	3,683.3	3,717.3	3,809.9	3,673.7	2,667.3
2003	1,865.9	2,714.1	3,083.2	3,434.3	3,858.4	4,099.7	4,229.6	4,119.3	3,869.0	2,7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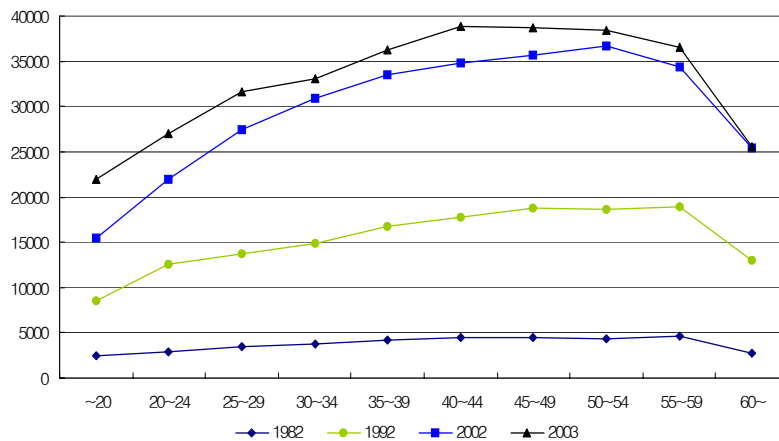
연령별 소득분포의 특징을 요약하면 연령별 소득곡선이 역U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 고소득층일수록 소득확장기가 길고 저소득층일수록 소득확장기가 짧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연령이 상승할수록 상대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생애소득의 흐름을 보면 청년기(또는 시장진입기)에는 소득수준이 낮지만 연령과 경험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다가 장년층에 접어들면서부터 퇴직, 은퇴, 실직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점차 소득이 낮아지는 형태의 역U자 형태의 소득흐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도 이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그림 III-2]에서 보듯이 연령적으로 시장진입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의 평균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져 40대 또는 50대에서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50대 후반 이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2] 연령별 총소득 분포의 변화추이

(단위: 천원)



연령별 소득패턴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고소득층에서는 ‘소득확장기’가 길고 저소득층에서는 ‘소득하강기’가 긴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소득 직종에서 오래 생존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급여수준이 낮은 시장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결과가 횡단면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백분위소득곡선이 동일인의 백분위소득곡선을 나타낸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가 반드시 성립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현 시점에서 찾기는 어렵지만 그럴만한 개연성은 충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3]과 [그림 Ⅲ-4]는 각 연령대별로 소득수준이 동일한 백분위소득자들을 연결한 소득백분위수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백분위소득곡선일수록 비교적 높은 연령대까지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낮은 백분위소득곡선일수록 우상향곡선부분이 짧아지고 우하향하는 부분이 길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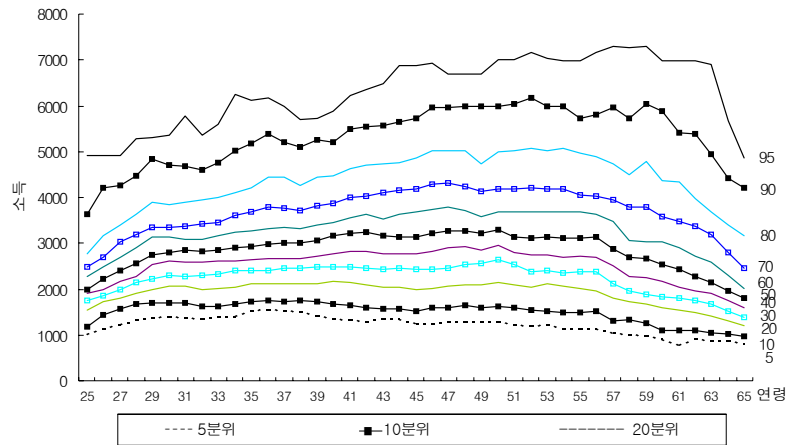
만약 고소득층의 소득확장기가 길어지는 추세가 일생을 두고 지속된다면 생애소득(lifetime income) 분배격차는 경상소득(current income) 분배격차보다 더 커질 개연성을 내포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실제의 상황이라면 부의 분배격차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더 커질 것이므로 향후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문제는 단순히 최저생계 보조 이상의 형평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소득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생애소득에 대한 소득분배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보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위의 논의는 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에서 일단 소득순위

가 결정되면 생애를 통틀어 소득순위가 변동 없이 일정하게 고정된다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강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위에서 제기한 생애소득 분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이 문제는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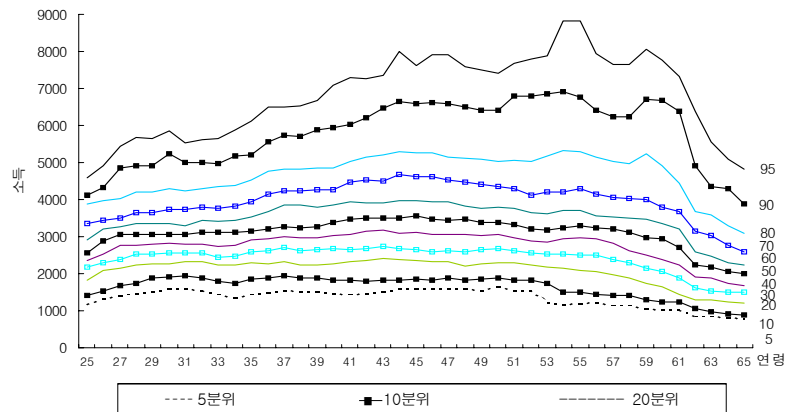
[그림 III-3] 연령별 총소득 백분위수(2002년 기준)

(단위: 만원)



[그림 III-4] 연령별 총소득 백분위수(2003년 기준)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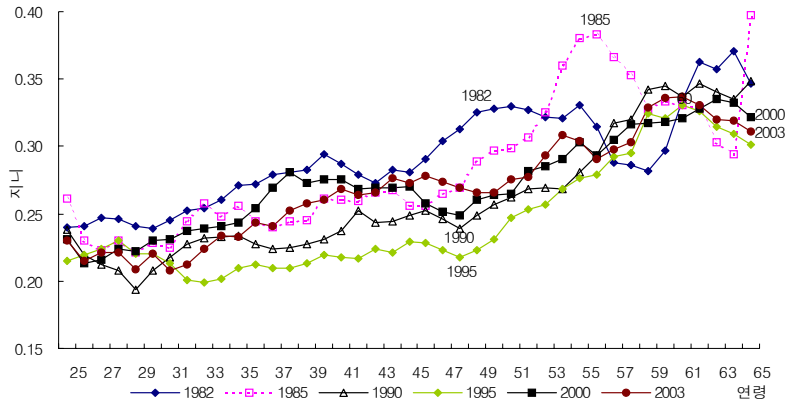
나. 소득분배 구조: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연령별 평균소득은 40~5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각 연령층대별 상대소득 격차를 분석해 본 결과, 상대소득 격차는 중년층 이후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상승할수록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장년층의 경우 비록 절대소득 수준이 점차 낮아지면서 절대소득 격차는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각 구성원 별로는 소득변화의 폭이 매우 크고 비대칭적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니계수가 상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 Ⅲ-5]에서 연령별 지니계수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그림 Ⅲ-6]에서는 연도별로 보더라도 대체로 고연령층의 지니계수가 저연령층의 지니계수보다 상방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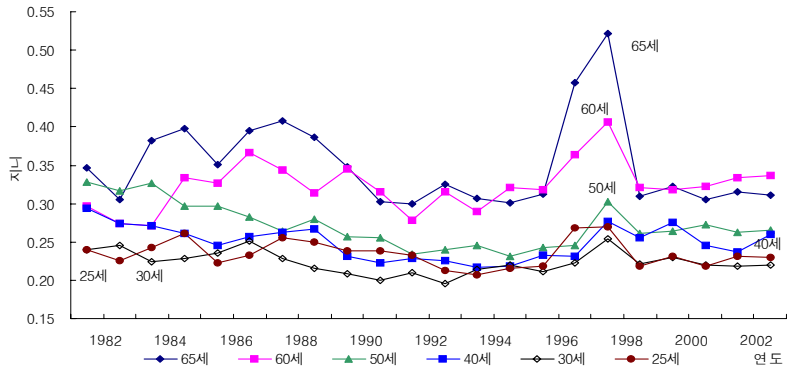
만약 이와 같이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된다면 향후 고령사회에서는 노인복지 문제가 더욱 중요한 사회·경제 현안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13)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지니계수가 큰 값을 가지게 됨은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연령을 설명변수로 하여 지니계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해 보면 더욱 분명하다. 이는 이미 <표 Ⅲ-5>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그림 III-5] 연령별 총소득 지니계수 I



[그림 III-6] 연령별 총소득 지니계수 II



Ⅲ.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75

<표 Ⅲ-5> 연령대별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연령	총소득 지니						
	1982	1985	1990	1995	2001	2002	2003
25	0.240	0.261	0.238	0.215	0.219	0.231	0.230
26	0.241	0.230	0.219	0.219	0.205	0.225	0.215
27	0.247	0.223	0.212	0.224	0.201	0.219	0.221
28	0.246	0.230	0.208	0.230	0.214	0.220	0.221
29	0.241	0.221	0.194	0.220	0.219	0.220	0.209
30	0.239	0.228	0.208	0.220	0.220	0.219	0.220
31	0.245	0.225	0.218	0.213	0.222	0.225	0.208
32	0.252	0.244	0.227	0.201	0.219	0.230	0.212
33	0.254	0.258	0.232	0.199	0.229	0.235	0.224
34	0.260	0.248	0.233	0.202	0.245	0.253	0.234
35	0.271	0.256	0.234	0.210	0.250	0.254	0.233
36	0.272	0.244	0.227	0.212	0.241	0.256	0.243
37	0.279	0.240	0.224	0.210	0.229	0.245	0.241
38	0.281	0.244	0.225	0.210	0.238	0.230	0.252
39	0.283	0.245	0.227	0.213	0.236	0.234	0.258
40	0.294	0.261	0.231	0.219	0.245	0.237	0.260
41	0.287	0.260	0.237	0.218	0.260	0.251	0.268
42	0.279	0.259	0.252	0.217	0.267	0.266	0.264
43	0.273	0.266	0.243	0.224	0.281	0.267	0.266
44	0.283	0.267	0.244	0.221	0.269	0.273	0.276
45	0.281	0.256	0.249	0.229	0.267	0.280	0.273
46	0.291	0.256	0.252	0.228	0.264	0.286	0.278
47	0.304	0.265	0.246	0.223	0.255	0.274	0.274
48	0.313	0.269	0.239	0.218	0.256	0.266	0.269
49	0.325	0.289	0.249	0.223	0.254	0.267	0.266
50	0.328	0.297	0.257	0.231	0.272	0.262	0.266
51	0.330	0.299	0.262	0.247	0.290	0.279	0.275
52	0.327	0.307	0.268	0.253	0.280	0.296	0.277
53	0.322	0.325	0.269	0.257	0.287	0.290	0.293
54	0.321	0.360	0.268	0.268	0.278	0.304	0.308
55	0.331	0.380	0.281	0.276	0.277	0.292	0.304
56	0.315	0.383	0.293	0.279	0.291	0.294	0.291
57	0.288	0.366	0.317	0.292	0.287	0.320	0.298
58	0.286	0.353	0.320	0.295	0.301	0.320	0.303
59	0.282	0.327	0.342	0.324	0.311	0.338	0.329
60	0.297	0.333	0.345	0.321	0.322	0.333	0.336
61	0.334	0.331	0.337	0.331	0.319	0.333	0.337
62	0.363	0.329	0.347	0.326	0.323	0.331	0.331
63	0.357	0.303	0.340	0.315	0.331	0.330	0.320
64	0.371	0.294	0.335	0.309	0.320	0.325	0.319
65	0.347	0.297	0.348	0.301	0.305	0.315	0.311

3. 가구원수별 소득분배 변화추이

가. 가구원수별 표본분포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표 III-6>에 정의된 바와 같다. 분포상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첫째,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4인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대가족 형태의 가구비중이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소수가구의 비중이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료분석대상 기간중 가장 초기인 1982년에도 4인가구의 비중이 약 30%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4인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에 41.4%에 도달한 이후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2년에는 4인 가구에 이어 5인 가구의 비중이 23.4%로 두 번째로 높았다. 뿐만 아니라 3인 가구에는 못 미치지만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대가족 가구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급격히 반전되었다. 2003년 현재 6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약 3.6%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8인 이상의 초대형 가구의 경우 점유비가 1982년 3.79%에서 2003년에는 0.05%로 격감하여 사실상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 반면에 3인 이하의 가구비중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2인 가구의 점유비는 1982년 7.0%에서 2003년에는 19.2%로 대폭 상승하였다¹⁴⁾.

이러한 추세는 핵가족화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14)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구축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약 3.5인 내외이며 추세적으로는 완만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Ⅲ.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77

<표 III-6> 가구원수별 표본가구의 분포

(단위: 가구, %)

가구수	전체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1982	2399	169	392	711	561	328	147	91
1983	2448	218	427	705	540	332	140	86
1984	1754	158	303	539	413	210	80	51
1985	1937	181	339	639	441	215	80	42
1986	2132	197	419	681	466	236	93	40
1987	2095	223	421	700	475	161	90	25
1988	2583	231	562	951	529	207	73	30
1989	3388	316	685	1302	658	297	91	39
1990	2853	257	574	1093	566	246	82	35
1991	2950	260	608	1128	597	247	78	32
1992	3114	286	659	1226	607	242	67	27
1993	3456	402	783	1430	567	182	60	32
1994	3168	391	735	1257	544	150	57	34
1995	3609	473	849	1449	581	172	59	26
1996	3607	525	852	1470	547	144	46	23
1997	3618	558	893	1452	481	162	55	17
1998	3647	533	888	1512	501	151	48	14
1999	3581	552	878	1472	487	141	42	9
2000	4547	792	1074	1908	524	177	59	13
2001	3629	640	965	1436	425	120	32	11
2002	3544	711	943	1347	402	112	20	9
2003	3825	735	964	1544	446	107	27	2
비중	전체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1982	100	7.04	16.34	29.64	23.38	13.67	6.13	3.79
1983	100	8.91	17.44	28.80	22.06	13.56	5.72	3.51
1984	100	9.01	17.27	30.73	23.55	11.97	4.56	2.91
1985	100	9.34	17.50	32.99	22.77	11.10	4.13	2.17
1986	100	9.24	19.65	31.94	21.86	11.07	4.36	1.88
1987	100	10.64	20.10	33.41	22.67	7.68	4.30	1.19
1988	100	8.94	21.76	36.82	20.48	8.01	2.83	1.16
1989	100	9.33	20.22	38.43	19.42	8.77	2.69	1.15
1990	100	9.01	20.12	38.31	19.84	8.62	2.87	1.23
1991	100	8.81	20.61	38.24	20.24	8.37	2.64	1.08
1992	100	9.18	21.16	39.37	19.49	7.77	2.15	0.87
1993	100	11.63	22.66	41.38	16.41	5.27	1.74	0.93
1994	100	12.34	23.20	39.68	17.17	4.73	1.80	1.07
1995	100	13.11	23.52	40.15	16.10	4.77	1.63	0.72
1996	100	14.56	23.62	40.75	15.16	3.99	1.28	0.64
1997	100	15.42	24.68	40.13	13.29	4.48	1.52	0.47
1998	100	14.61	24.35	41.46	13.74	4.14	1.32	0.38
1999	100	15.41	24.52	41.11	13.60	3.94	1.17	0.25
2000	100	17.42	23.62	41.96	11.52	3.89	1.30	0.29
2001	100	17.64	26.59	39.57	11.71	3.31	0.88	0.30
2002	100	20.06	26.61	38.01	11.34	3.16	0.56	0.25
2003	100	19.22	25.20	40.37	11.66	2.80	0.71	0.05

나. 가구원수별 소득분포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7> 참조). 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자수가 많고(<표 III-8> 참조) 따라서 소득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원수와 평균소득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비례관계는 아니다.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평균소득도 증가하기는 하지만 소득의 증가속도는 가구원수의 증가속도보다 느리다. 가구원수가 증가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최소요구 소득수준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필요소득의 증가율이 가구원수의 증가율보다 느리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늘어나더라도 소득 획득을 위한 유인의 증가속도 역시 더디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표 III-7> 참조)¹⁵⁾.

전체 가구 소득평균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가구의 상대소득 배수를 보면 2~3인 가구는 평균에 미달하는 한편 4인 가구는 평균을 다소 상회한다.

가구원수별로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2인 가구가 3인 이상 가구보다 높다. 그러나 3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지니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 2인 가구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2인 가구의 구성이 이질적인 2개 또는 그 이상의 부류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가구원수별 소득분포의 특징을 고찰해 봄으로써 검증해 볼 수 있다(<표 III-10> 참조).

15) 소비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미 근로자가구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구유형간의 소득-소비관계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성립하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보다는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 기본 가정이 위배되거나 또는 사용하는 추정식의 설정오류(specification error)가 있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Ⅲ.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79

<표 III-7> 가구원수별 평균소득 및 전체 평균소득 대비 소득배수의 분포

(단위: 만원, 배)

평균소득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1982	289	325	376	421	465	488	519
1983	302	368	408	467	520	568	530
1984	361	394	475	520	574	633	621
1985	332	424	506	558	564	647	686
1986	410	483	586	613	675	734	831
1987	460	565	680	756	845	851	920
1988	571	658	806	930	973	1,043	1,233
1989	711	840	985	1,117	1,173	1,383	1,360
1990	853	1,005	1,176	1,291	1,398	1,609	1,651
1991	1,077	1,207	1,404	1,612	1,728	1,836	1,980
1992	1,260	1,421	1,650	1,853	2,103	2,144	2,010
1993	1,321	1,625	1,812	2,007	2,092	2,413	2,944
1994	1,475	1,864	2,082	2,267	2,535	2,564	3,305
1995	1,774	2,096	2,381	2,590	2,761	3,191	3,461
1996	1,926	2,372	2,695	2,883	3,329	3,311	4,064
1997	1,791	2,400	2,821	3,101	3,140	3,544	5,186
1998	1,471	2,118	2,466	2,746	3,162	3,143	3,393
1999	1,834	2,369	2,765	2,922	3,220	3,429	4,118
2000	2,201	2,568	3,151	3,418	3,576	3,550	3,727
2001	2,194	2,813	3,326	3,520	3,886	3,862	4,341
2002	2,437	3,170	3,505	3,819	4,225	3,909	3,853
2003	2,476	3,352	3,855	4,341	4,568	4,595	6,183
소득배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1982	0.73	0.82	0.95	1.06	1.18	1.23	1.31
1983	0.70	0.85	0.94	1.08	1.20	1.31	1.22
1984	0.75	0.82	0.98	1.08	1.19	1.31	1.29
1985	0.66	0.84	1.01	1.11	1.12	1.29	1.36
1986	0.71	0.84	1.02	1.07	1.18	1.28	1.45
1987	0.68	0.84	1.01	1.12	1.26	1.26	1.37
1988	0.71	0.82	1.00	1.15	1.21	1.29	1.53
1989	0.72	0.86	1.00	1.14	1.20	1.41	1.39
1990	0.73	0.86	1.01	1.11	1.20	1.38	1.42
1991	0.76	0.85	0.99	1.14	1.22	1.30	1.40
1992	0.77	0.86	1.00	1.13	1.28	1.30	1.22
1993	0.74	0.91	1.02	1.13	1.18	1.36	1.66
1994	0.73	0.92	1.03	1.12	1.25	1.27	1.64
1995	0.77	0.91	1.04	1.13	1.20	1.39	1.50
1996	0.75	0.92	1.05	1.12	1.29	1.29	1.58
1997	0.68	0.91	1.07	1.18	1.19	1.35	1.97
1998	0.64	0.92	1.07	1.19	1.37	1.36	1.47
1999	0.71	0.92	1.08	1.14	1.25	1.33	1.60
2000	0.76	0.89	1.09	1.18	1.23	1.22	1.28
2001	0.72	0.93	1.09	1.16	1.28	1.27	1.43
2002	0.75	0.97	1.08	1.17	1.30	1.20	1.18
2003	0.70	0.95	1.09	1.23	1.29	1.30	1.75

<표 III-8> 가구원수별 취업인 수 분포

(단위: 명)

	2	3	4	5	6	7	8인 이상	평균
1982	0.82	0.98	1.05	1.23	1.30	1.51	1.92	1.16
1983	0.92	0.93	1.07	1.26	1.28	1.68	1.77	1.16
1984	0.96	0.94	1.16	1.29	1.40	1.74	1.74	1.20
1985	0.92	1.03	1.17	1.28	1.43	1.53	1.69	1.20
1986	0.95	1.15	1.21	1.42	1.55	1.8	2.25	1.30
1987	1.09	1.14	1.27	1.53	1.76	2.01	2.00	1.36
1988	1.11	1.21	1.38	1.53	1.83	2.07	2.55	1.42
1989	1.06	1.22	1.39	1.63	1.86	1.92	2.76	1.43
1990	1.04	1.14	1.34	1.59	1.78	2.10	2.26	1.38
1991	1.06	1.18	1.38	1.67	1.90	2.23	2.33	1.44
1992	1.09	1.22	1.38	1.71	1.90	2.21	2.19	1.44
1993	1.03	1.31	1.48	1.69	1.95	2.68	2.76	1.48
1994	1.02	1.32	1.45	1.75	2.05	2.47	3.02	1.47
1995	1.10	1.32	1.48	1.80	1.97	2.49	2.80	1.48
1996	1.07	1.34	1.54	1.86	2.20	2.22	2.97	1.51
1997	1.13	1.42	1.54	1.88	2.06	2.61	2.95	1.54
1998	0.99	1.30	1.44	1.77	1.92	2.44	2.87	1.42
1999	0.88	1.26	1.41	1.68	1.91	2.62	3.28	1.36
2000	1.02	1.29	1.51	1.83	1.97	2.38	2.74	1.44
2001	0.91	1.35	1.53	1.76	2.15	2.27	2.53	1.43
2002	0.97	1.42	1.54	1.83	2.12	2.22	2.49	1.45
2003	0.97	1.43	1.57	1.84	2.25	2.50	53.27	1.47

Ⅲ.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81

<표 Ⅲ-9> 가구원수별 소득 점유비중

(단위: %)

평균소득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1982	7.29	16.73	29.79	22.89	13.76	6.00	3.54
1983	8.82	17.45	29.16	22.00	13.15	5.86	3.56
1984	9.60	17.65	31.14	23.54	10.91	4.29	2.87
1985	9.22	18.20	32.69	22.74	10.91	4.22	2.02
1986	9.63	20.69	31.57	21.42	10.75	4.17	1.78
1987	10.86	20.15	33.46	22.30	7.88	4.13	1.23
1988	8.75	21.59	36.45	20.84	8.34	2.86	1.17
1989	9.60	21.52	38.35	18.64	8.47	2.47	0.95
1990	9.96	21.24	36.93	19.81	8.32	2.54	1.20
1991	9.76	20.97	38.60	19.81	7.48	2.23	1.16
1992	9.72	21.80	39.95	18.74	7.01	1.90	0.88
1993	11.19	23.43	42.39	15.25	5.21	1.68	0.84
1994	12.61	24.15	40.31	16.01	4.35	1.66	0.92
1995	13.23	24.01	40.91	15.06	4.70	1.46	0.63
1996	14.13	23.63	42.53	14.48	3.41	1.26	0.57
1997	15.16	24.70	41.22	12.72	4.34	1.46	0.39
1998	15.10	25.00	41.10	13.58	3.68	1.21	0.33
1999	15.33	25.11	41.33	13.23	3.66	1.13	0.22
2000	17.18	23.79	42.56	11.03	3.87	1.22	0.34
2001	17.58	26.78	39.89	11.34	3.14	0.86	0.41
2002	20.26	26.94	37.64	11.14	3.12	0.61	0.30
2003	19.84	25.42	39.85	11.20	2.90	0.75	0.04

<표 III-10> 가구원수별 지니계수(총소득)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1982	0.30624	0.26891	0.26464	0.27728	0.28199	0.27037	0.27262
1983	0.28399	0.26142	0.26107	0.26940	0.28092	0.26053	0.26384
1984	0.27791	0.26160	0.26377	0.26992	0.27389	0.25840	0.29358
1985	0.22258	0.25492	0.25466	0.28904	0.24979	0.26997	0.18870
1986	0.25102	0.26333	0.26449	0.25210	0.25344	0.24818	0.29856
1987	0.25684	0.25737	0.26015	0.26658	0.28329	0.24775	0.23242
1988	0.25202	0.24937	0.24809	0.26401	0.25168	0.30089	0.23971
1989	0.25749	0.25298	0.25628	0.25283	0.25431	0.24673	0.29854
1990	0.24340	0.24258	0.24076	0.22497	0.2307	0.25245	0.22078
1991	0.25951	0.23148	0.22068	0.23115	0.20937	0.21975	0.22534
1992	0.25409	0.24795	0.21525	0.21942	0.22837	0.22782	0.23516
1993	0.27474	0.24250	0.21771	0.21545	0.22133	0.24534	0.26581
1994	0.26869	0.23360	0.21902	0.22570	0.19717	0.26320	0.22380
1995	0.28758	0.23857	0.21695	0.21980	0.21257	0.24664	0.22823
1996	0.27414	0.24486	0.22441	0.22220	0.18782	0.25161	0.29402
1997	0.35174	0.29491	0.24023	0.23381	0.23034	0.23390	0.22582
1998	0.37636	0.31725	0.26544	0.27953	0.29688	0.24313	0.21421
1999	0.27909	0.25957	0.24805	0.24649	0.23667	0.18738	0.17710
2000	0.31225	0.25633	0.26591	0.24796	0.23988	0.26342	0.21108
2001	0.28912	0.26659	0.24674	0.24347	0.22861	0.26047	0.24486
2002	0.31406	0.28487	0.24131	0.24655	0.27032	0.20861	0.29901
2003	0.30424	0.26057	0.24723	0.24739	0.23160	0.28704	0.05260

4. 분기소득 대 연소득 지니계수

가. 연소득과 분기소득 지니계수간의 관계

한 가구의 연소득(annual income)은 1~4분기의 분기소득(quarterly income)을 합산하여 산출된다. 제Ⅱ장에서는 도시기계 조사자료의 분기자료를 분석해보면 소득(소비지출) 관련 자료가 계절성(seasonality)을 지녔음을 소개하였다. 소득흐름의 계절성이라 함은 각 분기의 소득이 모든 가구에 대해 분기에 관계없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다. 만약 분기소득 흐름에 계절성이 존재하고 또한 계절성이 경제주체별로 서로 상이하다면 분기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소득분배 격차(4개 분기소득 격차의 평균)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소득격차보다 최소한 크거나 같다.

이를 단편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난로 판매업자와 에어컨 판매업자의 2가지 유형의 경제주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제를 상정해 보자. 계절적 기온 차이에 따라 난로 수요가 성수기를 맞이하는 가을 또는 겨울에 난로 판매업자들의 소득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렇지만 봄이나 여름은 난방기구에 대한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은 거의 0일 것이다. 반대로 에어컨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봄과 여름이 성수기로서 계절적으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기간이다. 그렇지만 가을과 겨울은 비수기로서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기간일 것이다. 여기에서 연간으로는 난로 판매업자들과 에어컨 판매업자들이 동일수준의 소득을 획득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연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난방기구 판매업자들과 에어컨 판매업자들의 연소득은 가정에 따라 서로 동일하므로 로렌츠 곡선은 45도선과 일치하게 되어 연소득 지니계수는 0이 된다. 그렇지만 분기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봄과 여름에는 에어컨 판매업자들의 소득이 더 높고, 가을과 겨울에는 난로 판매업자들의 소득이 더 높다.

그러므로 분기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지니계수는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각 분기별로 상대소득 분포는 동일하며 다만 계절성 등을 감안하여 각 경제주체별 소득순위만 변동한다고 하자. 어떤 경제가 모두 N명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기별로 각각 다음과 같은 소득을 획득한다고 하자.

분기소득 : Y_{ij} , 단, i (경제주체) = 1, 2, ..., N, j (분기)=1, 2, 3, 4

연소득 : $Y_i^* = \sum_{j=1}^4 Y_{ij}$

연평균분기소득: $\overline{Y}_i^* = \frac{1}{4} \sum_{j=1}^4 Y_{ij} = \frac{Y_i^*}{4}$

지니계수는 소득의 절대수준과는 별개로 상대비중을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연소득(Y_i^*) 기준 지니계수와 연평균 분기소득(\overline{Y}_i^*) 기준 지니계수는 그 값이 항상 일치한다. 왜냐하면 양자는 상수배의 비례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며, 상대비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매 분기의 소득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있어, 분기소득의 분산과 분기소득 분산의 평균, 연평균 분기소득의 분산을 구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분기소득 분산 : $\text{Var}(Y_{ij}) = \sigma_j^2 = \sigma^2, j=1, 2, 3, 4$

분기소득 분산의 평균: $\frac{1}{4} \sum_{j=1}^4 \text{Var}(Y_{ij}) = \frac{1}{4} \sum_{j=1}^4 \sigma_j^2 = \frac{1}{4} \sum_{j=1}^4 \sigma^2 = \sigma^2$

연평균 분기소득 분산: $\text{Var}(\overline{Y}_i^*) = \frac{1}{16} \left(\sum_{j=1}^4 \sigma_j^2 + 2 \sum_{k=1}^4 \sum_{l=k+1}^4 \text{Cov}(Y_{.k}, Y_{.l}) \right)$
 $= \frac{\sigma^2}{4} + \frac{1}{8} \sum_{k=1}^4 \sum_{l=k+1}^4 \sigma_{kl}$

단, $\sigma_{kl} = \text{Cov}(Y_{.k}, Y_{.l})$

그런데

$$|\sigma_{kl}| \leq \max [\text{Var}(Y_{ij})] = \sigma^2$$

그러므로 $\text{Var}(\overline{Y}_i^*) \leq \sigma^2$ 의 관계가 성립한다¹⁶⁾. 이 경우 등호는 분기소득간 공분산이 분기소득 분산과 동일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분기소득간 공분산이 분기소득 분산과 일치하는 경우는 분기소득간 상관관계가 완전상관(perfect correlation) 관계에 있을 경우를 일컫는다.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여도 크게 무리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실상 연평균 분기소득의 분산은 분기소득 분산의 평균보다 작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연소득은 4개 분기소득의 합이므로 연소득은 평균 분기소득의 4배이다. 그러므로 연소득의 분산은 연평균 분기소득 분산의 16배(4의 제곱배), 표준편차는 4배이다. 지니계수는 절대소득 수준이 아니라 상대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그러므로 연평균 분기소득의 지니계수와 연소득 지니계수의 지니계수는 서로 같다. 다른 여건이 같다면 분산은 곧 지니계수를 의미하므로 연소득의 분산은 결과적으로 분기소득 지니계수의 평균보다 높지 않다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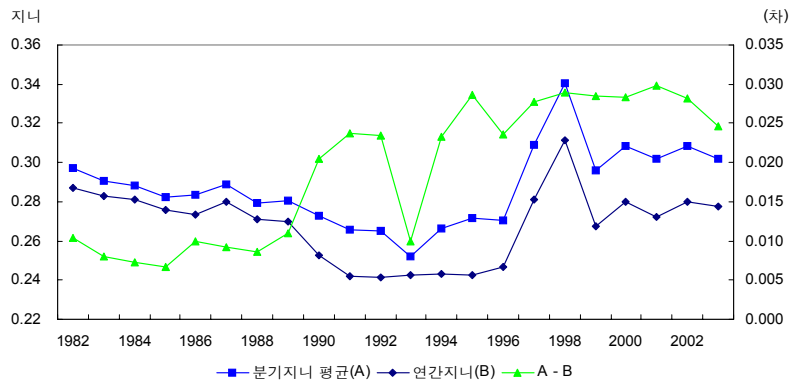
16) 이러한 관계는 앞에서 매 분기의 분기소득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분기소득의 분산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나. 분기소득 및 연소득 지니계수의 비교¹⁷⁾

본 항에서는 분기소득 및 연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비교한다.

[그림 III-7]의 분기소득 지니계수(평균)와 연소득 지니계수를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항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의 가항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을 자료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I-7] 분기소득 및 연소득 지니계수의 비교



주: 1982~1989년과 1993년은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분기 대신 반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시계열적 관점에서 볼 때 분기 지니계수와 연간 지니계수간의 차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⁸⁾. 1998년

17) 1982~1989년 및 1993년의 경우에는 분기별 도시가계조사자료로부터 연단위 소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계절성을 제거할 때 자료의 탈락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사실상 분석자료로서의 이용가치를 얻기가 어려워 상·하반기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들 기간에 대해서는 분기소득 지니계수 대신 반기소득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18) 분기소득 지니계수보다는 반기소득 지니계수가 다소 작다. 그러므로 1980년대와 1993년의 경우에는 반기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분기소득 지니계수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그러한 것을 유추할 수는 없다. 다만 1993년을 제외한 나머지 1990년 이후의 자료를 보면 소폭이나마 연소득 지니계수와 분기소득 지니계수의 평균간의 차이가 다소 커진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본문과 같이 얘기하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 87

경제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니계수가 크게 상승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추세적으로 지니계수가 상승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0년 이후 경기침체를 맞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분기 지니계수와 연간 차이는 경제위기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1990년대 초 또는 그 이전의 기간에 비해 그 격차가 커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III-11> 분기소득 및 연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분기소득 지니					연간소득 지니(B)	A-B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A)		
1982	0.29802		0.29641		0.29722	0.28678	0.01044
1983	0.29135		0.29018		0.29077	0.28270	0.00807
1984	0.28461		0.29215		0.28838	0.28109	0.00729
1985	0.27926		0.28548		0.28237	0.27563	0.00674
1986	0.28492		0.28228		0.28360	0.27368	0.00992
1987	0.29125		0.28684		0.28905	0.27986	0.00919
1988	0.27703		0.28181		0.27942	0.27082	0.00860
1989	0.28035		0.28078		0.28057	0.26957	0.01100
1990	0.28059	0.27203	0.26783	0.27086	0.27283	0.25236	0.02047
1991	0.27342	0.26342	0.26293	0.26246	0.26556	0.24189	0.02367
1992	0.27294	0.25704	0.26108	0.26852	0.26490	0.24147	0.02343
1993	0.25454		0.25008		0.25231	0.24242	0.00989
1994	0.26676	0.25996	0.25954	0.27878	0.26626	0.24293	0.02333
1995	0.28034	0.26605	0.27052	0.26877	0.27142	0.24280	0.02862
1996	0.27839	0.26251	0.26520	0.27545	0.27039	0.24685	0.02354
1997	0.31564	0.30787	0.30710	0.30424	0.30871	0.28102	0.02769
1998	0.33716	0.33584	0.35272	0.33483	0.34014	0.31121	0.02893
1999	0.30091	0.29735	0.29576	0.28888	0.29573	0.26726	0.02847
2000	0.31834	0.31280	0.30173	0.30007	0.30824	0.27988	0.02836
2001	0.30857	0.30006	0.30062	0.29887	0.30203	0.27222	0.02981
2002	0.31347	0.31115	0.30802	0.30005	0.30817	0.27997	0.02820
2003	0.31667	0.29421	0.29310	0.30426	0.30206	0.27747	0.02459

주: 1982~1989년과 1993년은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분기 대신 반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1990년대 초 이후 분기 지니계수(평균)의 상승 정도는 연간 지니계수의 상승률보다 높다. 1993~2003년 사이에 연소득 지니계수는 14.5% 상승(0.24242 → 0.27747)한 반면 분기소득 지니계수(평균)는 19.7% 상승(0.25231 → 0.30206)하였다.

분기 지니계수가 크다는 것은 분기소득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분기 지니계수의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은 분기소득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소득 지니계수도 같은 기간 동안 상승하였지만 그 정도는 분기 지니계수에 다소 못 미친다. 이는 1990년대 초에 비해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는 확대되었다는 점 외에도 또다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분기소득 지니계수가 높게 증가한 것으로부터 각 경제주체들이 연소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분기별 또는 계절별로 소득흐름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해 준다.

2000년 이후의 연소득 지니계수는 대체로 0.27~0.28 수준이다. 이는 1980년대 중반~후반 수준과 비슷하다. 즉, 최근의 연간 소득분배 격차는 약 15년 정도 이전 수준과 비슷하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이전 기간에 비해 시장에서의 소득획득에 있어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비단 소득분배 격차를 논함에 있어 연소득 지니계수 수준의 고저와 변화율, 변화방향 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그것 못지 않게 소득을 획득하는 시장의 안정성¹⁹⁾ 여부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19) 유경준·김대일(2003)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소득흐름의 계절성 또는 계절적 안정성이라고 표현한 것을, 항상소득가설의 관점에서 일시소득에 대응한 소득위험(income risk)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위의 두 가지 논의가 문제를 직시하는 방향이 다를 뿐,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IV.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본장에서는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특성과 정책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대학(4년제), 대학원의 7단계로 분류한다. 논의의 편의상 각급 학교는 재학, 중퇴, 졸업, 휴학 등을 포괄한다²⁰⁾. 도시가계조사자료에는 1985년부터 교육수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1985~2003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다²¹⁾.

1. 개 요

지난 20여년간 가구 소득분배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즉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이후 1997~1998년의 외환위기 당시 사상초유의 대량 실직과 경제붕괴로 소득분배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환위기 직전의 수준보다는 높으나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현격하게

20) 도시가계조사자료에는 연도별로 교육수준을 표시하는 기준이 다른데 전문대학이라고 분리되지 않고 교육 총연수만을 표기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편의상 교육연수가 14년 초과 16년 미만의 경우를 전문대로 간주하였다.

21)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도시가계조사자료만을 이용하고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1982년부터 최근까지 매년의 원시자료가 이용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1996년과 2000년의 2개 연도 자료만이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추세분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선된 수준에서 소득분배 구조가 안정세를 모색하고 있다.

본장에서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를 다루는 이상, 우리 사회의 교육수준 변화의 어떠한 측면이 이러한 전반적인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특히 사회 전반의 교육수준 변화를 소득분배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세 가지 경로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교육수준의 분포가 장기간에 걸쳐 변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무학에서부터 대학원졸까지 교육수준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구주를 구분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정의된 각 계층의 상대적인 크기가 증감하면서 전체 소득분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달리 표현해서 교육수준별 계층에 적용되는 가중치의 구성이 변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각 계층간 상대소득의 격차가 변한다면 설혹 가중치(계층의 상대적인 크기)에 변화가 없더라도 소득분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계층간 지니’, 혹은 계층간 소득분배의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셋째, 계층분포(가중치)나 계층간 상대소득의 변화가 없더라도, 각 계층내에서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불변이더라도 소득격차가 변한다면 전반적인 소득분배 구조도 변할 것이다. 이를 ‘계층내 지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장의 2~4절에서 교육수준 변화의 3개 요인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상세히 기술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소득분배 구조와 교육수준과의 연관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의한 표본분할(sample partition)을 대상으로 지니계수의 분해(decomposition)를 시도하고, 앞에서 언급한 3개 요인별로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가구주 교육수준별 표본분포

<표 IV-1>에서 보듯이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분포의 변화추이를

IV.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91

살펴보면, 가구주의 학력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의 표본 비중은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가구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다.

7단계의 교육수준 중 가장 점유비중이 높은 것은 고등학교 학력이다. 1985년에는 가구주의 학력이 고등학교인 가구가 전체의 37.7% 정도였으며 1990년대 초까지 상승하여 45% 수준에 도달한 이후 안정추세를 보이다가 비교적 최근에 대학 및 대학원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추세적 변화현상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빠르게 상향평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구주의 학력이 중등학교 이하인 가구의 비중은 1985년에 42.80%로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23.97%로 크게 낮아진 것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비중은 높지 않지만 대학과 대학원 학력의 점유비중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경우 가구주 교육수준이 점차 고도화 또는 상향평준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²²⁾.

22)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양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일 뿐이며 교육수준의 질적 성과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표 IV-1> 가구주 교육수준별 표본구성 분포

(단위: 가구, %)

가구수	전체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1985	1,937	50	312	467	730	90	264	24
1986	2,132	47	346	467	815	109	317	31
1987	2,095	42	282	458	850	96	345	22
1988	2,583	56	306	578	1,128	109	367	39
1989	3,388	76	347	646	1,519	204	537	59
1990	2,853	47	310	561	1,255	104	513	63
1991	2,950	44	316	517	1,352	141	517	63
1992	3,114	44	302	528	1,384	165	615	76
1993	3,456	62	346	527	1,566	183	678	94
1994	3,168	73	365	490	1,382	176	599	83
1995	3,609	76	392	553	1,583	192	706	107
1996	3,607	76	419	551	1,550	205	692	114
1997	3,618	63	415	596	1,549	231	644	120
1998	3,647	60	326	509	1,665	204	792	91
1999	3,581	65	334	527	1,624	229	711	91
2000	4,547	88	439	665	1,973	305	911	166
2001	3,629	64	370	519	1,593	266	694	123
2002	3,544	61	371	512	1,552	255	668	125
2003	3,825	56	359	502	1,596	267	894	151
비중	전체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1985	100	2.58	16.11	24.11	37.69	4.65	13.63	1.24
1986	100	2.20	16.23	21.90	38.23	5.11	14.87	1.45
1987	100	2.00	13.46	21.86	40.57	4.58	16.47	1.05
1988	100	2.17	11.85	22.38	43.67	4.22	14.21	1.51
1989	100	2.24	10.24	19.07	44.83	6.02	15.85	1.74
1990	100	1.65	10.87	19.66	43.99	3.65	17.98	2.21
1991	100	1.49	10.71	17.53	45.83	4.78	17.53	2.14
1992	100	1.41	9.70	16.96	44.44	5.30	19.75	2.44
1993	100	1.79	10.01	15.25	45.31	5.30	19.62	2.72
1994	100	2.30	11.52	15.47	43.62	5.56	18.91	2.62
1995	100	2.11	10.86	15.32	43.86	5.32	19.56	2.96
1996	100	2.11	11.62	15.28	42.97	5.68	19.18	3.16
1997	100	1.74	11.47	16.47	42.81	6.38	17.80	3.32
1998	100	1.65	8.94	13.96	45.65	5.59	21.72	2.50
1999	100	1.82	9.33	14.72	45.35	6.39	19.85	2.54
2000	100	1.94	9.65	14.63	43.39	6.71	20.04	3.65
2001	100	1.76	10.20	14.30	43.90	7.33	19.12	3.39
2002	100	1.72	10.47	14.45	43.79	7.20	18.85	3.53
2003	100	1.46	9.39	13.12	41.73	6.98	23.37	3.95

3.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위의 구성분포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표본구성을 살펴보면 학력별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층 점유비가 높아지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소득층 점유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학교를 분기점으로 그 이하와 그 이상의 학력층으로 확연히 구별된다.

먼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를 보면 약 절반 정도가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에 속해 있다. 2003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가구주 학력이 무학인 가구비율 1.46%p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0.71%p가 1분위에 속해 있다. 이는 소득 1분위의 가구비율 10%p 중에서 0.71%p가 무학이므로 1분위를 모집단으로 하면 무학 비중이 7.1%에 이르러 전체 평균비율(unconditional mean share) 1.46%의 약 5배에 이른다. 즉,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무학의 밀도가 전체 평균보다 5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학력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차이점은 1분위를 포함한 최저소득층에 속한 초등학교 학력의 밀도가 다소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가구주의 학력이 중등학교인 경우까지 이어진다.

가구주의 학력이 고등학교인 가구의 분포는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다만 중소득층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보다 다소 점유비가 높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1980년대에는 저소득층의 비중이 다소 작고 중소득층에 좀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1980년대에만 해도 중학교 이하의 가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또한 저학력 가구는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수준의 상향평준화 경향과 맞물려 점차 희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이상, 특히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뚜렷하게 고소득층에서의 점유비가 높다. 특히 이런 추세는 대학원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표 IV-2>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위 구성비(각 분위별 비중합계=10%)

(단위: %)

무학	1	2	3	4	5	6	7	8	9	10
1985	1.03	0.46	0.31	0.15	0.26	0.36	0.00	0.00	0.00	0.00
1986	1.27	0.14	0.09	0.28	0.05	0.09	0.23	0.05	0.00	0.00
1987	1.19	0.14	0.29	0.10	0.14	0.10	0.05	0.00	0.00	0.00
1988	1.20	0.39	0.12	0.15	0.00	0.19	0.08	0.00	0.04	0.00
1989	1.15	0.32	0.18	0.18	0.18	0.03	0.06	0.12	0.03	0.00
1990	0.63	0.18	0.07	0.11	0.25	0.18	0.07	0.07	0.07	0.04
1991	0.61	0.24	0.24	0.10	0.00	0.07	0.14	0.07	0.03	0.00
1992	0.58	0.19	0.10	0.16	0.06	0.16	0.00	0.10	0.06	0.00
1993	1.07	0.26	0.09	0.12	0.06	0.03	0.06	0.06	0.06	0.00
1994	1.20	0.38	0.19	0.13	0.16	0.06	0.13	0.06	0.00	0.00
1995	1.05	0.25	0.22	0.25	0.17	0.03	0.06	0.08	0.00	0.00
1996	1.08	0.39	0.17	0.08	0.11	0.11	0.11	0.03	0.03	0.00
1997	1.00	0.33	0.11	0.08	0.14	0.03	0.03	0.00	0.03	0.00
1998	1.01	0.19	0.16	0.11	0.03	0.00	0.00	0.08	0.03	0.03
1999	0.92	0.31	0.2	0.14	0.08	0.03	0.00	0.08	0.06	0.00
2000	0.92	0.26	0.26	0.13	0.13	0.15	0.00	0.02	0.02	0.02
2001	0.69	0.22	0.39	0.17	0.17	0.06	0.00	0.06	0.03	0.00
2002	0.76	0.48	0.28	0.06	0.08	0.00	0.00	0.03	0.03	0.00
2003	0.71	0.39	0.10	0.03	0.08	0.05	0.03	0.03	0.03	0.03
초등	1	2	3	4	5	6	7	8	9	10
1985	3.92	2.48	2.07	1.6	1.34	1.14	1.55	0.93	0.67	0.41
1986	3.75	2.25	2.35	2.11	1.5	1.17	1.08	0.89	0.94	0.19
1987	2.82	1.91	1.72	1.10	1.38	1.58	1.10	0.86	0.57	0.43
1988	2.71	1.66	1.74	1.24	1.05	1.12	0.77	0.89	0.50	0.15
1989	2.36	1.45	1.33	0.94	1.15	1.00	0.53	0.77	0.41	0.30
1990	2.42	1.58	1.37	0.95	1.16	1.40	0.77	0.56	0.39	0.28
1991	2.27	1.59	1.19	1.36	1.08	1.08	0.68	0.51	0.47	0.47
1992	1.89	1.32	1.35	1.16	1.25	0.74	0.67	0.39	0.71	0.22
1993	2.26	1.16	1.42	0.87	0.84	0.64	0.78	0.87	0.81	0.38
1994	2.75	1.67	1.07	1.20	0.76	1.42	0.73	0.85	0.60	0.47
1995	2.88	1.44	1.22	0.80	0.91	1.14	0.75	0.55	0.55	0.61
1996	3.08	1.61	1.36	0.97	0.91	0.89	0.80	0.89	0.58	0.53
1997	3.15	1.93	1.11	1.00	0.91	0.91	0.77	0.58	0.72	0.39
1998	2.30	1.43	1.04	0.74	0.71	0.88	0.58	0.49	0.44	0.33
1999	2.07	1.59	0.95	1.14	0.81	0.73	0.64	0.61	0.53	0.25
2000	2.24	1.83	1.28	0.9	0.81	0.90	0.51	0.40	0.44	0.35
2001	2.92	1.65	1.27	1.05	0.77	0.63	0.61	0.61	0.52	0.17
2002	2.68	1.98	1.44	1.10	0.90	0.82	0.42	0.48	0.37	0.28
2003	2.80	1.52	1.28	0.86	0.78	0.65	0.50	0.42	0.29	0.29

IV.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95

<표 IV-3>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위 구성비(각 분위별 비중합계=10%)

(단위: %)

중등	1	2	3	4	5	6	7	8	9	10
1985	3.10	2.74	3.2	3.05	3.36	2.17	2.48	2.22	1.29	0.52
1986	2.35	2.95	2.44	2.49	2.58	3.24	2.63	1.64	1.36	0.23
1987	3.15	2.91	2.96	2.58	2.34	2.48	2.24	1.29	1.53	0.38
1988	3.37	3.48	2.67	2.83	2.59	2.48	1.90	1.39	1.08	0.58
1989	2.33	2.74	2.72	2.15	2.33	1.74	1.48	1.62	1.24	0.71
1990	2.59	1.96	2.35	2.17	1.93	2.21	1.54	2.07	1.79	1.05
1991	2.03	1.83	1.83	2.24	1.63	2.03	1.66	1.73	1.66	0.88
1992	2.38	1.83	1.99	1.93	1.70	1.70	1.99	1.16	1.48	0.80
1993	1.94	2.03	1.65	1.48	1.50	1.77	1.50	1.30	0.95	1.13
1994	1.96	1.86	1.96	1.55	1.96	1.36	1.39	1.39	1.17	0.88
1995	2.11	2.19	1.69	1.75	1.72	1.47	1.36	1.30	1.05	0.69
1996	2.00	1.91	1.91	1.86	1.58	1.44	1.25	1.44	1.05	0.83
1997	1.88	2.18	1.99	1.88	2.16	1.41	1.35	1.49	1.13	1.00
1998	1.84	2.41	2.00	1.92	1.48	1.07	1.01	1.21	0.63	0.38
1999	2.21	2.18	2.12	1.82	1.56	1.48	1.12	0.98	0.73	0.53
2000	2.13	2.11	1.80	2.07	1.19	1.61	1.08	1.08	0.88	0.68
2001	2.26	2.15	1.74	1.46	1.49	1.35	1.32	1.07	0.83	0.63
2002	2.40	1.78	1.69	1.75	1.64	1.33	1.33	1.21	0.85	0.48
2003	2.14	1.67	1.91	1.83	1.18	1.39	0.94	0.84	0.63	0.60
고등	1	2	3	4	5	6	7	8	9	10
1985	1.91	3.56	3.61	3.82	4.65	4.96	4.39	3.77	4.23	2.79
1986	1.88	3.61	4.08	4.27	4.32	4.46	4.17	5.49	3.75	2.20
1987	2.20	4.01	4.2	4.53	4.53	4.25	4.68	4.87	4.34	2.96
1988	3.14	4.26	4.68	5.11	5.15	4.96	4.99	3.99	4.53	2.86
1989	3.01	4.87	4.78	5.43	4.49	5.40	5.25	4.49	4.31	2.80
1990	3.08	4.59	4.66	4.84	4.98	4.59	5.08	5.08	4.03	3.05
1991	2.88	4.51	4.98	4.81	5.39	4.95	5.22	5.22	4.44	3.42
1992	3.79	4.85	5.11	5.07	4.37	4.82	4.78	4.82	3.82	3.02
1993	3.99	5.47	5.09	5.21	4.95	4.77	4.83	4.40	3.85	2.75
1994	3.00	4.73	4.67	5.11	4.73	4.70	5.02	4.17	4.17	3.31
1995	3.16	4.60	4.54	5.32	4.71	4.46	4.60	4.38	4.29	3.80
1996	2.91	5.13	4.32	5.21	5.05	4.38	4.80	4.35	3.33	3.49
1997	3.26	4.42	4.92	5.22	4.51	4.73	4.59	4.31	3.59	3.26
1998	3.56	4.39	4.91	5.26	5.46	5.13	5.26	4.20	4.33	3.15
1999	3.24	4.52	5.22	5.11	4.83	5.36	5.22	4.86	3.94	3.04
2000	3.25	3.98	4.64	5.04	4.71	4.75	5.15	4.20	4.40	3.28
2001	3.11	4.27	5.04	4.55	4.93	5.07	5.07	4.46	3.97	3.42
2002	3.19	4.01	4.43	5.05	4.91	4.85	4.91	4.71	3.89	3.84
2003	3.37	4.60	4.16	4.65	4.42	4.78	4.34	4.08	4.13	3.19

<표 IV-4>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위 구성비(각 분위별 비중합계=10%)

(단위: %)

전문대	1	2	3	4	5	6	7	8	9	10
1985	0.26	0.15	0.05	0.26	0.46	0.62	0.62	0.67	0.88	0.67
1986	0.19	0.33	0.47	0.28	0.52	0.38	0.70	0.66	0.61	0.98
1987	0.19	0.33	0.38	0.67	0.43	0.62	0.53	0.33	0.53	0.57
1988	0.19	0.35	0.35	0.31	0.39	0.50	0.46	0.43	0.62	0.62
1989	0.41	0.38	0.30	0.50	0.65	0.62	0.97	0.68	0.83	0.68
1990	0.11	0.28	0.18	0.39	0.46	0.60	0.60	0.42	0.35	0.28
1991	0.14	0.47	0.58	0.58	0.58	0.51	0.58	0.51	0.47	0.37
1992	0.39	0.45	0.42	0.58	0.51	0.58	0.51	0.77	0.48	0.61
1993	0.41	0.29	0.69	0.69	0.67	0.75	0.46	0.52	0.52	0.29
1994	0.32	0.47	0.76	0.51	0.63	0.73	0.54	0.51	0.69	0.41
1995	0.19	0.67	0.47	0.36	0.47	0.75	0.64	0.64	0.55	0.58
1996	0.28	0.47	0.47	0.72	0.69	0.72	0.75	0.42	0.69	0.47
1997	0.53	0.41	0.55	0.66	0.72	0.91	0.61	0.61	0.80	0.58
1998	0.19	0.41	0.58	0.60	0.77	0.71	0.58	0.63	0.58	0.55
1999	0.28	0.56	0.56	0.59	0.56	0.73	0.67	1.01	0.81	0.64
2000	0.37	0.48	0.7	0.77	0.84	0.68	0.64	0.99	0.53	0.70
2001	0.30	0.69	0.55	0.85	0.63	0.88	0.96	1.05	0.91	0.50
2002	0.34	0.59	0.62	0.76	0.87	0.68	1.10	0.85	0.87	0.51
2003	0.29	0.42	0.84	0.60	0.81	0.86	0.89	0.86	0.86	0.55
대학	1	2	3	4	5	6	7	8	9	10
1985	0.10	0.31	0.67	0.46	0.31	1.08	0.88	1.91	2.99	4.90
1986	0.09	0.42	0.28	0.33	0.94	0.80	1.22	1.64	3.38	5.77
1987	0.14	0.38	0.33	0.43	0.86	1.10	1.81	2.63	3.58	5.20
1988	0.12	0.35	0.7	0.66	0.70	1.01	1.47	2.28	2.94	3.99
1989	0.32	0.41	0.56	0.80	1.09	1.06	1.33	2.45	2.92	4.90
1990	0.46	0.74	0.67	1.16	0.98	1.09	2.17	2.38	3.54	4.80
1991	0.41	0.78	0.81	0.88	1.59	1.46	1.93	2.14	3.02	4.51
1992	0.39	1.00	0.87	1.16	1.54	1.80	2.15	2.41	3.73	4.72
1993	0.55	0.93	1.16	1.65	1.79	2.03	2.08	2.20	3.15	4.08
1994	0.51	1.17	1.01	1.36	1.48	1.52	2.08	2.59	3.60	3.60
1995	0.55	1.00	1.58	1.72	1.66	1.66	2.05	2.83	3.08	3.44
1996	0.55	0.61	1.30	1.61	1.75	2.05	1.89	2.36	3.63	3.44
1997	1.11	0.86	1.16	1.19	1.35	1.91	1.77	2.52	2.82	3.12
1998	1.01	1.07	0.93	1.40	1.56	1.95	2.47	3.29	3.51	4.52
1999	0.67	0.95	1.14	1.14	1.73	1.95	2.21	2.51	3.49	4.05
2000	0.66	1.12	1.19	1.45	1.87	2.05	2.35	2.60	3.36	3.39
2001	0.50	0.80	0.96	1.27	1.68	1.87	2.18	2.81	3.25	3.80
2002	0.51	0.73	1.02	1.33	1.38	2.12	2.34	2.82	3.05	3.56
2003	0.71	0.94	1.44	1.78	2.01	2.43	2.77	3.45	3.63	4.21

IV.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97

<표 IV-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위 구성비(각 분위별 비중합계=10%)

(단위: %)

대학원	1	2	3	4	5	6	7	8	9	10
1985	0.00	0.10	0.05	0.00	0.00	0.00	0.10	0.21	0.36	0.41
1986	0.00	0.00	0.00	0.00	0.00	0.00	0.09	0.14	0.33	0.89
1987	0.00	0.00	0.00	0.00	0.00	0.05	0.05	0.05	0.24	0.67
1988	0.00	0.04	0.04	0.08	0.12	0.04	0.08	0.08	0.23	0.81
1989	0.03	0.06	0.00	0.03	0.03	0.03	0.06	0.12	0.38	1.00
1990	0.04	0.00	0.07	0.07	0.07	0.04	0.11	0.18	0.32	1.33
1991	0.03	0.00	0.00	0.03	0.10	0.10	0.14	0.20	0.34	1.19
1992	0.00	0.00	0.00	0.03	0.06	0.19	0.19	0.26	0.58	1.12
1993	0.03	0.09	0.06	0.17	0.09	0.14	0.29	0.32	0.55	0.98
1994	0.03	0.09	0.06	0.16	0.06	0.03	0.28	0.28	0.38	1.23
1995	0.06	0.06	0.03	0.08	0.14	0.25	0.30	0.42	0.58	1.05
1996	0.06	0.00	0.06	0.00	0.06	0.42	0.30	0.39	0.47	1.41
1997	0.06	0.03	0.11	0.08	0.17	0.06	0.33	0.36	0.66	1.46
1998	0.03	0.08	0.08	0.05	0.03	0.11	0.19	0.30	0.49	1.12
1999	0.03	0.03	0.03	0.08	0.11	0.08	0.14	0.28	0.36	1.40
2000	0.02	0.07	0.04	0.09	0.13	0.15	0.42	0.48	0.55	1.69
2001	0.14	0.00	0.11	0.08	0.17	0.28	0.22	0.39	0.63	1.38
2002	0.06	0.08	0.06	0.11	0.20	0.23	0.14	0.40	0.99	1.27
2003	0.00	0.10	0.08	0.10	0.10	0.26	0.29	0.52	0.89	1.59

4.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분포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소득분포의 특징을 찾자면 첫째,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도 함께 상승한다는 점과 둘째,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에 동일 학력수준내 가구들의 상대소득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위의 3절에서는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고소득층 점유비가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층 점유비가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별 총소득 평균분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985~2003년 동안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학력별 평균 총소득이 고학력계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이 소득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6> 가구주 교육수준별 평균소득 분포

(단위: 만원)

	전체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대학	대학원
1985	503	285	371	413	499	626	792	851
1986	574	301	423	474	554	662	915	1,088
1987	673	334	509	529	667	719	1,007	1,397
1988	805	415	608	657	785	926	1,169	1,554
1989	981	520	754	827	928	1,058	1,432	1,824
1990	1,166	764	893	1,050	1,107	1,223	1,540	2,029
1991	1,413	810	1,116	1,265	1,374	1,379	1,830	2,440
1992	1,644	1,030	1,319	1,443	1,548	1,700	2,116	2,610
1993	1,777	980	1,466	1,633	1,689	1,656	2,199	2,708
1994	2,021	1,064	1,679	1,796	1,970	2,020	2,462	3,186
1995	2,300	1,280	1,841	2,020	2,258	2,420	2,730	3,414
1996	2,575	1,350	2,070	2,280	2,498	2,649	3,104	4,080
1997	2,630	1,019	1,944	2,376	2,544	2,738	3,230	4,307
1998	2,304	878	1,610	1,770	2,185	2,386	2,988	3,984
1999	2,571	1,312	1,980	2,044	2,471	2,731	3,214	4,498
2000	2,902	1,561	2,085	2,357	2,838	2,924	3,471	4,976
2001	3,038	1,845	2,219	2,471	2,940	3,094	3,784	4,910
2002	3,259	1,587	2,277	2,639	3,138	3,307	4,176	5,500
2003	3,535	1,874	2,443	2,820	3,388	3,713	4,323	5,694

전 가구의 평균소득을 1로 보았을 때 교육수준별 상대소득 배수를 보면, 무학이 0.5~0.6 수준, 초등학교가 0.7~0.8 수준, 중등학교는 0.8~0.9 수준, 고등학교는 평균에 미소하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는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학의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만 해도 평균소득 대비 소득배수가 1.5~1.6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2~1.3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대학 학력 비중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대학 학력자들의 소득획득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학력수준의 급상승으로 인해 무학, 초·중등교육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학력층의 소득이 상승하는 한편 반사적으로 대학 학력의 평균소득 대비 소득배수를 떨어뜨린

IV.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99

것이 또다른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²³⁾. 이러한 경향은 대학원 학력의 경우에도 관찰되지만 그 정도는 대학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표 IV-7> 평균소득 대비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배수

(단위: 배)

	전체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대학	대학원
1985	1	0.57	0.74	0.82	0.99	1.25	1.57	1.69
1986	1	0.52	0.74	0.83	0.97	1.15	1.60	1.90
1987	1	0.50	0.76	0.79	0.99	1.07	1.50	2.08
1988	1	0.52	0.76	0.82	0.97	1.15	1.45	1.93
1989	1	0.53	0.77	0.84	0.95	1.08	1.46	1.86
1990	1	0.66	0.77	0.90	0.95	1.05	1.32	1.74
1991	1	0.57	0.79	0.90	0.97	0.98	1.30	1.73
1992	1	0.63	0.80	0.88	0.94	1.03	1.29	1.59
1993	1	0.55	0.83	0.92	0.95	0.93	1.24	1.52
1994	1	0.53	0.83	0.89	0.97	1.00	1.22	1.58
1995	1	0.56	0.80	0.88	0.98	1.05	1.19	1.48
1996	1	0.52	0.80	0.89	0.97	1.03	1.21	1.58
1997	1	0.39	0.74	0.90	0.97	1.04	1.23	1.64
1998	1	0.38	0.70	0.77	0.95	1.04	1.30	1.73
1999	1	0.51	0.77	0.79	0.96	1.06	1.25	1.75
2000	1	0.54	0.72	0.81	0.98	1.01	1.20	1.71
2001	1	0.61	0.73	0.81	0.97	1.02	1.25	1.62
2002	1	0.49	0.70	0.81	0.96	1.01	1.28	1.69
2003	1	0.53	0.69	0.80	0.96	1.05	1.22	1.61

학력 차이에 의한 소득분포의 또다른 특성으로서, 저학력층에서 상대소득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래의 <표 IV-8>에서

23) 고학력화로 인해 저학력층의 비중이 감소하면 대체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승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하락한다. 그렇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고학력화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된다면 전체적인 평균소득은 상승할 수 있다.

보듯이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경우 지니계수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중등학교 이하의 학력에서는 지니계수가 크며, 특히 무학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한 해가 상당히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경제 전체적으로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면, 학력수준을 상향평준화함으로써 변이가능성이 높은 저학력층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정도 고학력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추가적으로 고학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어려우므로 고학력화를 통해 소득분배 격차를 추가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학력간 비중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표 IV-8> 교육수준별 지니계수의 분포추이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대학	대학원
1985	0.20936	0.24538	0.21184	0.23184	0.24288	0.25894	0.27146
1986	0.26551	0.24772	0.20964	0.21910	0.25405	0.24442	0.16486
1987	0.25169	0.26031	0.21887	0.24421	0.25831	0.23826	0.22695
1988	0.27789	0.25070	0.22828	0.23167	0.26381	0.23035	0.24111
1989	0.25621	0.24668	0.23656	0.22484	0.23600	0.25626	0.25639
1990	0.26812	0.23143	0.23731	0.22088	0.20112	0.23917	0.25187
1991	0.26476	0.24126	0.22463	0.21407	0.20549	0.23019	0.21011
1992	0.27722	0.23818	0.22132	0.21261	0.23653	0.22872	0.19148
1993	0.28740	0.25219	0.23494	0.21462	0.19623	0.23477	0.23809
1994	0.24703	0.25530	0.23374	0.21646	0.21308	0.22229	0.24201
1995	0.23748	0.26593	0.23306	0.22169	0.22430	0.22188	0.21954
1996	0.26532	0.26299	0.24084	0.22375	0.21141	0.21831	0.22133
1997	0.42246	0.32460	0.26835	0.24716	0.24681	0.26349	0.21667
1998	0.48147	0.37520	0.30919	0.26952	0.25762	0.27606	0.25037
1999	0.28554	0.27179	0.24880	0.23646	0.22668	0.24291	0.23108
2000	0.25883	0.29742	0.26485	0.25614	0.25080	0.24177	0.24266
2001	0.26248	0.28525	0.25383	0.24941	0.22769	0.23365	0.27638
2002	0.24377	0.28496	0.25561	0.25158	0.22794	0.24554	0.26817
2003	0.32503	0.28808	0.26124	0.25198	0.22803	0.24708	0.22960

5. 가구주 교육수준 기준 분할에 의한 지니계수의 분해

본 절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 분포, 교육수준별 상대소득 수준, 동일 교육수준 계층내에서의 소득격차 등의 요인이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니계수를 분해하였다. <표 IV-9>와 <표 IV-10>에는 1985년부터 2003년까지의 교육수준별 지니계수의 Yitzhaki 분해와 Pyatt 분해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제II장에서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설명하였을 때 언급한 바와 같이 Pyatt 분해의 중복요소가 Yitzhaki 분해의 계층화지니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일 국가의 지니계수를 분해하면 일반적으로 계층간 지니보다 계층내 지니가 큰 것이 일반적이다. 본절에서는 계층내 지니 또는 계층간 지니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기보다는 시계열적으로 각각의 변화가 전체 지니계수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눈에 띄는 특징은 두 가지 지니계수 분해방법의 추정 결과에서 그룹내 지니와 그룹간 지니의 추이를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그룹내 지니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커지고, 반면에 그룹간 지니는 작아지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IV-9>의 Yitzhaki 분해에서 그룹내 지니는 1985년의 0.19107에서 2003년에 이르러 0.20584로 커지고 있으며, 그룹간 지니는 1985년 0.11443에서 2003년 0.09223으로 작아지고 있다.

<표 IV-10>의 Pyatt 분해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그룹내 지니는 0.05606에서 2003년 0.06535로 커지고, 그룹간 지니는 1985년 0.15341에서 2003년 0.10773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Yitzhaki 분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그룹내 지니의 증가와 그룹간 지니의 감소를 다시 해석하면, 교

육수준별로 도시가구를 분류하였을 경우, 1985~2003년의 기간 동안 교육수준별 계층간 소득수준의 격차는 줄어든 반면, 동일 계층 내에서의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IV-9> 교육수준별 지니계수의 분해(Yitzahki 분해)

	표본수	지니계수			
		지니계수	그룹내 지니	그룹간 지니	계층화 지니
1985	1937	0.27563	0.19107	0.11443	-0.02987
1986	2132	0.27368	0.18664	0.11970	-0.03266
1987	2095	0.27986	0.19756	0.11252	-0.03023
1988	2583	0.27082	0.19283	0.10426	-0.02627
1989	3388	0.26957	0.19526	0.09837	-0.02406
1990	2853	0.25236	0.19002	0.07933	-0.01699
1991	2950	0.24189	0.18470	0.07324	-0.01604
1992	3114	0.24147	0.18280	0.07510	-0.01643
1993	3456	0.24242	0.18992	0.06604	-0.01354
1994	3168	0.24293	0.18776	0.06824	-0.01307
1995	3609	0.24280	0.18885	0.06661	-0.01266
1996	3607	0.24685	0.18981	0.07159	-0.01456
1997	3618	0.28102	0.21642	0.08032	-0.01573
1998	3647	0.31121	0.23063	0.10171	-0.02113
1999	3581	0.26726	0.19823	0.08766	-0.01863
2000	4547	0.27988	0.21173	0.08743	-0.01929
2001	3629	0.27222	0.20441	0.08550	-0.01768
2002	3544	0.27997	0.20628	0.09573	-0.02205
2003	3825	0.27747	0.20584	0.09223	-0.02060

- 주: 1. 1985~2003년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임.
 2. 1985~1989년의 자료에서는 교육연수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각급 학교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하였음.
 3.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음. 각급 학교는 재학, 중퇴, 휴학, 졸업을 포함하도록 정의하였음.

<표 IV-10> 교육수준별 지니계수의 분해(Pyatt 분해)

	표본수	지니계수			
		지니계수	그룹내 요소	그룹간 요소	중복 요소
1985	1937	0.27563	0.05606	0.15341	0.06616
1986	2132	0.27368	0.05348	0.17219	0.04801
1987	2095	0.27986	0.06213	0.15184	0.06589
1988	2583	0.27082	0.06343	0.13481	0.07258
1989	3388	0.26957	0.06324	0.12546	0.08087
1990	2853	0.25236	0.06264	0.08325	0.10647
1991	2950	0.24189	0.06262	0.07269	0.10658
1992	3114	0.24147	0.05973	0.07188	0.10986
1993	3456	0.24242	0.06215	0.06435	0.11592
1994	3168	0.24293	0.05995	0.06592	0.11706
1995	3609	0.24280	0.06141	0.05884	0.12255
1996	3607	0.24685	0.05987	0.07099	0.11599
1997	3618	0.28102	0.06632	0.09495	0.11975
1998	3647	0.31121	0.07812	0.13354	0.09955
1999	3581	0.26726	0.06563	0.10027	0.10136
2000	4547	0.27988	0.06702	0.10423	0.10863
2001	3629	0.27222	0.06571	0.09269	0.11382
2002	3544	0.27997	0.06600	0.11908	0.09489
2003	3825	0.27747	0.06535	0.10773	0.10438

주: 1. 1985~2003년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임.
 2. 1985~1989년의 자료에서는 교육연수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각급 학교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하였음.
 3.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음. 각급 학교는 재학, 중퇴, 휴학, 졸업을 포함하도록 정의하였음.

이러한 해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서 제III장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계층별 상대소득의 변화를 점검하였다. <표 IV-11>에서 만약 교육수준별 계층의 상대소득의 편차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줄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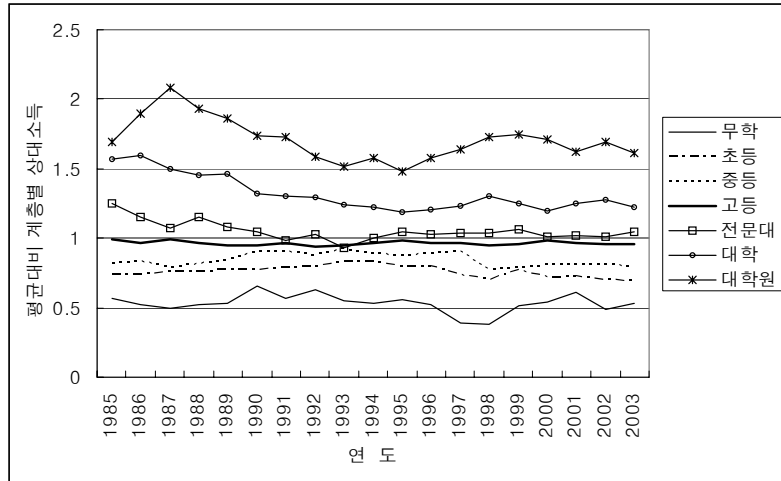
는 현상을 볼 수 있다면 그룹간 지니가 감소하였다는 해석과 부합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학력층과 저학력층의 상대소득 수준의 격차가 뚜렷하게 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표에 나타난 정보만으로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그림 IV-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다음 절에서 교육수준별 점유비(가중치)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모의실험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IV-11> 평균소득 대비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배수

(단위: 배)

	전체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대학	대학원
1985	1	0.57	0.74	0.82	0.99	1.25	1.57	1.69
1986	1	0.52	0.74	0.83	0.97	1.15	1.60	1.90
1987	1	0.50	0.76	0.79	0.99	1.07	1.50	2.08
1988	1	0.52	0.76	0.82	0.97	1.15	1.45	1.93
1989	1	0.53	0.77	0.84	0.95	1.08	1.46	1.86
1990	1	0.66	0.77	0.90	0.95	1.05	1.32	1.74
1991	1	0.57	0.79	0.90	0.97	0.98	1.30	1.73
1992	1	0.63	0.80	0.88	0.94	1.03	1.29	1.59
1993	1	0.55	0.83	0.92	0.95	0.93	1.24	1.52
1994	1	0.53	0.83	0.89	0.97	1.00	1.22	1.58
1995	1	0.56	0.80	0.88	0.98	1.05	1.19	1.48
1996	1	0.52	0.80	0.89	0.97	1.03	1.21	1.58
1997	1	0.39	0.74	0.90	0.97	1.04	1.23	1.64
1998	1	0.38	0.70	0.77	0.95	1.04	1.30	1.73
1999	1	0.51	0.77	0.79	0.96	1.06	1.25	1.75
2000	1	0.54	0.72	0.81	0.98	1.01	1.20	1.71
2001	1	0.61	0.73	0.81	0.97	1.02	1.25	1.62
2002	1	0.49	0.70	0.81	0.96	1.01	1.28	1.69
2003	1	0.53	0.69	0.80	0.96	1.05	1.22	1.61

[그림 IV-1] 평균소득 대비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배수



6. 교육수준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모의실험 결과

가구주 교육수준 분포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특정 기준연도의 교육수준 분포를 당해연도의 교육수준 분포 대신 사용하여 지니계수를 도출하여 보았다. 각 연도의 자료에서 두 번째 열은 당해연도의 지니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세 번째 열 이후에는 교육수준 분포를 기준연도의 분포로 고정시키고 계층별 소득수준만 변하는 시나리오하에서 재계산한 지니계수가 있다. 즉, 세 번째 열 이후의 지니계수를 두 번째 열과 비교하면 당해연도와 기준연도 사이에 순수히 가구주 교육수준의 변화로 인하여 소득분배가 얼마나 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표 IV-12> 실제 지니와 교육수준 분포를 기준연도 불변으로
상정한 지니값의 비교

	실제 지니	Pivot=85	Pivot=86	Pivot=87	Pivot=88	Pivot=89	Pivot=90	Pivot=91	Pivot=92	Pivot=93
1985	0.27563	0.27563	0.27764	0.27696	0.27504	0.27533	0.27796	0.27662	0.27988	0.28077
1986	0.27368	0.27168	0.27368	0.27255	0.27056	0.27097	0.27321	0.27182	0.27507	0.27619
1987	0.27986	0.27988	0.28122	0.27986	0.28013	0.28000	0.28161	0.28016	0.28242	0.28471
1988	0.27082	0.27153	0.27253	0.27082	0.27082	0.27093	0.27175	0.27052	0.27257	0.27466
1989	0.26957	0.26965	0.27107	0.27015	0.26977	0.26957	0.27200	0.27007	0.27335	0.27529
1990	0.25236	0.25071	0.25168	0.25072	0.25089	0.25005	0.25236	0.25066	0.25281	0.25456
1991	0.24189	0.24345	0.24424	0.24274	0.24248	0.24181	0.24316	0.24189	0.24322	0.24480
1992	0.24147	0.24122	0.24200	0.24084	0.24003	0.24004	0.24081	0.24006	0.24147	0.24237
1993	0.24242	0.24279	0.24323	0.24180	0.24139	0.24063	0.24158	0.24028	0.24118	0.24242
1994	0.24293	0.24316	0.24342	0.24159	0.24148	0.24069	0.24114	0.24002	0.24047	0.24188
1995	0.24280	0.24527	0.24550	0.24342	0.24263	0.24184	0.24195	0.24130	0.24107	0.24178
1996	0.24685	0.24827	0.24838	0.24633	0.24610	0.24507	0.24531	0.24429	0.24410	0.24525
1997	0.28102	0.28594	0.28621	0.28286	0.28136	0.28035	0.28007	0.27914	0.27857	0.27978
1998	0.31121	0.32239	0.32250	0.31834	0.31636	0.31406	0.31458	0.31262	0.31195	0.31266
1999	0.26726	0.26844	0.26881	0.26690	0.26700	0.26596	0.26687	0.26529	0.26614	0.26770
2000	0.27988	0.28152	0.28183	0.27928	0.27903	0.27766	0.27825	0.27732	0.27701	0.27819
2001	0.27222	0.27359	0.27418	0.27203	0.27166	0.27013	0.27156	0.27041	0.27054	0.27162
2002	0.27997	0.28086	0.28154	0.27923	0.27872	0.27733	0.27862	0.27733	0.27757	0.27894
2003	0.27747	0.28063	0.28100	0.27859	0.27781	0.27636	0.27712	0.27592	0.27561	0.27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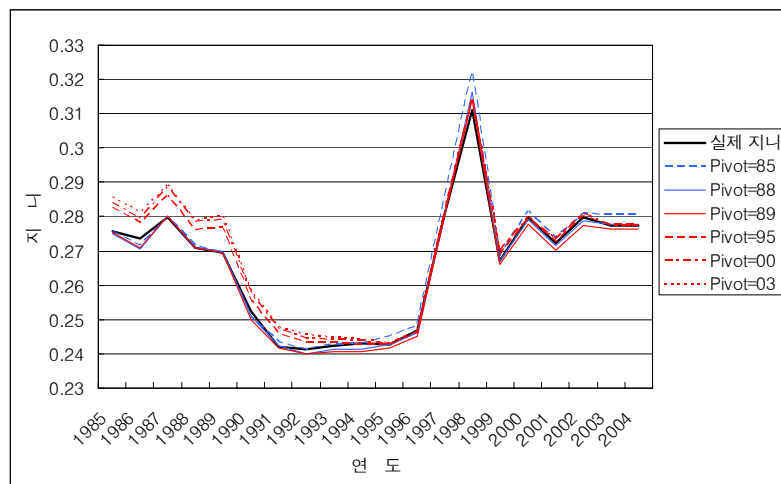
IV.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107

<표 IV-12>의 계속

	실제 지니	Pivot=94	Pivot=95	Pivot=96	Pivot=97	Pivot=98	Pivot=99	Pivot=00	Pivot=01	Pivot=02	Pivot=03
1985	0.27563	0.28167	0.28252	0.28289	0.28155	0.28271	0.28126	0.28380	0.28229	0.28220	0.28582
1986	0.27368	0.27747	0.27817	0.27860	0.27715	0.27806	0.27679	0.27939	0.27785	0.27780	0.28130
1987	0.27986	0.28539	0.28597	0.28676	0.28616	0.28499	0.28466	0.28830	0.28646	0.28690	0.28900
1988	0.27082	0.27552	0.27597	0.27681	0.27645	0.27486	0.27486	0.27833	0.27668	0.27714	0.27895
1989	0.26957	0.27571	0.27667	0.27722	0.27628	0.27661	0.27548	0.27908	0.27695	0.27713	0.28059
1990	0.25236	0.25476	0.25548	0.25606	0.25537	0.25508	0.25424	0.25740	0.25562	0.25591	0.25834
1991	0.24189	0.24567	0.24595	0.24655	0.24571	0.24508	0.24459	0.24722	0.24577	0.24605	0.24800
1992	0.24147	0.24322	0.24348	0.24390	0.24329	0.24303	0.24265	0.24447	0.24354	0.24365	0.24535
1993	0.24242	0.24338	0.24343	0.24388	0.24294	0.24261	0.24217	0.24416	0.24282	0.24301	0.24477
1994	0.24293	0.24293	0.24282	0.24347	0.24292	0.24146	0.24157	0.24379	0.24256	0.24295	0.24396
1995	0.24280	0.24321	0.24280	0.24345	0.24293	0.24117	0.24151	0.24292	0.24230	0.24264	0.24297
1996	0.24685	0.24656	0.24616	0.24685	0.24625	0.24440	0.24474	0.24652	0.24554	0.24596	0.24636
1997	0.28102	0.28238	0.28155	0.28238	0.28102	0.27916	0.27941	0.28116	0.28015	0.28052	0.28145
1998	0.31121	0.31563	0.31454	0.31576	0.31455	0.31121	0.31191	0.31404	0.31275	0.31336	0.31385
1999	0.26726	0.26868	0.26867	0.26948	0.26899	0.26711	0.26726	0.26999	0.26844	0.26894	0.27006
2000	0.27988	0.27957	0.27920	0.28020	0.27992	0.27694	0.27757	0.27988	0.27901	0.27963	0.27961
2001	0.27222	0.27271	0.27257	0.27347	0.27302	0.27067	0.27087	0.27321	0.27222	0.27277	0.27319
2002	0.27997	0.28040	0.28018	0.28107	0.28021	0.27820	0.27823	0.28070	0.27947	0.27997	0.28089
2003	0.27747	0.27819	0.27766	0.27850	0.27766	0.27549	0.27578	0.27755	0.27660	0.27706	0.27747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대체로 기준연도에서 멀어질수록 당해연도의 지니와 pivot 지니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구 연령분포가 급속히 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실 비교적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기준연도와 가까운 연도일수록 기준연도의 교육수준 분포와 유사할 것이다. 따라서 기준 연도의 교육수준 분포를 대입하여 구한 pivot 지니가 당해연도의 지니와 비슷할 것이다.

[그림 IV-2] 실제 지니와 교육수준 분포 불변 Pivot 지니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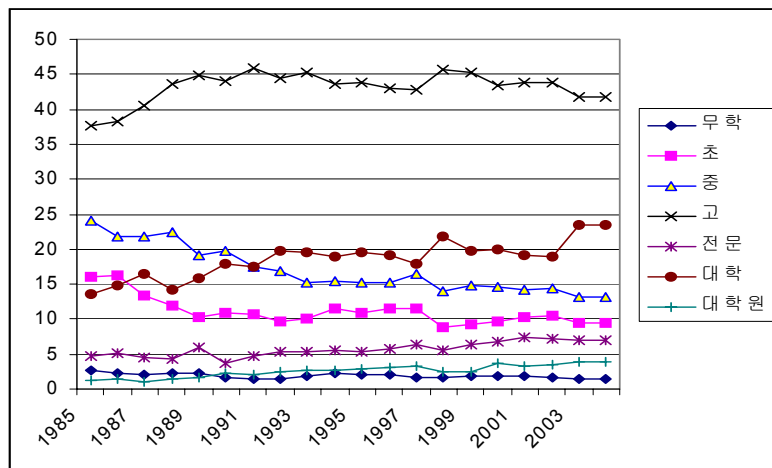
보다 유심히 자료를 검토하면 1988년 이전을 기준연도로 삼았을 때 2000년대의 pivot 지니값은 당해연도의 지니보다 크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림 IV-2] 참조). 즉, 1988년 이전에 비하여 가구주 교육수준 분포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989년 이후의 기준연도를 사용하여 도출한 2000년대의 pivot 지니값은 당해연도 지니와 거의 동일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1990년대 이후에는 교육수준 분포의 변화로 인

한 소득분배 형평성의 변화는 상당히 작은 편이며 오히려 적은 규모나마 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Yitzhaki 분해나 Pyatt 분해의 식이 시사하듯이, 지니계수의 변화 요인으로는 계층내 소득형평성, 계층간 소득형평성, 그리고 계층의 비중 또는 가중치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위에서 행한 pivot 지니 분석은 이 중에서 교육수준별 가구주 분포를 변화시킴으로써 구하였으므로, 1988년을 전후하여 pivot 연도의 효과가 다른 현상의 근저에는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계층 분포의 변화에 1988년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추측이 타당함은 [그림 IV-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는 고졸 가구주가 1985년의 37%에서 1988년의 44%까지 급속히 비중이 증가하다가 이후 45%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가구주 중 고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1980년대 후반에 이 계층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니계수 변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IV-3] 교육수준별 가구주 비중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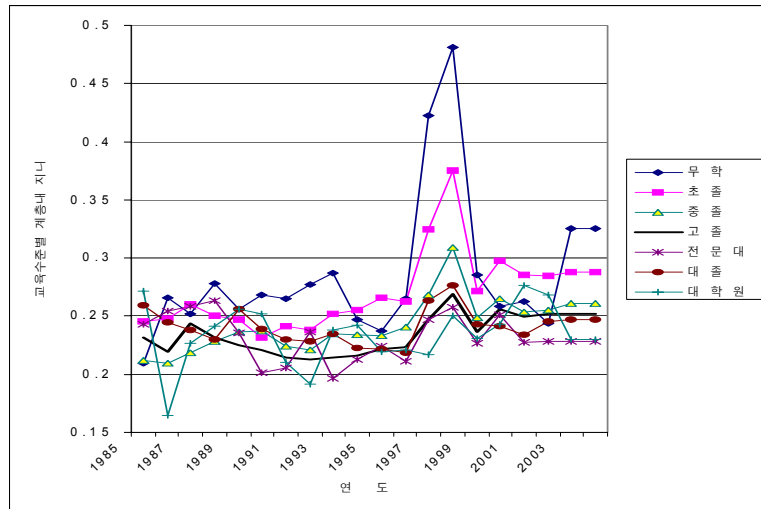
고졸 가구주 비중의 변화와는 대조적으로 중졸 및 초졸 가구주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학 가구주의 비중이 18년의 관측 기간에 걸쳐 사실상 불변인 점도 눈에 띈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 비중은 전반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초졸과 중졸 가구주 비중은 199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동 기간에 발생한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 하락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저학력 가구주의 비중은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 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함으로써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가 상승하도록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7. 교육수준별 계층내 및 계층간 소득분배의 변화

이상의 논의에서는 지니계수의 변화 중 가구주의 학력 분포의 변화로 설명되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지니계수의 분해에서 가구주의 학력분포, 즉 교육수준별 계층의 가중치의 변화 이외에도 계층내 및 계층간 지니의 변화 역시 지니계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계층내 지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IV-4]에 제시된 가구주 교육수준별 계층내 지니의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계층내 지니가 다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정 가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과 다르기보다는 유사한 집단을 자신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간주하기 쉽다고 보았을 때, 같은 집단내에서의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사실은 집단간 소득격차가 벌어진 경우보다도 그 가구가 체감하는 소득분배 악화의 정도가 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4] 가구주 교육수준별 계층내 지니의 추이



다음으로 각각의 교육수준별로 계층내 지니의 변화를 보기로 하자. 우선 고졸 가구주 계층을 보면 대체로 전체 가구의 지니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985년 이후 외환위기까지 지속적으로 지니계수가 하락하다가 외환위기 때 급증하고, 위기 이후에는 1980년대 초·중반의 수준으로 복귀하여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고졸 가구주의 비중이 약 45%에 달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와 같이 고졸 가구주 계층의 지니계수의 변화추이가 전체 가구의 지니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없다.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가구주 계층의 지니를 살펴보면 대체로 고졸 가구주 계층의 지니계수와 비슷한 수준에서 역시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학력 가구주 계층에 관한 계층내 지니는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으므로, 계층내 지니의 변화보다는 계층간 지니의 영향이 보다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학력 가구주 계층의 지니계수를 보면 고졸 이상 가구주 계층의

지니와는 대조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고졸 이상 가구주 계층에 비해 지니계수가 높은 편이며, 따라서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수록 계층내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졸 이상 가구주 계층의 지니는 1985년 이래 외환위기 직전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무학, 초졸 및 중졸 등 저학력 가구주 계층의 지니계수는 전 관측기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도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지니계수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상승기조가 다시 이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지니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은 앞서 <표 IV-7>의 Yitzhaki 분해 및 <표 IV-8>의 Pyatt 분해에서 계층내 지니계수의 요인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던 결과와 일치한다.

저학력 가구주 계층의 지니계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은 물론 학력이 낮은 데 따른 소득의 불안정성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전적으로 학력에 기인한 것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선형적으로 연령이 젊은 계층보다 고연령 세대로 갈수록 학력분포가 열악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저학력 계층내의 소득분배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결과에는 가구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도 생각할 수 있다. 앞서 [그림 III-5]와 [그림 III-6] 및 <표 III-5>에서 보았듯이, 연령이 높을수록 지니계수가 높으므로, 저학력 가구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이 때문에 지니계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교육 수준별 가구주 계층마다 연령분포를 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4]에서 추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환위기 당시의 각 계층의 지니계수의 변화 양상이다. 외환위기 당시 전 계층에 걸쳐 소득에 심한 타격을 입고 전반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지니계수가 폭등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²⁴⁾. 그런데 [그림 IV-4]를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7~1998년의 2년 동안 지니계수가 폭등하면서도 교육수준에 따라 타격의 정도가 뚜렷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지니계수의 상승폭이 크며, 이러한 학력수준별 순위에 다만 예외적으로 전문대졸 가구주 계층의 지니계수가 고졸 계층보다 높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저학력 계층 안에서도 무학, 초졸, 중졸 가구주 계층의 차이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계층이 우선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기서도 저학력 가구주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연관되어서, 전 관측기간중 교육수준별·계층별 계층내 지니의 추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 계층을 고졸 계층, 전문대 이상 고학력층, 중졸 이하 저학력층 등 크게 3계층으로 나누면,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계층일수록 계층내 소득형평성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층내 지니의 학력수준별 서열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관측되나, 이 기간에는 대졸계층이 고졸보다 계층내 지니가 높은 현상 등 일부 예외도 관측된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학력수준별 계층내 지니 서열화는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무학, 초졸, 중졸 순의 서열화가 매우 뚜렷해서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같은 계층 안에서도 소득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층간 지니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위하여 계층간 지니를 따로 계산하여 구하는 것보다, 각 계층의 상대소득의 추이를 그대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앞서 제시했던 [그림 IV-1]을 다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24) <표 III-3>의 지니계수 추정결과와 통계청의 지니계수 추정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에는 지속적이고 뚜렷하게 계층간 상대소득 격차가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대 이상 대학원까지 고학력층에서 이 현상이 매우 뚜렷하며, 저학력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미미해 보이면서도 중졸 가구주의 상대소득이 고졸 가구주와 1990년대 초반 한때 거의 격차가 없어질 정도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당시 미숙련 노동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대폭 상승했던 사실과도 부합된다²⁵⁾.

앞서 [그림 IV-3]에서 1990년대 초반에 무학 및 초졸 가구주 비중의 감소가 전반적인 지니계수 감소에 기여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그림 IV-1]에서 제시된 계층간 상대소득 변화의 추이와 상반되지 않는다. 또한 동 기간에 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상대적인 증가는 상대소득이 높은 계층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지니계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그림 IV-1]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고학력 계층의 상대소득이 줄고 있으므로, 동 계층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해도 오히려 전반적인 지니계수는 하락할 것임을 시사한다²⁶⁾.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는 계층별 상대소득에서 고학력층의 상대소득이 다소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특별한 추세가 관측되지 않는다.

25) 노동부 등을 비롯하여 1980년대에는 학력간 임금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1990년대에는 정체상태를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본 연구결과도 시기적으로 2~3년 정도의 시차가 있지만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고학력화로 인해 상대소득 격차가 작은 고학력층의 비중이 증가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니계수가 작아진다. 물론 동태적으로 보면 고학력화가 진행될 경우 고학력층의 이질성이 다소 증가하여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저학력층의 이질성이 축소되어 이들의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학력간 이질성의 차이가 존재하여 저학력층의 지니계수가 고학력층의 지니계수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한 고학력화가 진행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동태적으로도 지니계수가 작아진다. 물론 대체효과에 의한 각 학력계층내의 지니계수 변화가 없다는 정태분석의 결과보다는 지니계수가 작아지는 효과가 작을 것임은 물론이다.

8.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이상 본장의 논의를 요약하면, 1980년대 중반 이래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연관지어 살펴볼 때, 소득분배 구조 변화의 양상과 원인별로 대략 4기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대략 1980년대 후반으로서, 이 기간중 지니계수의 급격한 하락은 초·중졸 가구주 비중의 급감 및 이에 상응하는 고졸 가구주 비중의 증가로서 주로 설명된다. 이어 제2기는 1990년 초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기간으로서, 지니계수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하락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이는 가구주 학력이 서서히 고학력 위주로 바뀌고 아울러 교육계층간 상대소득의 격차가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데 기인하였다. 요약하자면, 제1, 2기를 합하여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간주할 때, 이 기간에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를 굳이 세분하자면 1980년대 후반에는 가구주 학력분포의 급속한 변동이, 1990년대 초반에는 학력계층간 상대소득 격차의 빠른 감소가 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그 근거에 작용한 주요 정책수단은 달랐을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제3기는 좁게 보아서 1997년과 1998년 두 해에 걸친 외환위기 기간으로서, 전 계층에 걸쳐 소득이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특히 눈에 띄는 사실은 환란으로 인한 타격의 정도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의 이러한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서열화 현상은 환란 이후인 제4기에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4기의 특징 중 또 하나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외환위기 직전과 비교하여 교육수준의 분포나 교육수준별 상대소득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수준별로 계층내 소득격차가 커짐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환란 이전에 비하여

지니계수가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준거집단 내의 소득분배가 악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소득형평성 악화의 체감 정도는 더 클 수도 있다.

끝으로 정책측면에서 4기에 걸친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순히 해석하였을 경우, 제1기와 제2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물리적인’ 정부정책이 주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과거부터 꾸준히 고등교육²⁷⁾ 확대 정책을 견지한 결실로 1980년대 후반에 소득형평성 제고를 달성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제2기에서는 주로 계층간 상대소득 격차 감소를 통하여 소득형평성 제고를 달성하였는데, 이 역시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세·재정 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인 제4기에서는 교육수준 분포의 급속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제4기에서는 계층간 상대소득 수준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위적 재분배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더 이상 좁히기에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의 유인과 구조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 사료된다.

적어도 교육요인을 놓고 보면, 1980년대 초·중반 이후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기간에서와 같이 정부정책이 소득분배 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던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동적으로는 교육문제로 인해 소득분포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는 있다.

다른 조건을 무시한다면 고학력층내에서의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일견 고학력층 위주로 학력분포를 조정한다면 소득분배 구조를 다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

27)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지칭한다.

다. 그렇지만 고학력화를 통한 추가적인 상대소득 격차 축소효과는, 고학력화로 인해 초래되는 제반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작용을 고려해 볼 때 결코 크지 않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전 학력계층에 걸쳐 계층내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학력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보다는 실효성 있고 대상별 변별력이 있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고학력화를 통한 소득격차 축소정책은 과거에는 효과적이었음에 분명하지만 변화된 현실에서는 더 이상 매력적인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래의 교육정책이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 근거하여 향후에도 교육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재분배를 도모하는 정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⁸⁾.

28)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빈곤의 세습 탈피를 위해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더 유효할 수 있다.

V. 맞벌이가구 비중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본장에서는 도시가계조사자료와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맞벌이가구의 분포와 특성,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 정책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면 농어가 등 일부만을 제외하고 있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사실상 이용가능한 표본이 1996년과 2000년의 2개 연도에 국한되어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축적과정과 방법론에서 나타나는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 도시가계조사자료보다 열위에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양자간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두 가지 자료를 모두 분석한다. 다만 두 자료는 자료의 축적방법과 포괄범위 등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소득추정치 등의 절대수준이 차이가 남에 유의하기 바란다.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 소득 관련 사항은 취업근로자가구에 대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무직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경우에 가구소득을 추정하더라도 맞벌이 여부에 대해서는 주어진 정보로 추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에는 맞벌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논의한다.

1. 소득분포의 특징 : 도시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가. 맞벌이가구의 분포

도시가계조사자료 중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경향은 가구주의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고학력층의 맞벌이가구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고학력층의 맞벌이가구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그림 V-1]을 보면 명백하다. 맞벌이가구 비율의 상승은 고학력층에서 두드러진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일견 고학력층에서 맞벌이 비율의 상승추세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지니계수의 변화추이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는 학력간 상대소득 격차가 축소되었다. 고학력화와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학력비중 비중 조정을 통한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 고학력화는 상대소득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지녔다. 따라서 당시에 비록 맞벌이가구 비율이 상승하면서 상대소득 격차가 확대되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상대소득 격차 축소 효과가 함께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소득격차를 확대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시기에 고학력화가 진행되지 않고 순수히 맞벌이가구의 비중만 변화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IV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이미 학력수준간 소득격차보다 학력간 상대소득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학력과 결부시켰을 경우에 맞벌이가구 비율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V-1> 학력수준별 맞벌이가구의 비중(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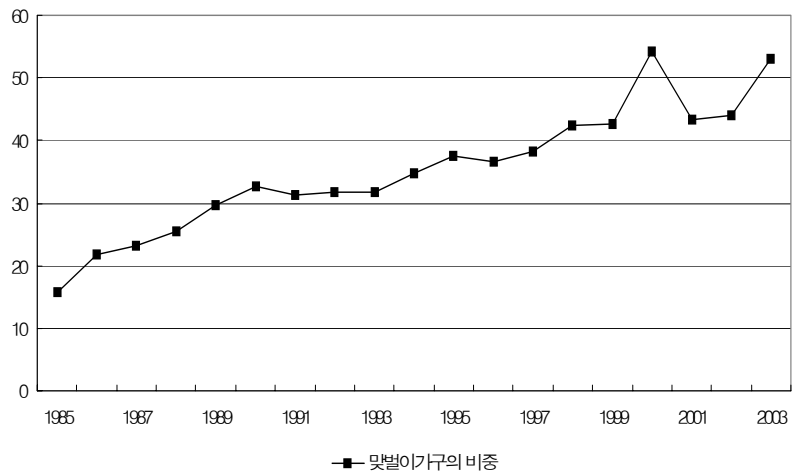
(단위: %)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대학	대학원	평균
1982	n.a.	n.a.	n.a.	n.a.	n.a.	n.a.	n.a.	15.92
1983	n.a.	n.a.	n.a.	n.a.	n.a.	n.a.	n.a.	16.99
1984	n.a.	n.a.	n.a.	n.a.	n.a.	n.a.	n.a.	16.40
1985	20.90	27.67	20.73	12.53	13.13	6.84	5.29	15.74
1986	39.69	28.69	31.22	19.49	16.48	11.65	11.14	21.86
1987	30.63	35.20	34.58	18.56	13.37	13.01	19.38	23.07
1988	29.61	35.11	39.37	22.92	14.27	10.15	32.83	25.58
1989	21.17	51.16	42.27	28.30	16.26	15.07	12.57	29.72
1990	45.97	46.83	44.21	30.08	30.39	20.23	17.03	32.57
1991	23.54	44.41	43.40	29.52	17.75	22.60	14.54	31.24
1992	22.27	45.48	46.33	29.20	14.72	25.40	18.89	31.75
1993	7.49	44.64	45.27	29.60	24.67	23.74	30.50	31.73
1994	19.52	51.33	50.54	32.52	17.28	25.15	30.44	34.79
1995	31.12	46.67	49.17	36.30	26.32	32.52	34.03	37.57
1996	26.53	39.45	46.79	36.44	36.85	31.18	29.12	36.67
1997	16.15	44.32	48.17	36.31	36.41	33.82	32.47	38.15
1998	41.09	54.62	50.76	42.10	43.77	37.29	35.96	42.39
1999	40.91	47.33	51.20	43.92	37.14	38.15	36.23	42.72
2000	62.97	49.42	60.60	54.89	54.21	48.38	66.27	54.10
2001	13.16	45.67	49.19	42.63	45.99	41.19	42.20	43.30
2002	28.50	43.74	51.41	45.70	39.53	40.83	35.57	43.90
2003	48.16	45.82	56.00	54.66	53.40	51.20	52.39	52.96

V. 맞벌이가구 비중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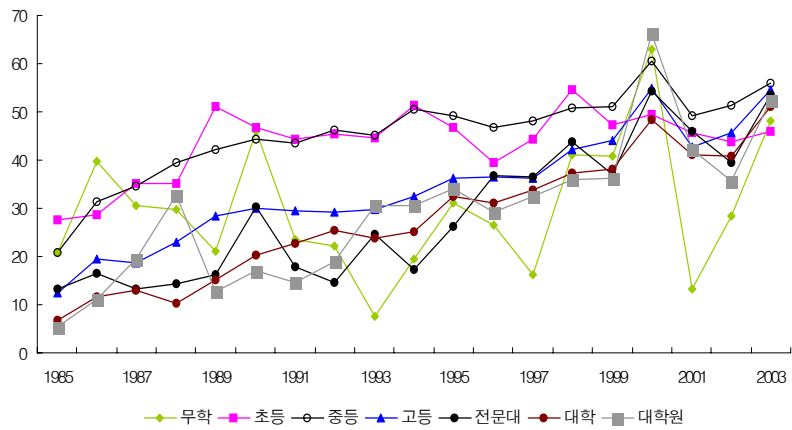
[그림 V-1] 맞벌이가구 비중의 변화추이(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그림 V-2] 학력수준별 맞벌이가구의 비중(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전체적으로 도시가구 중 취업근로자가구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990년대 말에는 경제위기라는 극히 예외적인 경제현상으로 인해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취업근로자가구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초과현상(overshooting)이 나타났다. 취업근로자가구 비율의 하락현상은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1~3분위의 저소득층에서는 여전히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취업근로자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표 V-2>~<표 V-4> 참조).

취업근로자가구의 비율이 하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가운데 실업률 상승,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라 무직가구 비중이 증가하였던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업률의 상승과 노인인구 비중의 급상승은 무직가구의 비중 상승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취업근로자가구 비율이 두드러지게 하락한 현상은 실업률 상승과 인구의 노령화와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²⁹⁾.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이 다시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예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노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실업률이 현 수준보다 구조적으로 더 낮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취업근로자가구 비율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최소한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29) 이는 저소득층에서 무직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에서 무직가구가 증가한 것은 예전부터 저소득층이었던 가구가 무직가구화한 경우도 있으며 중소득층 이상의 소득층에서 무직가구화하면서 저소득층에 새로 편입된 가구도 포함한다.

<표 V-2> 취업근로자가구 중 소득계층별 비맞벌이가구의 비중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82	91.05	80.11	82.88	84.32	76.74	82.67	87.04	88.19	90.60	77.18	84.08
1983	79.20	81.60	83.35	84.88	80.63	82.04	81.37	83.76	89.96	84.03	83.01
1984	91.43	90.14	78.44	80.01	80.81	76.93	84.68	81.33	87.67	83.65	83.60
1985	83.57	85.76	82.80	87.17	79.59	79.90	79.24	87.71	90.56	85.67	84.26
1986	86.88	84.40	79.51	73.63	75.81	67.65	68.98	77.02	85.95	81.95	78.14
1987	75.80	73.59	76.26	81.19	72.58	67.50	76.49	78.73	87.57	80.49	76.93
1988	79.00	71.74	75.68	76.30	73.14	72.74	69.54	69.49	82.22	74.27	74.42
1989	77.12	66.16	61.13	71.25	65.04	65.36	74.45	72.10	79.01	72.06	70.28
1990	77.70	72.14	62.20	68.59	57.38	56.47	67.80	76.23	71.54	66.67	67.43
1991	79.10	74.73	69.35	71.95	64.10	62.02	61.42	70.03	68.64	66.33	68.76
1992	82.26	78.37	69.76	66.92	63.83	68.05	54.87	67.90	65.96	64.47	68.25
1993	88.66	80.33	67.47	67.48	69.15	67.07	67.58	63.82	61.22	50.90	68.27
1994	74.73	76.49	69.09	65.57	62.50	60.74	60.30	64.97	63.35	57.08	65.21
1995	84.75	68.69	66.06	62.97	58.09	60.93	58.44	64.04	55.09	50.32	62.43
1996	85.16	76.47	66.66	59.98	63.43	65.89	55.99	59.22	51.01	54.39	63.33
1997	86.81	79.73	77.25	60.07	65.07	60.39	52.43	53.74	50.60	55.14	61.85
1998	71.83	82.97	65.77	64.14	53.76	63.47	60.10	53.11	50.35	39.24	57.61
1999	73.67	67.12	65.62	70.66	61.08	52.11	50.87	51.84	54.77	38.26	57.28
2000	73.69	59.23	53.79	47.13	44.89	42.76	41.03	37.84	39.92	29.72	45.90
2001	69.61	71.04	70.10	58.66	58.47	53.05	51.96	50.48	46.37	46.84	56.70
2002	84.16	65.64	68.26	57.65	50.97	52.37	49.16	48.54	54.39	39.09	56.10
2003	72.72	69.11	51.04	53.3	41.14	32.78	52.29	40.86	42.78	32.50	4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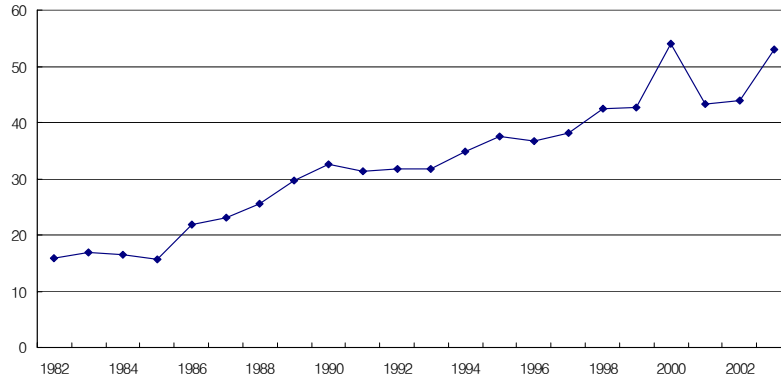
<표 V-3> 취업근로자가구 중 소득계층별 맞벌이가구의 비중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82	8.95	19.89	17.12	15.68	23.26	17.33	12.96	11.81	9.40	22.82	15.92
1983	20.80	18.40	16.65	15.12	19.37	17.96	18.63	16.24	10.04	15.97	16.99
1984	8.57	9.86	21.56	19.99	19.19	23.07	15.32	18.67	12.33	16.35	16.40
1985	16.43	14.24	17.20	12.83	20.41	20.10	20.76	12.29	9.44	14.33	15.74
1986	13.12	15.60	20.49	26.37	24.19	32.35	31.02	22.98	14.05	18.05	21.86
1987	24.20	26.41	23.74	18.81	27.42	32.50	23.51	21.27	12.43	19.51	23.07
1988	21.00	28.26	24.32	23.70	26.86	27.26	30.46	30.51	17.78	25.73	25.58
1989	22.88	33.84	38.87	28.75	34.96	34.64	25.55	27.90	20.99	27.94	29.72
1990	22.30	27.86	37.80	31.41	42.62	43.53	32.20	23.77	28.46	33.33	32.57
1991	20.90	25.27	30.65	28.05	35.90	37.98	38.58	29.97	31.36	33.67	31.24
1992	17.74	21.63	30.24	33.08	36.17	31.95	45.13	32.10	34.04	35.53	31.75
1993	11.34	19.67	32.53	32.52	30.85	32.93	32.42	36.18	38.78	49.10	31.73
1994	25.27	23.51	30.91	34.43	37.50	39.26	39.70	35.03	36.65	42.92	34.79
1995	15.25	31.31	33.94	37.03	41.91	39.07	41.56	35.96	44.91	49.68	37.57
1996	14.84	23.53	33.34	40.02	36.57	34.11	44.01	40.78	48.99	45.61	36.67
1997	13.19	20.27	22.75	39.93	34.93	39.61	47.57	46.26	49.40	44.86	38.15
1998	28.17	17.03	34.23	35.86	46.24	36.53	39.90	46.89	49.65	60.76	42.39
1999	26.33	32.88	34.38	29.34	38.92	47.89	49.13	48.16	45.23	61.74	42.72
2000	26.31	40.77	46.21	52.87	55.11	57.24	58.97	62.16	60.08	70.28	54.10
2001	30.39	28.96	29.90	41.34	41.53	46.95	48.04	49.52	53.63	53.16	43.30
2002	15.84	34.36	31.74	42.35	49.03	47.63	50.84	51.46	45.61	60.91	43.90
2003	27.28	30.89	48.96	46.70	58.86	67.22	47.71	59.14	57.22	67.50	52.96

[그림 V-3] 취업근로자가구 중 소득계층별 맞벌이가구의 비중
(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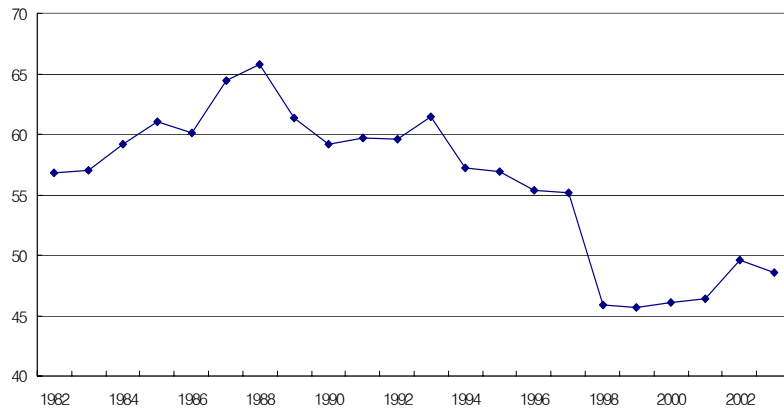


<표 V-4> 소득계층별 취업근로자가구의 비율(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계
1982	4.99	5.85	6.52	5.90	5.28	5.61	5.66	6.08	5.60	5.31	56.81
1983	5.24	5.68	5.91	6.03	6.37	5.92	5.80	5.73	5.07	5.27	57.02
1984	6.02	6.97	6.44	5.75	5.58	5.96	5.35	5.74	5.79	5.58	59.17
1985	6.06	6.06	6.20	5.86	6.69	6.44	5.03	5.36	7.05	6.27	61.01
1986	5.76	6.45	5.39	6.42	6.57	6.26	5.61	5.43	5.73	6.46	60.09
1987	6.42	6.15	7.03	7.03	6.03	7.03	5.94	6.64	5.99	6.24	64.48
1988	6.82	6.99	6.45	7.06	7.00	7.12	6.07	6.15	6.12	6.01	65.81
1989	6.46	6.75	6.28	5.98	6.06	6.03	5.96	6.50	5.72	5.60	61.34
1990	5.58	5.67	5.98	6.58	6.37	5.89	6.05	5.40	5.62	6.03	59.15
1991	6.04	6.08	6.29	5.99	6.23	6.15	5.98	5.74	5.47	5.78	59.74
1992	5.70	6.06	5.81	5.98	5.87	6.04	5.67	6.23	6.25	5.96	59.57
1993	5.78	6.14	6.20	6.44	6.30	5.86	6.15	6.36	6.13	6.04	61.40
1994	5.13	5.25	5.73	5.39	5.69	5.72	5.92	6.25	6.08	6.06	57.23
1995	4.62	5.95	5.74	5.22	5.90	5.78	6.40	5.69	5.64	5.93	56.87
1996	4.96	5.59	5.23	5.41	5.08	5.42	5.58	5.96	6.28	5.86	55.38
1997	1.91	5.24	5.12	6.08	6.06	5.94	6.06	6.42	6.30	6.00	55.14
1998	0.58	2.71	4.59	4.81	5.40	5.45	5.46	5.52	5.62	5.72	45.85
1999	3.53	3.53	4.36	4.07	4.00	4.80	4.87	5.50	5.86	5.15	45.67
2000	3.44	4.07	4.18	4.91	4.75	4.89	5.07	4.82	5.38	4.52	46.04
2001	3.89	4.09	4.11	4.61	4.39	4.35	4.93	5.03	5.17	5.77	46.35
2002	3.88	4.57	4.78	5.09	4.75	4.87	4.97	5.37	6.03	5.32	49.63
2003	3.03	4.25	4.00	5.08	5.02	5.26	4.95	5.25	6.02	5.66	48.52

[그림 V-4] 소득계층별 취업근로자가구의 비중(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약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벌이가구의 비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고소득층과의 상대소득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소득층에서는 이미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맞벌이가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전개할 경우 고소득층보다는 중·저소득층에서 맞벌이가구의 비율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맞벌이가구의 육성은 곧 상대소득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V-5> 맞벌이가구 대 비맞벌이가구의 점유율
 상대비(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배)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82	0.10	0.25	0.21	0.19	0.30	0.21	0.15	0.13	0.10	0.30	0.19
1983	0.26	0.23	0.20	0.18	0.24	0.22	0.23	0.19	0.11	0.19	0.20
1984	0.09	0.11	0.27	0.25	0.24	0.30	0.18	0.23	0.14	0.20	0.20
1985	0.20	0.17	0.21	0.15	0.26	0.25	0.26	0.14	0.10	0.17	0.19
1986	0.15	0.18	0.26	0.36	0.32	0.48	0.45	0.30	0.16	0.22	0.28
1987	0.32	0.36	0.31	0.23	0.38	0.48	0.31	0.27	0.14	0.24	0.30
1988	0.27	0.39	0.32	0.31	0.37	0.37	0.44	0.44	0.22	0.35	0.34
1989	0.30	0.51	0.64	0.40	0.54	0.53	0.34	0.39	0.27	0.39	0.42
1990	0.29	0.39	0.61	0.46	0.74	0.77	0.48	0.31	0.40	0.50	0.48
1991	0.26	0.34	0.44	0.39	0.56	0.61	0.63	0.43	0.46	0.51	0.45
1992	0.22	0.28	0.43	0.49	0.57	0.47	0.82	0.47	0.52	0.55	0.47
1993	0.13	0.24	0.48	0.48	0.45	0.49	0.48	0.57	0.63	0.96	0.46
1994	0.34	0.31	0.45	0.53	0.60	0.65	0.66	0.54	0.58	0.75	0.53
1995	0.18	0.46	0.51	0.59	0.72	0.64	0.71	0.56	0.82	0.99	0.60
1996	0.17	0.31	0.50	0.67	0.58	0.52	0.79	0.69	0.96	0.84	0.58
1997	0.15	0.25	0.29	0.66	0.54	0.66	0.91	0.86	0.98	0.81	0.62
1998	0.39	0.21	0.52	0.56	0.86	0.58	0.66	0.88	0.99	1.55	0.74
1999	0.36	0.49	0.52	0.42	0.64	0.92	0.97	0.93	0.83	1.61	0.75
2000	0.36	0.69	0.86	1.12	1.23	1.34	1.44	1.64	1.51	2.36	1.18
2001	0.44	0.41	0.43	0.70	0.71	0.88	0.92	0.98	1.16	1.13	0.76
2002	0.19	0.52	0.47	0.73	0.96	0.91	1.03	1.06	0.84	1.56	0.78
2003	0.38	0.45	0.96	0.88	1.43	2.05	0.91	1.45	1.34	2.08	1.13

나. 맞벌이가구 대 비맞벌이가구의 소득분포

취업근로자가구의 연간 평균 총소득은 2003년 현재 3,794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맞벌이가구의 평균총소득은 4,083만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3,470만원보다 약 18% 정도 높다. 1980년대 후반에는 비맞벌이가구의 총소득 수준이 맞벌이가구보다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 20여년 동안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비맞벌이가구보다 더 높은 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추세적으로는 소득상대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80년대 말만 하더라도 저소득층에서 맞벌이가구 비율이 높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고소득층에서의 맞벌이가구 비율이 함께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견 맞벌이가구 비율이 높아지면 고소득층이 두터워져 상대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런 현상이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에 집중된다면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현상, 즉 소득계층별 상대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비맞벌이가구 소득의 2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배우자 이외의 가구원 소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과, 주소득자가 아닌 배우자의 취업형태가 반드시 전면취업(full-time)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부분취업(part-time)의 경우도 허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³⁰⁾. 이 중 첫 번째 요인은, 가구주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들 중 취업자 수가 반드시 맞벌이가구의 비맞벌이가구의 2배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가구원들의 소득이 2배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맞벌이가구라고 하더라도 주소득자 배우자의 취업형태가 부분취업의 경우라면 전면취업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비맞벌이가구 소득의 2배 수준에 이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30) 가구주가 부분취업한 경우도 있다.

V. 맞벌이가구 비중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129

<표 V-6> 취업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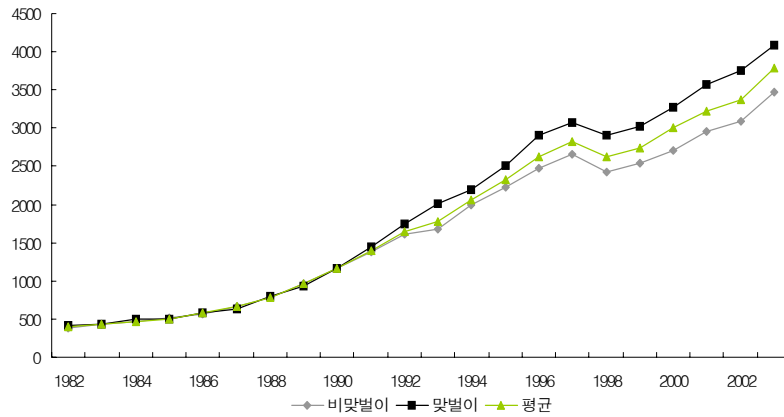
(단위: 만원, 배)

	비맞벌이가구(A)	맞벌이가구(B)	취업근로자 평균	상대비(B/A)
1982	388 (333)	413 (268)	392 (323)	1.07
1983	428 (364)	435 (283)	429 (350)	1.02
1984	467 (395)	500 (315)	473 (382)	1.07
1985	508 (430)	491 (328)	505 (414)	0.97
1986	572 (471)	583 (374)	574 (450)	1.02
1987	666 (532)	634 (398)	659 (501)	0.95
1988	778 (629)	796 (506)	783 (597)	1.02
1989	969 (768)	930 (586)	957 (714)	0.96
1990	1157 (912)	1166 (746)	1160 (858)	1.01
1991	1371 (1055)	1451 (905)	1396 (1008)	1.06
1992	1605 (1238)	1738 (1108)	1647 (1197)	1.08
1993	1670 (1297)	2004 (1227)	1776 (1275)	1.20
1994	1997 (1502)	2196 (1343)	2066 (1447)	1.10
1995	2221 (1682)	2510 (1525)	2330 (1623)	1.13
1996	2475 (1843)	2901 (1793)	2631 (1825)	1.17
1997	2653 (1933)	3077 (1856)	2815 (1903)	1.16
1998	2421 (1989)	2898 (1814)	2623 (1915)	1.20
1999	2534 (2050)	3027 (1893)	2745 (1983)	1.19
2000	2712 (2118)	3268 (2062)	3013 (2088)	1.21
2001	2955 (2302)	3569 (2192)	3221 (2254)	1.21
2002	3085 (2404)	3749 (2274)	3377 (2347)	1.22
2003	3470 (2792)	4083 (2683)	3794 (2734)	1.18

주: () 안은 가구주의 평균소득임.

[그림 V-5] 취업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표 V-7>에서 보듯이 가구주의 소득평균은 비맞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조금 더 높다. 2003년을 예로 들면 비맞벌이가구의 가구주 평균소득은 2,792만원으로 맞벌이가구의 2,683만원보다 109만원 많다. 2003년 현재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평균소득이 921만원이다. 비맞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간의 평균소득 차이가 613만원임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두 가구유형간의 소득평균 차이보다 크다. 두 가구유형 사이에 가구주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때 맞벌이가구의 배우자 평균소득이 가구유형간 평균소득 차이보다 더 큰 것은 두 가구유형 사이에 가구주 및 배우자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의 경우(대부분 자산소득 등으로 구성) 비맞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V. 맞벌이가구 비중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131

<표 V-7> 취업근로자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의 평균소득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비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전체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	배우자
1982	333	0	268	92	323	15
1983	364	0	283	100	350	17
1984	395	0	315	125	382	20
1985	430	0	328	109	414	17
1986	471	0	374	140	450	31
1987	532	0	398	166	501	38
1988	629	0	506	194	597	50
1989	768	0	586	194	714	58
1990	912	0	746	231	858	75
1991	1055	0	905	291	1008	91
1992	1238	0	1108	355	1197	113
1993	1297	0	1227	482	1275	153
1994	1502	0	1343	510	1447	177
1995	1682	0	1525	582	1623	218
1996	1843	0	1793	636	1825	233
1997	1933	0	1856	692	1903	264
1998	1989	0	1814	683	1915	290
1999	2050	0	1893	708	1983	303
2000	2118	0	2062	631	2088	341
2001	2302	0	2192	862	2254	373
2002	2404	0	2274	948	2347	416
2003	2792	0	2683	921	2734	488

다. 맞벌이가구 대 비맞벌이가구의 세부담 분포

1) 소득세

위에서 보았듯이 맞벌이가구의 총소득은 비맞벌이가구보다 높다. 그러나 소득세 부담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 등을 통해 일정액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만큼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과세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소득에 대해 누진적인 모습을 가지게 한다. 그 밖에 세율구조 또한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증가율에 비해 소득세 증가율이 더 높은 누진과세의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도 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부의 합산소득 수준이 동일한 경우라면 단일소득자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단일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1회 밖에는 허용받지 못하는 반면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와 납세자의 인적 특성에 기초한 각종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단일소득자에 비해 과세소득금액이 작아져 이들의 소득세 부담이 더 작아지기 때문이다³¹⁾.

2003년 현재 맞벌이가구의 소득은 비맞벌이가구보다 18% 정도

31) 예를 들어 단일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근로소득이 4천만원으로 동일하고 맞벌이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각각 2천만원이라고 하자. 이때 2003년도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총 1,585만원(근로소득공제 1,275만원, 기본공제 200만원, 소수자추가공제 50만원, 표준공제 60만원)으로 근로소득과세표준은 2,415만원이 된다. 반면에 맞벌이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소득공제 총액은 1,285만원(근로소득공제 1,025만원, 기본공제 100만원, 소수자추가공제 1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으로 과세표준은 715만원이며 배우자도 동일하게 과세표준 금액이 715만원이다. 따라서 두 가구의 근로소득 총액은 각각 4천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은 단일가구의 경우 2,415만원으로 맞벌이가구의 1,430만원보다 많게 된다.

높다. 그러나 소득세 부담은 가구당 평균 152만원으로 서로 동일하다. 비록 맞벌이가구의 평균소득이 비맞벌이가구보다 높지만, 소득세 부담은 양자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전술하였듯이 맞벌이가구의 소득은 1980년대 후반의 3개년을 제외하고는 비맞벌이가구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소득세 부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오히려 1984~1995년, 그리고 1998년 등 지난 22년중 13년 동안 비맞벌이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더 높았으며, 1982~1983년, 1996~1997년, 2003년에는 세 부담이 거의 동일하였다. 다만 맞벌이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더 높았던 것은 1999~2002년의 4개년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총소득 수준은 비맞벌이가구가 더 높지만 소득세 부담은 반대의 경우가 많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소득세 부담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 즉 실효소득세부담률은, 지난 20여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항상 낮은 값을 시현하였다. 이는 주소득자의 배우자 소득이 양수인 경우를 맞벌이가구로 정의함에 따라 항상 나타나게 되는 결과임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의 역전현상 등은, 각 가구의 맞벌이에 대한 선택의 결과로서 실현된 소득을 기준으로 초래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득세 또는 기타의 세제로 인해 가구의 맞벌이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부나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데 대한 요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표 V-8> 취업근로자가구의 소득세 부담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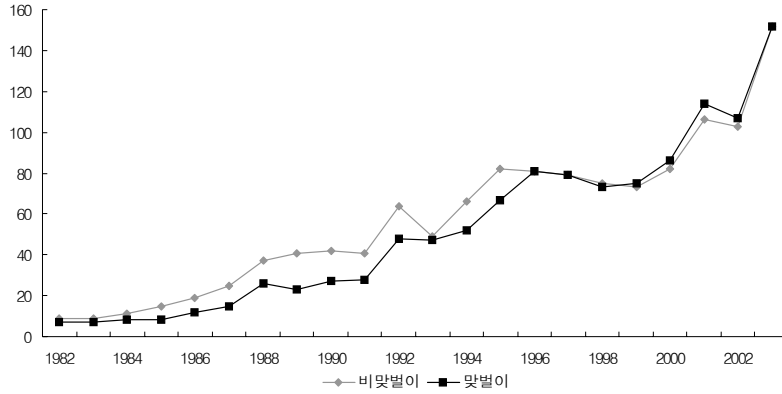
(단위: 만원, %)

	평균소득세부담			실효소득세부담률		
	평균	비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평균	비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982	9	9	7	2.22	2.31	1.79
1983	9	9	7	2.06	2.17	1.57
1984	11	11	8	2.27	2.39	1.69
1985	14	15	8	2.72	2.90	1.69
1986	17	19	12	2.96	3.24	1.99
1987	22	25	15	3.40	3.72	2.30
1988	34	37	26	4.37	4.76	3.27
1989	35	41	23	3.70	4.22	2.45
1990	37	42	27	3.22	3.67	2.31
1991	37	41	28	2.67	3.03	1.93
1992	59	64	48	3.57	3.98	2.77
1993	49	49	47	2.74	2.96	2.35
1994	62	66	52	2.98	3.33	2.38
1995	77	82	67	3.29	3.71	2.66
1996	81	81	81	3.08	3.27	2.80
1997	79	79	79	2.80	2.97	2.57
1998	74	75	73	2.81	3.08	2.51
1999	74	73	75	2.68	2.86	2.47
2000	84	82	86	2.79	3.02	2.63
2001	109	106	114	3.40	3.59	3.18
2002	105	103	107	3.11	3.35	2.85
2003	152	152	152	4.00	4.38	3.71

V. 맞벌이가구 비중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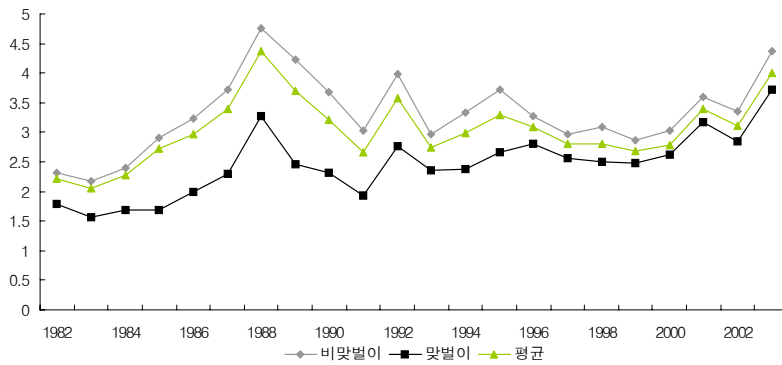
[그림 V-6] 취업근로자가구의 소득세 부담(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그림 V-7] 취업근로자가구의 실효소득세부담률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2) 소비세

소비세의 경우에도 일부의 몇몇 기간을 제외하고는 소득수준이 더 높은 맞벌이가구의 세부담 수준이 비맞벌이가구보다 대체로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실효소비세부담률은 비맞벌이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 V-10>에서 보듯이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취업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에서 보듯이 맞벌이가구에 대한 더미변수의 값이 음(-)의 값을 보임으로써 총소득 수준을 포함하여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평균적으로 맞벌이가구의 소비수준이 비맞벌이가구의 소비수준보다 낮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V-10>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3년을 기준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맞벌이가구의 평균소비지출은 비맞벌이가구보다 약 72만원 정도 작다. 그러므로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소비세 부담은 대체로 소비수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므로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동일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소비세 부담이 더 낮으며, 따라서 실효소비세부담률도 낮게 나타난다.

<표 V-9> 취업근로자가구의 소비세 부담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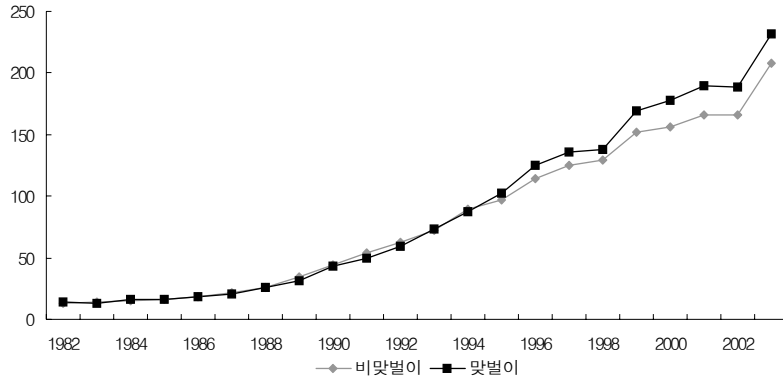
(단위: 만원, %)

	평균소비세부담			실효소비세부담률		
	평균	비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평균	비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982	13	13	14	3.44	3.47	3.32
1983	14	14	13	3.32	3.37	3.06
1984	15	15	16	3.26	3.29	3.14
1985	16	16	16	3.21	3.21	3.25
1986	18	18	18	3.17	3.19	3.09
1987	22	22	21	3.30	3.29	3.37
1988	26	26	26	3.31	3.34	3.20
1989	34	35	31	3.50	3.59	3.30
1990	44	44	43	3.77	3.81	3.69
1991	52	54	50	3.76	3.91	3.43
1992	61	62	59	3.69	3.83	3.40
1993	72	72	73	4.07	4.30	3.64
1994	88	89	87	4.28	4.46	3.95
1995	99	97	102	4.24	4.36	4.06
1996	118	114	125	4.49	4.62	4.30
1997	129	125	136	4.59	4.73	4.41
1998	132	129	138	5.05	5.32	4.75
1999	159	152	169	5.80	5.99	5.59
2000	168	156	178	5.58	5.75	5.46
2001	176	166	190	5.48	5.63	5.32
2002	176	166	189	5.21	5.38	5.04
2003	221	208	232	5.82	6.00	5.68

V. 맞벌이가구 비중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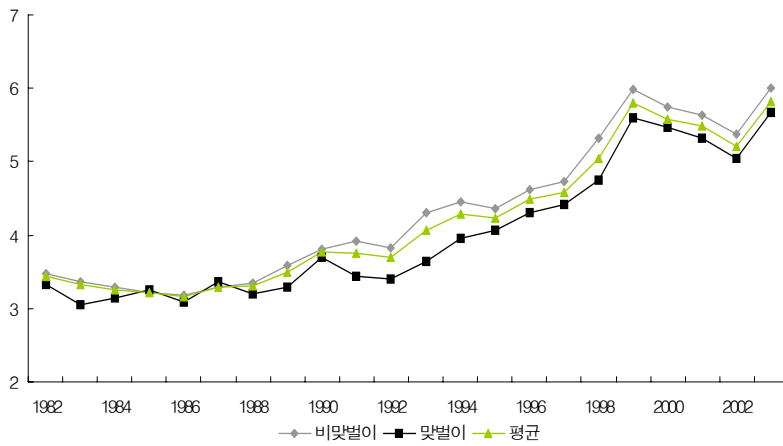
[그림 V-8] 취업근로자가구의 소비세 부담(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그림 V-9] 취업근로자가구의 실효소비세부담률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표 V-10> 소비함수의 추정결과(OLS, 도시가계조사자료 중 취업근로자가구 기준)

	1982년 [1033]	1983년 [1050]	1984년 [710]	1985년 [748]	1986년 [837]	1987년 [752]
상수	2.06493 (0.244)	8.54796 (0.854)	13.29103 (1.056)	-0.11670 (-0.008)	-8.29837 (-0.544)	31.01835 (1.843)
총소득	0.55970 (52.791)	0.51559 (44.524)	0.49995 (39.489)	0.57354 (42.829)	0.55247 (44.498)	0.47417 (39.820)
맞벌이 더미	-22.20700 (-3.239)	-32.66930 (-3.993)	-20.22110 (-1.892)	-20.40430 (9-1.81)	-37.33450 (-3.392)	-15.20370 (-1.285)
가구원 수	16.67720 (9.224)	18.74767 (8.723)	20.56066 (7.313)	17.60170 (5.450)	23.25820 (6.743)	25.57235 (6.501)
R ²	0.76522	0.69900	0.73057	0.74627	0.73888	0.72186
	1988년 [885]	1989년 [1347]	1990년 [1200]	1991년 [1227]	1992년 [1289]	1993년 [1346]
상수	-31.17730 (-1.498)	-9.28804 (-0.454)	-62.95780 (-2.015)	-75.19950 (-2.001)	2.96966 (0.074)	65.56754 (1.482)
총소득	0.57082 (46.731)	0.56840 (54.030)	0.57033 (40.673)	0.56662 (38.344)	0.54935 (41.929)	0.52116 (38.597)
맞벌이 더미	-50.3624 (-3.638)	-27.33350 (-2.118)	-71.08370 (-3.878)	-104.55230 (-4.685)	-122.81223 (-5.401)	-100.42025 (-3.701)
가구원 수	30.45965 (6.113)	34.8194 (7.055)	54.97622 (7.444)	66.01505 (7.292)	58.52532 (6.037)	57.24167 (5.168)
R ²	0.74978	0.73119	0.64083	0.61159	0.62424	0.57620
	1994년 [1964]	1995년 [1566]	1996년 [1602]	1997년 [1623]	1998년 [1935]	1999년 [1940]
상수	-3.19843 (-0.070)	176.21910 (3.978)	67.94460 (1.188)	72.21712 (1.378)	160.92490 (3.461)	164.30680 (3.202)
총소득	0.49188 (39.307)	0.46447 (42.247)	0.49604 (41.062)	0.47626 (44.102)	0.40348 (42.194)	0.44378 (43.333)
맞벌이 더미	-87.75750 (-3.297)	-72.17350 (-2.841)	-117.29181 (-3.661)	-46.02597 (-1.548)	-81.86013 (-3.188)	-52.76556 (-1.882)
가구원 수	96.00013 (8.765)	66.19089 (6.234)	95.88619 (6.653)	99.15590 (7.620)	112.06830 (9.532)	122.09001 (9.420)
R ²	0.58682	0.57565	0.56267	0.59609	0.53940	0.54702
	2000년 [2431]	2001년 [1937]	2002년 [1794]	2003년 [1940]		
상수	294.41640 (5.765)	177.85942 (3.21)	247.51590 (3.904)	423.52394 (6.159)		
총소득	0.37122 (46.917)	0.44276 (48.200)	0.38672 (39.221)	0.38701 (43.153)		
맞벌이 더미	-21.38037 (-0.787)	-30.23203 (-1.004)	-30.36361 (-0.892)	-71.88453 (-2.055)		
가구원 수	160.63268 (12.472)	149.64212 (10.272)	183.40705 (11.056)	167.20633 (9.303)		
R ²	0.53113	0.60266	0.52797	0.53977		

주: [] 안은 표본의 크기이고, () 안은 t값을 나타냄. 소비지출과 총소득은 만원 단위임.

3) 소득세와 소비세 계

도시가구의 소득세와 소비세를 합산한 조세부담은 소득수준이 더 높은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보다 더 높다. 그러나 소득세와 소비세 모두 맞벌이가구의 실효세부담률이 더 낮았기 때문에 소득세와 소비세를 합산한 경우에도 맞벌이가구의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은 비맞벌이가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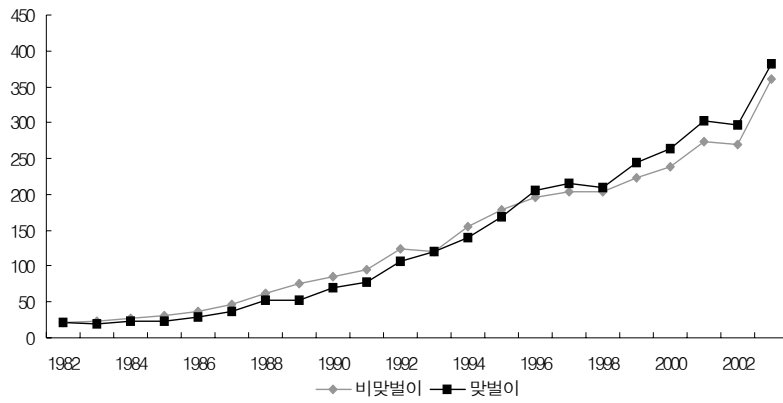
<표 V-11> 취업근로자가구의 소득세+소비세 부담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

	평균소득세+소비세부담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		
	평균	비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평균	비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982	22	22	21	5.66	5.77	5.11
1983	23	24	20	5.38	5.54	4.64
1984	26	27	24	5.53	5.68	4.83
1985	30	31	24	5.93	6.11	4.95
1986	35	37	30	6.13	6.43	5.08
1987	44	47	36	6.71	7.00	5.67
1988	60	63	52	7.68	8.10	6.48
1989	69	76	53	7.21	7.80	5.74
1990	81	86	70	7.00	7.48	6.01
1991	90	95	78	6.43	6.94	5.37
1992	120	125	107	7.26	7.81	6.17
1993	121	121	120	6.81	7.26	5.99
1994	150	156	139	7.25	7.79	6.33
1995	175	179	169	7.52	8.07	6.72
1996	199	195	206	7.57	7.88	7.09
1997	208	204	215	7.40	7.70	6.98
1998	206	203	210	7.86	8.40	7.26
1999	233	224	244	8.48	8.85	8.06
2000	252	238	264	8.37	8.77	8.09
2001	286	273	303	8.88	9.22	8.50
2002	281	269	296	8.32	8.73	7.89
2003	373	360	383	9.82	10.38	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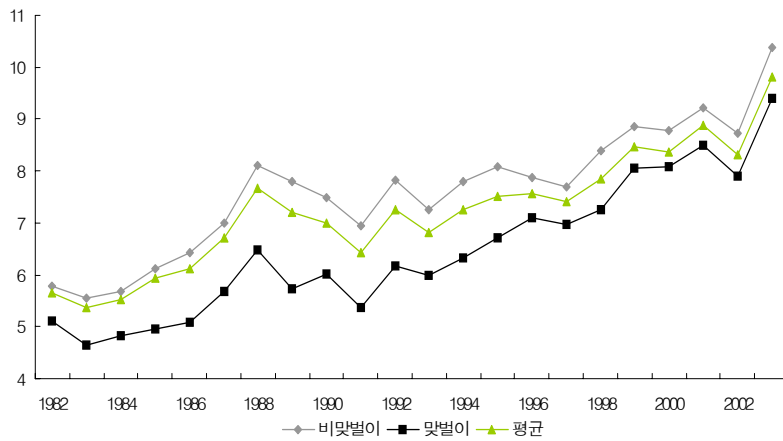
[그림 V-10] 취업근로자가구의 소득세+소비세 부담(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그림 V-11] 취업근로자가구의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라. 상대소득분포의 비교 :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1)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비교

도시가구 중 취업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³²⁾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취업근로자가구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들과 소득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무직가구 등을 포함할 경우에 비해 상대소득 격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표 V-12>에서 보듯이 취업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가 도시가구 전체보다 대체로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1982~1983년, 1988년, 1998년 2001년의 5년간을 제외하고는 지난 20여년간 취업근로자가구 가운데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지니계수가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계층내 상대소득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 각각의 지니계수간의 차이는, 비록 전자가 후자보다 대체로 조금 더 작은 값을 가지지만, 매우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차이가 점차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그 차이가 계속 커진다면 맞벌이가구가 좀더 동질적인 형태로, 비맞벌이가구는 상대적으로 좀더 이질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³³⁾. 물론 이러한 결론은 아직 관찰된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32) 4개 분기 모두 무직인 완전무직가구와 1개 분기 이상 3개 분기 이하 동안 무직인 부분무직가구를 포괄한다.

33) 본문에서 ‘동질적’ 또는 ‘이질적’으로 표현한 것은 상대적 개념에 입각하여 사용한 것임에 유의하기 바란다. 즉,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 전반에 걸쳐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 모두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위에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였던 바는 만약 맞벌이가구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좀더 동질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면 비맞벌이가구와의 지니계수 차이가 위에서처럼 축소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논리를 이용하여 비맞벌이가구의 구성이

확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는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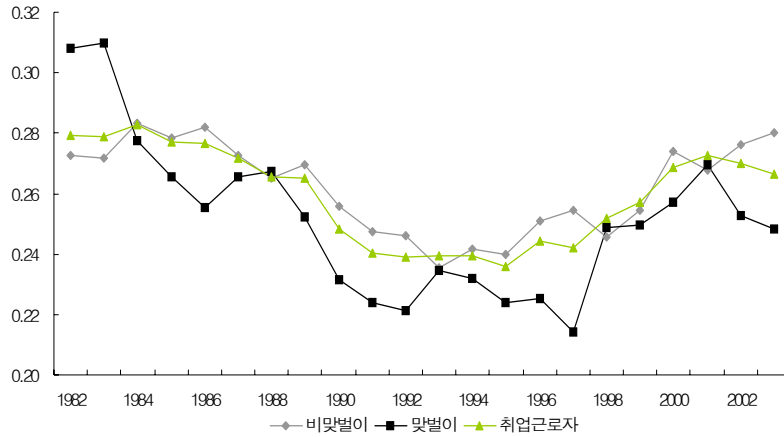
후술하는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상대소득 격차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만약 중·저소득층에서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소득분배 격차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후술하듯이 여성노동공급 증진을 위한 정책과 육아보육지원 등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표 V-12> 소득획득 형태별 총소득 지니계수(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비맞벌이(A)	맞벌이(B)	취업근로자	전체	A - B
1982	0.27280	0.30801	0.27920	0.28678	-0.03521
1983	0.27162	0.30992	0.27879	0.28270	-0.03830
1984	0.28318	0.27729	0.28276	0.28109	0.00589
1985	0.27841	0.26567	0.27683	0.27563	0.01274
1986	0.28193	0.25523	0.27678	0.27368	0.02670
1987	0.27284	0.26550	0.27181	0.27986	0.00734
1988	0.26491	0.26735	0.26569	0.27082	-0.00245
1989	0.26945	0.25244	0.26503	0.26957	0.01700
1990	0.25584	0.23131	0.24819	0.25236	0.02453
1991	0.24726	0.22398	0.24042	0.24189	0.02327
1992	0.24605	0.22129	0.23900	0.24147	0.02476
1993	0.23549	0.23455	0.23922	0.24242	0.00094
1994	0.24176	0.23197	0.23947	0.24293	0.00979
1995	0.23998	0.22374	0.23579	0.24280	0.01624
1996	0.25075	0.22533	0.24448	0.24685	0.02542
1997	0.25444	0.21413	0.24209	0.28102	0.04031
1998	0.24573	0.24878	0.25163	0.31121	-0.00305
1999	0.25448	0.24970	0.25700	0.26726	0.00477
2000	0.27381	0.25715	0.26878	0.27988	0.01666
2001	0.26775	0.26933	0.27276	0.27222	-0.00157
2002	0.27611	0.25269	0.26991	0.27997	0.02342
2003	0.28001	0.24825	0.26626	0.27747	0.03175

상대적으로 이질성이 높아졌다고 서술한 것임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림 V-12] 소득획득 형태별 총소득 지니계수(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2)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의 효과 : 모의실험을 통한 분석

<표 V-1>에서 보듯이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 사이의 상대비중 변화는 소득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여년 동안 맞벌이가구의 비중 변화가 소득분배(상대소득 격차)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부존자원의 변화, 즉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표본가중치의 상대비중을 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모의실험은 먼저 맞벌이가구(또는 비맞벌이가구)의 표본 비율(맞벌이가구 표본의 표본추출가중치의 합)을 어떤 한 시점(기준 연도)의 값으로 고정시키는 가상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지니계수의 변화효과를 살펴본다. 즉, 각 연도의 소득자료는 그대로 사용하되 이에 대응하는 각 표본관측치의 표본추출가중치를 해당연도의 것이 아니라 기준연도의 표본가중치로 대체하였을 경우에 가상적으로 나타나는 지니계수 값의 변화효과를 분석한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1982년 수준에서 고정시켜버린다면 그 이후에 소득분배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였을지를 추정해 보는 데 유용하다.

두 번째 모의실험은 소득분포를 어떤 한 시점(기준연도)에 고정시키고 맞벌이가구(또는 비맞벌이가구)의 표본비중을 각 연도의 실제값에 맞추어 변동시켜 보는 것이다. 이는 기준시점에서 맞벌이가구 또는 비맞벌이가구의 특성을 각각 고정시킨 상태에서 각각의 구성비를 조정하였을 때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경우 표본구성비의 변화는 실제로 실현된 각 연도의 표본비중 값을 이용한다.

이상의 방법으로 분석한 모의실험 결과는 다음의 <표 V-13>~<표 V-15>에 정리된 바와 같다.

먼저 1982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한 경우를 살펴보자. 도시가구 중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지니계수는 첫 번째 열에 정리되어 있다. 두 번째 열은 맞벌이가구(또는 비맞벌이가구)의 표본비중이 1982년의 값에 고정되어 있다는 가상적인 상황하에서 각 연도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지니계수이다. 이 경우 1980년대 전반과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기간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맞벌이가구의 표본비중을 고정시켰을 경우에 얻게 되는 지니계수가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만약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지금처럼 상승하지 않았다면 소득격차가 더 확대되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를 거꾸로 해석한다면 지난 20여년간 진행되어 온 맞벌이가구의 비율 상승은 소득격차를 완화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셋째 열은 1982년의 취업근로자가구에 대한 지니계수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넷째 열은 1982년의 소득자료는 그대로 두되 맞벌이가구(또는 비맞벌이가구)의 표본비중을 각 연도의 실제 값으로

변화시켰을 경우에 예상되는 가상적인 지니계수 값을 나타낸다. 그 결과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의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1982년 소득기준의 지니계수는 그 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당시에는 소득분포 구조상 맞벌이가구의 분포가 대부분 저소득층에 치우쳐 집중되어 있었으며 중소득층 이상에서는 예외적으로 최고소득층인 10분위에서만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은 구조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단적인 소득분포 구조하에서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은 필연적으로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따라서 1982년에는 맞벌이가구가 저소득층에서의 최저생계보장 등을 위한 생계형 맞벌이와 소수의 전문직 고소득직종에서의 여성노동공급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맞벌이가구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직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노동공급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때 지난 20여년간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은 소득격차를 축소시켜 주는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82년에는 아직 맞벌이 구조의 소득획득 형태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직 그러한 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V-13>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기준연도=1982년)

	각 연도의 지니계수	기준연도(1982)의 표본비중을 이용한 각 연도의 지니계수	기준연도(1982)의 지니계수	각 연도의 표본비중을 이용한 기준연도(1982)의 지니계수
1982	0.27920	0.27920	0.27920	0.27920
1983	0.27879	0.27835	0.27920	0.27963
1984	0.28276	0.28278	0.27920	0.27939
1985	0.27683	0.27681	0.27920	0.27913
1986	0.27678	0.27822	0.27920	0.28151
1987	0.27181	0.27217	0.27920	0.28198
1988	0.26569	0.26540	0.27920	0.28294
1989	0.26503	0.26714	0.27920	0.28450
1990	0.24819	0.25214	0.27920	0.28557
1991	0.24042	0.24382	0.27920	0.28507
1992	0.23900	0.24261	0.27920	0.28526
1993	0.23922	0.23791	0.27920	0.28526
1994	0.23947	0.24087	0.27920	0.28639
1995	0.23579	0.23851	0.27920	0.28741
1996	0.24448	0.24852	0.27920	0.28708
1997	0.24209	0.24980	0.27920	0.28762
1998	0.25163	0.24887	0.27920	0.28916
1999	0.25700	0.25634	0.27920	0.28928
2000	0.26878	0.27347	0.27920	0.29330
2001	0.27276	0.27049	0.27920	0.28949
2002	0.26991	0.27473	0.27920	0.28970
2003	0.26626	0.27670	0.27920	0.29290

다음의 <표 V-14>는 1993년을 기준연도로 한 경우의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1993년의 맞벌이가구 비중을 기준으로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고정시켰을 경우의 지니계수를 나타내는 둘째 열을 보면 1993년 이후 지니계수의 값이 본래의 값(첫째 열)보다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99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만약 이를 1993년 수준에서 억제하였다면 소득

격차가 지금보다 더 높아졌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1982년을 기준연도로 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1993년 이전의 경우를 보면 1980년대 초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맞벌이가구의 표본비중을 1993년으로 고정시킨 경우의 지니계수가 실제의 표본비중에 맞추어 놓았을 경우보다 그 값이 작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상대소득 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소득분포의 특성이 소득격차를 축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지니계수 값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맞벌이가구의 분포구조 변화가 명확하게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넷째 열을 보면 1982년부터 2003년까지 맞벌이가구의 표본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때 1993년의 소득분포에 의한 지니계수는 매우 완만하지만, 약간씩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1993년의 소득분포 역시 1982년에 비해 그 정도가 많이 약화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맞벌이가구의 확산이 직접적으로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맞벌이가구의 비중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효과는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후술하겠지만 가상적으로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조정함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모의실험을 수행해 본 결과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맞벌이가구의 비중 증가는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최근의 경제여건 및 소득분배 구조를 놓고 볼 때 맞벌이가구의 비중 증대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은 소득분배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로써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³⁴⁾.

<표 V-14>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기준연도=1993년)

	각 연도의 지니계수	기준연도(1993)의 표본비중을 이용한 각 연도의 지니계수	기준연도(1993)의 지니계수	각 연도의 표본비중을 이용한 기준연도(1993)의 지니계수
1982	0.27920	0.28526	0.23922	0.23791
1983	0.27879	0.28479	0.23922	0.23803
1984	0.28276	0.28217	0.23922	0.23796
1985	0.27683	0.27507	0.23922	0.23789
1986	0.27678	0.27432	0.23922	0.23852
1987	0.27181	0.27132	0.23922	0.23863
1988	0.26569	0.26586	0.23922	0.23883
1989	0.26503	0.26471	0.23922	0.23911
1990	0.24819	0.24839	0.23922	0.23926
1991	0.24042	0.24031	0.23922	0.23920
1992	0.23900	0.23900	0.23922	0.23922
1993	0.23922	0.23922	0.23922	0.23922
1994	0.23947	0.23972	0.23922	0.23936
1995	0.23579	0.23660	0.23922	0.23945
1996	0.24448	0.24555	0.23922	0.23943
1997	0.24209	0.24446	0.23922	0.23947
1998	0.25163	0.25087	0.23922	0.23954
1999	0.25700	0.25708	0.23922	0.23955
2000	0.26878	0.27215	0.23922	0.23941
2001	0.27276	0.27216	0.23922	0.23955
2002	0.26991	0.27235	0.23922	0.23956
2003	0.26626	0.27269	0.23922	0.23945

<표 V-15>에는 기준연도를 가장 최근인 2003년으로 고정시키고 각 연도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해 본 결과(들

- 34)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맞벌이가구 확대정책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기회 확대정책과 일부 중복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전자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 열) 대체로 1994년부터는 실제의 지니계수보다 작은 값을 시현한 반면에 1993년 및 그 이전 기간의 경우에는 실제의 지니계수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맞벌이가구의 비중 확대가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2003년의 소득자료를 대상으로 각 연도의 맞벌이가구 표본비중을 적용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해 보면(넷째 열)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작아질수록 지니계수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최근에는 맞벌이가구의 비중 확대가 상대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곤 한다. 그렇지만 맞벌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2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있다면 이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⁵⁾.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출을 통한 육아지원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한 육아비지출공제 확대 또는 탁아시설 설립·유지·관리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육아지원 등은 직접적으로 현재의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맞벌이가구들을 육아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여성노동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다

35) 물론 동학적(dynamic)인 측면에서는 맞벌이가구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 1인 가구의 비중 등이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맞벌이가구 정책에 대한 1인 가구의 비중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크고 또한 그러한 변화의 방향이 전체적인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충분히 커야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추측으로는 현실에서 그러한 결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줄 것이고, 이는 맞벌이가구의 비중확대를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육아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맞벌이 확대를 통한 소득격차 효과 외에도 저소득층 지원에 의한 육아비 부담 감소에 따른 소득격차 축소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예상된다³⁶⁾.

<표 V-15>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기준연도=2003년)

	각 연도의 지니계수	기준연도(2003)의 표본비중을 이용한 각 연도의 지니계수	기준연도(2003)의 지니계수	각 연도의 표본비중을 이용한 기준연도(2003)의 지니계수
1982	0.27920	0.29290	0.26626	0.27670
1983	0.27879	0.29307	0.26626	0.27645
1984	0.28276	0.28103	0.26626	0.27659
1985	0.27683	0.27247	0.26626	0.27674
1986	0.27678	0.26878	0.26626	0.27528
1987	0.27181	0.26990	0.26626	0.27498
1988	0.26569	0.26640	0.26626	0.27433
1989	0.26503	0.26120	0.26626	0.27324
1990	0.24819	0.24324	0.26626	0.27246
1991	0.24042	0.23543	0.26626	0.27283
1992	0.23900	0.23385	0.26626	0.27269
1993	0.23922	0.23945	0.26626	0.27269
1994	0.23947	0.23778	0.26626	0.27184
1995	0.23579	0.23337	0.26626	0.27104
1996	0.24448	0.24048	0.26626	0.27130
1997	0.24209	0.23622	0.26626	0.27087
1998	0.25163	0.25196	0.26626	0.26960
1999	0.25700	0.25651	0.26626	0.26950
2000	0.26878	0.26899	0.26626	0.26588
2001	0.27276	0.27290	0.26626	0.26933
2002	0.26991	0.26776	0.26626	0.26914
2003	0.26626	0.26626	0.26626	0.26626

36) 예를 들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크다.

3) 소득세 과세의 효과

소득세를 부과한 이후의 소득, 즉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추정해 본 결과는 <표 V-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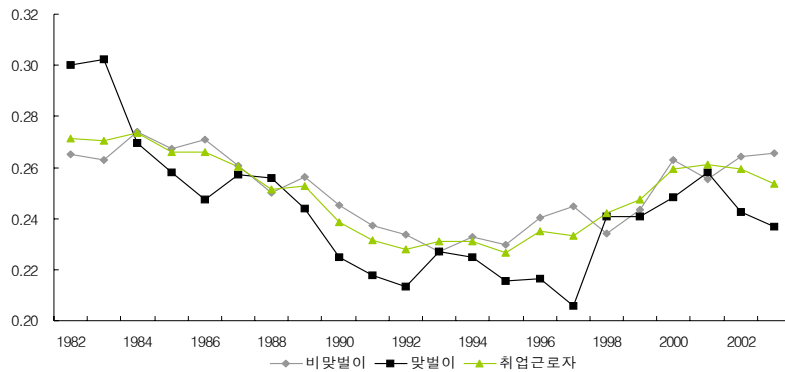
그 결과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보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값이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누진과세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표 V-16> 소득획득 형태별 가처분소득(총소득-소득세) 지니계수(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비맞벌이(A)	맞벌이(B)	완전취업 근로자	도시가구 전체	A-B
1982	0.26491	0.30001	0.27131	0.27683	-0.03510
1983	0.26301	0.30246	0.27033	0.27420	-0.03945
1984	0.27394	0.26936	0.27372	0.27176	0.00459
1985	0.26727	0.25821	0.26611	0.26508	0.00906
1986	0.27073	0.24722	0.26612	0.26354	0.02350
1987	0.26088	0.25694	0.26031	0.26902	0.00395
1988	0.24992	0.25569	0.25138	0.25866	-0.00577
1989	0.25606	0.24393	0.25264	0.25871	0.01214
1990	0.24515	0.22477	0.23864	0.24301	0.02038
1991	0.23698	0.21775	0.23137	0.23291	0.01923
1992	0.23356	0.21332	0.22789	0.23090	0.02024
1993	0.22679	0.22701	0.23121	0.23363	-0.00022
1994	0.23273	0.22473	0.23117	0.23409	0.00800
1995	0.22986	0.21543	0.22661	0.23378	0.01442
1996	0.24039	0.21646	0.23486	0.23820	0.02393
1997	0.24484	0.20560	0.23305	0.27201	0.03924
1998	0.23419	0.24054	0.24194	0.30251	-0.00636
1999	0.24350	0.24062	0.24719	0.25860	0.00288
2000	0.26295	0.24820	0.25922	0.27068	0.01475
2001	0.25522	0.25792	0.26102	0.26170	-0.00271
2002	0.26434	0.24263	0.25920	0.27044	0.02171
2003	0.26568	0.23673	0.25369	0.26689	0.02895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소득세를 과세한 이후의 비맞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사이의 지니계수 격차가 약간씩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맞벌이가구의 비중 증대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하는 데 기여하는 작용을 하였다는 분석결과와 함께 소득세의 과세가 비맞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사이의 소득격차를 축소시켜 준다는 점에서 소득분배 격차 축소효과를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13] 소득획득 형태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취업근로자가구, 도시가계조사자료)



2. 소득분포의 특징: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가. 맞벌이가구의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전체가구의 30.0%에서 32.3%로 소폭 상승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데 반해,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비록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수준이 50%를 다소 상회하고 있어 양자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첫째, 1인가구의 포함여부에 따라 발생한다. 1인가구는 본질적으로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0%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표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분석결과가 2인 이상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자료보다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둘째,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경우에는 무직가구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무직가구를 제외하고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직가구는 정의상 맞벌이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셋째,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서는 자영업자가구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는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공급 양상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가구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가구주 1인의 노동보다는 가구 전체 또는 최소한 부부가 함께 노동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맞벌이가구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가구주에게만 표시함으로써 비맞벌이가구로 분류되는 자영업자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자영업자가구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서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맞벌이가구는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대체로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비율도 1996년보다는 2000년이 대체로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자료가 2개 연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확정적으로 단언하기에는 보다 긴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긴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연구결과를 볼 때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상승추세에 있다고 결론을 짓더라도 크게 무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7> 교육수준별 맞벌이부부의 비중(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대학	대학원	평균
1996	6.42	26.35	35.98	30.50	30.49	31.38	27.93	29.96
2000	15.37	28.21	34.76	35.26	33.03	30.76	32.13	32.32

최근 들어 고소득층일수록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표 V-18> 참조). 만약 저소득층에서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득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경우와도 분석결과가 일치한다.

<표 V-18> 소득계층별 맞벌이가구의 비중(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p[1~10분위], %[계])

	1	2	3	4	5	6	7	8	9	10	계
1996	0.45	1.11	2.06	2.58	3.48	3.54	4.17	4.26	4.35	3.96	29.96
2000	1.21	1.42	2.30	2.86	3.30	4.02	4.11	4.47	4.32	4.30	32.32

주: 각 분위별 수치는 전체 표본구성 중에서 맞벌이가구가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냄. 예를 들어 1996년에는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총 29.96%인데 이 중 0.45%p가 1분위, 3.48%p가 5분위, 3.96%p가 10분위에 분포된 것을 나타냄. 따라서 각 분위별 수치에 10을 곱하면 각 분위별로 분위표본 내에서의 맞벌이가구 비중을 얻을 수 있으며, 각 분위별 수치를 합산하면 전체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얻을 수 있음.

V. 맞벌이가구 비중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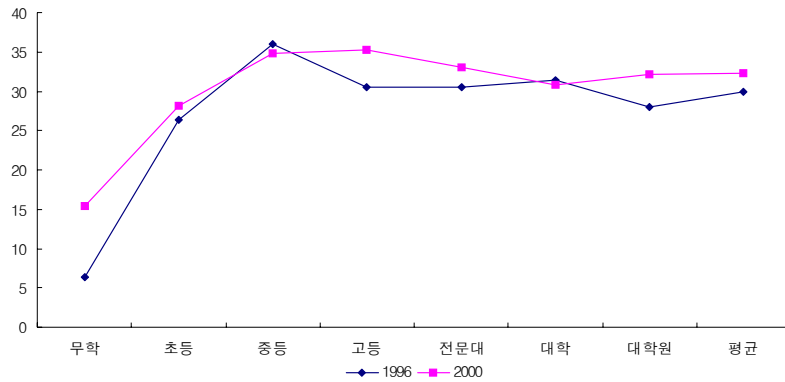
<표 V-19> 소득계층별 맞벌이가구 대 비맞벌이가구의 상대비(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96	0.05	0.12	0.26	0.35	0.53	0.55	0.71	0.74	0.77	0.66	0.43
2000	0.14	0.17	0.30	0.40	0.49	0.67	0.7	0.81	0.76	0.75	0.4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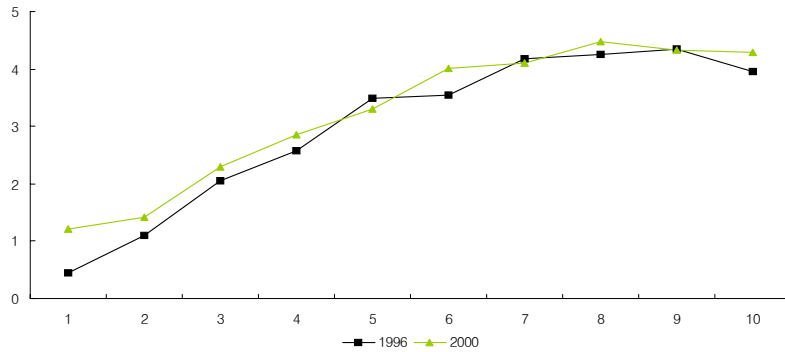
[그림 V-14] 교육수준별 맞벌이가구의 비중(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



[그림 V-15] 소득계층별 맞벌이가구의 비중(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



- 주: 1. 전체 표본가구중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1996년 29.96%, 2000년 32.32%임.
 2. 각 분위별 수치는 전체 표본구성 중에서 맞벌이가구가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냄. 예를 들어 1996년에는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총 29.96%인데 이 중 0.45%가 1분위, 3.48%p가 5분위, 3.96%p가 10분위에 분포된 것을 나타냄. 따라서 각 분위별 수치에 10을 곱하면 각 분위별로 분위표본 내에서의 맞벌이가구 비중을 얻을 수 있으며, 각 분위별 수치를 합산하면 전체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얻을 수 있음.

고소득층일수록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비맞벌이가구보다 높음을 시사한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은 2000년 현재 2,747만원인데 맞벌이가구는 3,219만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2,522만원보다 697만원 정도 많다. 비율로는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보다 약 30% 정도 소득수준이 높다.

<표 V-20>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평균소득
분포(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만원, 배)

	맞벌이(A)	비맞벌이(B)	평균	상대비(A/B)
1996	2,848	2,196	2,392	1.30
2000	3,219	2,522	2,747	1.28

나. 소득세 부담의 비교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특히 그 가운데 2000년도 자료의 경우에는 도시가계조사자료와 달리 연간 세부담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 조사자료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세 부담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소득세 부담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비맞벌이가구보다 높았다. 따라서 가구당 평균 소득세 부담액도 맞벌이가구가 비맞벌이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효소득세부담률 측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보다 더 높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는 맞벌이가구의 실효세부담률이 근소하게나마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2000년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V. 맞벌이가구 비중 증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157

이 중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맞벌이가구의 평균소득이 비맞벌이가구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구유형간의 실효세부담률 차이가 작다는 점은,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경우에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각종 소득공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가구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맞벌이가구의 경우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소득공제의 총액이 더 많게 되기 때문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V-21> 소득획득 형태별 소득세 부담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만원, %)

	평균소득세부담			실효소득세부담률		
	평균	비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평균	비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996	80	73	96	3.35	3.33	3.39
2000	83	77	95	3.03	3.07	2.96

다. 지니계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경우에도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맞벌이가구의 지니계수가 비맞벌이가구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는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도시가계조사자료는 2인 이상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한 지니계수가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경우보다 수치가 더 높은 것은 당연하다³⁷⁾.

37) 그 밖에도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읍·면지역 거주자를 제외하고 있으나 소비실태조사자료는 읍·면지역 거주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포함여부에 추가하여 자료의 포괄대상 범위가 더 크고 상대소득 격차도 더 큰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 기초한 경우 지니계수가 더 크게 나타난다.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보다 지니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도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 사이의 지니계수 차이는 소득세를 과세한 이후에 미소하게나마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 서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V-22> 지니계수(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세전소득 기준	비맞벌이(A)	맞벌이(B)	전체가구	A-B
1996	0.35037	0.25174	0.32565	0.09863
2000	0.42631	0.33455	0.40042	0.09176
세후소득 기준	비맞벌이(A)	맞벌이(B)	전체가구	A-B
1996	0.34302	0.24498	0.31822	0.09804
2000	0.41732	0.32631	0.39175	0.09100

<표 V-23>과 <표 V-24>에서는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조정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지니계수를 가상적으로 추정하였다. 아래의 두 표는 서로 대칭되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하나만 설명하더라도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편의상 <표 V-23>만을 살펴본다.

먼저 1996년과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 나타난 가구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각각 0.32565와 0.40042이다. 먼저 1996년의 맞벌이가구 비중이 2000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지니계수 중 둘째 열)에 의하면 2000년의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245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2000년에는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29.96%에서 32.32%로 소폭 상승하면서 지니계수는 0.40042에 머물렀기 때문에 1996~2000년 사이에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2.36%p 상승하면서 지니계수는 0.00203지니만

کم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의실험 결과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경우에도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상승하면 지니계수가 낮아짐으로써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도시가계조사자료와 달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경우에는 연간단위의 자료로 환산한 자료로서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기에는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연계하여 보면, 최소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이 소득불균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표 V-23>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기준연도=1996년)

	각 연도의 지니계수	기준연도(1996)의 표본비중을 이용한 각 연도의 지니계수	기준연도(1996)의 지니계수	각 연도의 표본비중을 이용한 기준연도(1996)의 지니계수
1996	0.32565	0.32565	0.32565	0.32565
2000	0.40042	0.40245	0.32565	0.32350

<표 V-24> 맞벌이가구 비중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효과 추정(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기준연도=2000년)

	각 연도의 지니계수	기준연도(2000)의 표본비중을 이용한 각 연도의 지니계수	기준연도(2000)의 지니계수	각 연도의 표본비중을 이용한 기준연도(2000)의 지니계수
1996	0.32565	0.32350	0.40042	0.40245
2000	0.40042	0.40042	0.40042	0.40042

3. 정책시사점

도시가계조사자료와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각기 자료축적방법과 분석대상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이 소득분배 격차를 완화시켜 주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녔던 것으로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과 2003년 사이에 도시가구의 취업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35.57%에서 52.04%로 19.39%p 상승하였으며, 지니계수는 0.27104에서 0.26626으로 0.00478지니p만큼 하락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만약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지니계수를 낮출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맞벌이가구의 육성·지원은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정책의 중요한 정책방안의 하나로서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만약 중·저소득층에서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이것 역시 소득분배 격차를 더욱 축소시키는 데 상당히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³⁸⁾.

위의 두 가지 논리를 기초로 할 때 맞벌이를 장려하는 정책은 곧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38) 저소득층일수록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낮은 만큼 맞벌이가구의 육성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맞벌이를 통해 일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내에서의 상대소득 격차를 확대시킨다. 반면에 소득계층간 상대소득 격차는 축소된다. 앞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후자의 절대치가 전자의 절대치보다 크기 때문에 맞벌이가구의 육성은 전체적인 상대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일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격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이 최상위 소득층으로 수직이동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맞벌이 문제는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육아보육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견해가 있다³⁹⁾. 그러므로 논의가 매우 단선적이기는 하지만 육아보육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면 이는 여성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맞벌이가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육아보육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체감하는 지원의 상대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맞벌이 장려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그만큼 육아보육 지원 등을 통한 맞벌이 장려가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 육아보육 지원은 그 자체로서도 재정지출 측면에서 간접적인 소득보조적인 지원의 형태를 띠는 만큼 이중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보육 장려를 위한 정책은 비단 육아보육 비용과 관련된 수요 측면에서의 직·간접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급측면에서도 유관 시설의 신설·유지·확대 등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의 사용자로 하여금 육아보육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등 유·무형의 형태로 의무를 지우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할 여지도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 추세 등과도 연계해 볼 때 여성노동력 공급 육성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39) 저자가 OECD의 DELSA(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여성노동공급 확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육아문제라는 것이 OECD 차원에서의 일반화된 견해라고 한다.

있다. 육아보육 지원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는 육아보육 시설 설치·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에 대해 비용공제 등과 같은 각종 세제지원 등과 함께 육아보육 시설에 대한 신설이나 확대 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육아보육 지원을 통한 맞벌이 장려 정책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 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한 탄력성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VI.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정책시사점

본장에서는 산업부문별 소득분배 및 세부담 구조의 변화추이⁴⁰⁾를 살펴보면서 정책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또한 산업부문을 기준으로 분할을 이루어 지니계수를 분해해 봄으로써 지니계수의 변인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 본다.

1. 산업부문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문을 다음과 같이 8개 부문으로 대분류하여 분석한다.

8개 부문 산업분류

- ① 광업
- ② 제조업
- ③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④ 건설업
- 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40) 소득세, 소비세 부담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소비수준 및 기타 인구학적 특성 등에 의존하므로 일견 산업부문별 세부담 분석이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부문별로 평균소득 수준 및 상대소득 분포, 학력, 가구원 수 등의 인구학적 특성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부문별 세부담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부문별로 소득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달리하는 가구의 구성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문별 세부담 분석을 통해 소득유형별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및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 ⑥ 운수·창고 및 통신업
- ⑦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
- ⑧ 기타

각 연도의 도시가계조사자료 또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각기 다른 산업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문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추적하여 고찰해 보기 위해서는 부문의 통합을 통한 단일비교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산업부문을 8개 부문으로 통합하였다⁴¹⁾.

2. 도시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본절에서는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가. 산업부문별 가구구성의 변화추이⁴²⁾

상기 분류에 의한 8개 산업부문 가운데 분류가 불분명한 기타부문을 제외하면, 제조업 부문의 가구구성비가 가장 높다. 제조업의 경우 1980년대에는 가구비중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제조업의 가구비중은 하락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제조업의 가구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1)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 1982~1992년 자료는 9개 산업부문, 1993~2000년 자료는 18개 부문, 2001년부터의 자료는 21개 부문으로 산업부문이 분류되어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경우에는 1996년의 경우 18개 부문, 2000년 자료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부문으로 세분류되어 있다. 산업분류 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8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재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42) 시계열적으로 각 산업부문별 산출의 변화를 보면 1차산업과 제조업 등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3차산업 및 정보산업 등의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보더라도 가구의 구성비와 그와 유사한 방향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정책시사점 165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가구비중이 높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가구비중은 1980년대에는 2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점유비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역시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10%대 중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건설업 부문은 1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가구비중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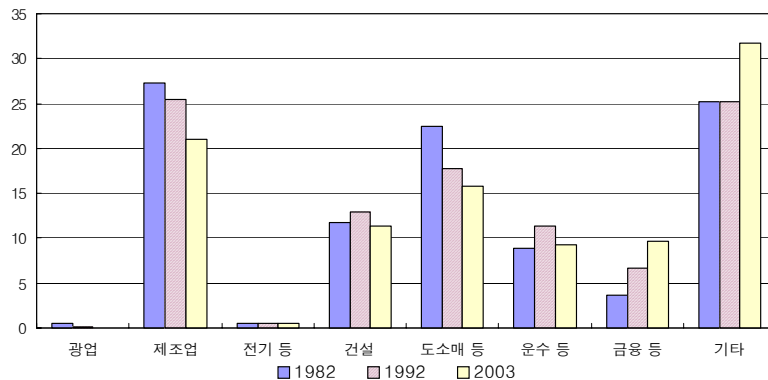
이와 반대로 도시가구 가운데 광업 부문과 전기·가스·수도 부문의 가구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그 밖에 운수·창고·통신과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은 최근 10%에 육박하는 점유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경우에는 가구점유비가 상승하고 있어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부문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부문별로 가구구성비가 변하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 부문의 가구구성비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산업부문의 다양화를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1] 산업부문별 가구구성비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표 VI-1> 산업부문별 가구구성비(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계
1982	0.46	27.26	0.50	11.71	22.43	8.84	3.63	25.18	100
1983	0.74	27.82	0.65	10.25	21.69	8.74	3.80	26.31	100
1984	1.31	28.73	0.57	11.63	21.04	7.87	3.99	24.86	100
1985	0.88	26.64	0.46	12.55	20.86	8.11	4.28	26.23	100
1986	0.89	27.63	0.61	10.18	19.84	8.54	4.92	27.39	100
1987	1.19	32.03	0.53	9.74	20.05	7.49	5.06	23.91	100
1988	0.77	31.28	0.50	11.11	20.05	8.17	4.57	23.54	100
1989	0.30	29.60	0.59	10.86	17.65	9.89	5.70	25.41	100
1990	0.35	28.04	0.67	11.22	17.14	10.45	5.19	26.95	100
1991	0.17	27.66	0.54	12.24	17.22	11.08	5.56	25.53	100
1992	0.16	25.50	0.48	12.91	17.79	11.34	6.65	25.18	100
1993	0.17	23.90	0.69	14.29	20.34	9.90	7.15	23.29	100
1994	0.32	23.45	0.63	13.64	21.21	9.22	6.85	24.40	100
1995	0.25	23.77	0.72	13.47	20.25	8.48	7.32	25.24	100
1996	0.19	22.10	0.50	13.56	21.21	8.43	7.87	25.62	100
1997	0.19	21.97	0.55	12.69	20.95	8.46	8.54	26.17	100
1998	0.14	20.67	0.41	11.13	20.07	9.24	8.50	29.50	100
1999	0.17	20.11	0.28	8.38	19.80	8.96	8.52	33.48	100
2000	0.11	20.32	0.26	9.54	19.77	8.56	10.05	31.05	100
2001	0.14	21.11	0.19	8.40	19.07	8.87	9.64	32.30	100
2002	0.17	19.81	0.25	9.42	19.67	8.75	10.07	31.60	100
2003	0.05	21.05	0.50	11.37	15.82	9.31	9.70	31.71	100

나. 산업부문별 소득분포

산업부문 중 평균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전기·가스·수도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현재 이 부문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4,990만원으로 도시가구의 평균소득 3,535만원보다 27.0% 정

도 높다. 이 부문이 최근 들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표 VI-2> 참조).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우리 경제구조가 정보화 체제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1990년대 말의 IT 산업을 위주로 한 증시의 폭발적 활황 현상은 그러한 경향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과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소득수준이 각각 3,857만원과 3,821만원으로 도시가구의 평균소득보다 각각 9.1%와 8.1% 정도씩 높다. 이 가운데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경우에는 분석대상 초기부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 중 하나였다. 다만 최근에는 전기·가스·수도 부문에 비해 신장세가 떨어지면서 순위 자리를 내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표 VI-3>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기·가스·수도 부문의 경우에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비가 전통적으로 1을 초과하는 대표적인 고소득 부문인데 최근 들어 상대소득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경우에는 상대소득비가 여전히 1을 상당히 크게 초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1980년대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광업부문의 경우에는 2003년의 평균 총소득이 3,011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도시가구의 평균소득에 14.8% 정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운수·창고·통신업, 건설업, 기타 부문은 평균소득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 산업부문별 평균소득 분포 추이(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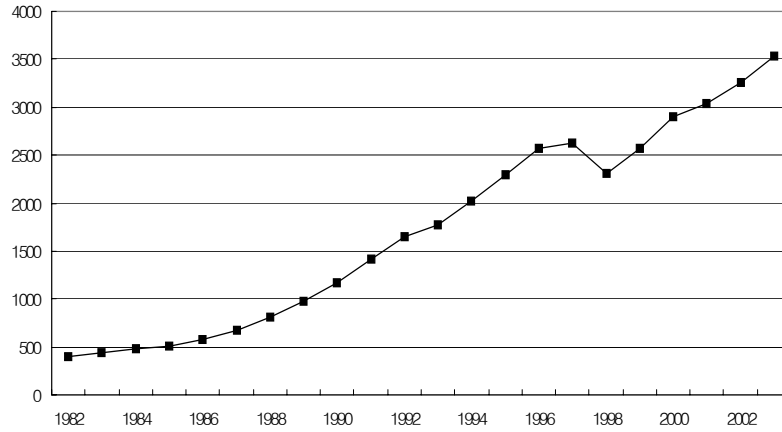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82	367	389	436	311	381	392	541	437	395
1983	433	430	435	357	423	442	495	464	433
1984	426	460	406	424	484	491	624	513	482
1985	389	496	579	402	498	507	628	545	503
1986	457	558	868	495	556	540	663	623	574
1987	548	656	749	551	668	716	748	731	673
1988	806	760	1,108	654	823	796	909	893	805
1989	952	933	1,045	855	987	966	1,191	1,047	981
1990	1,199	1,130	1,223	1,054	1,147	1,181	1,315	1,222	1,166
1991	1,718	1,382	1,526	1,298	1,402	1,404	1,541	1,480	1,413
1992	2,201	1,615	2,172	1,519	1,644	1,588	1,862	1,692	1,644
1993	1,951	1,718	1,858	1,694	1,766	1,751	1,973	1,847	1,777
1994	1,959	2,023	2,309	1,903	1,979	2,005	2,359	2,027	2,021
1995	2,315	2,254	2,619	2,225	2,210	2,347	2,680	2,328	2,300
1996	2,402	2,521	3,931	2,448	2,530	2,461	2,868	2,661	2,575
1997	2,340	2,709	4,670	2,590	2,673	2,695	2,956	2,362	2,630
1998	2,695	2,487	3,435	2,189	2,371	2,375	2,795	1,988	2,304
1999	2,387	2,651	3,355	2,436	2,496	2,593	2,928	2,497	2,571
2000	6,269	3,064	3,593	2,775	2,796	2,940	3,197	2,782	2,902
2001	3,172	3,094	2,965	2,948	2,946	3,302	3,237	2,944	3,038
2002	3,259	3,481	3,679	3,102	3,151	3,289	3,453	3,158	3,259
2003	3,011	3,857	4,990	3,304	3,338	3,534	3,821	3,410	3,535

주 : 2000년도 광업 부문의 소득평균은 특이관측치(outlier)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VI.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정책시사점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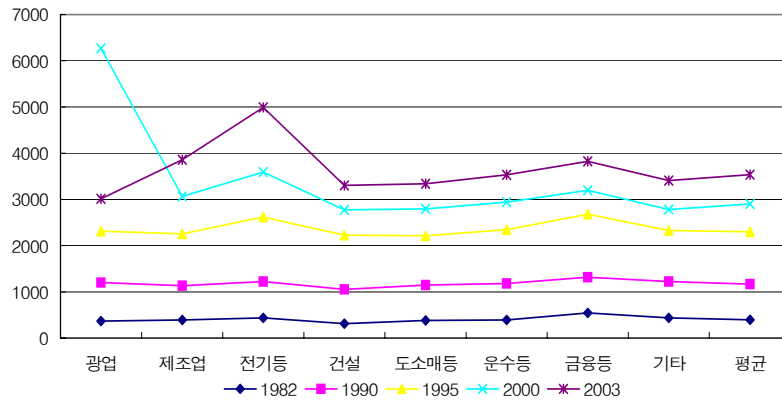
[그림 VI-2] 도시가구의 총소득 증가추이(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그림 VI-3] 산업부문별 총소득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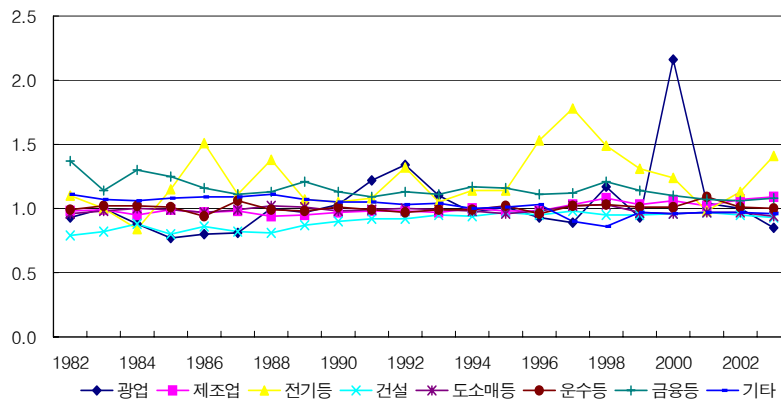
<표 VI-3> 전체 평균소득 대비 산업부문별
소득상대배수(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배)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82	0.93	0.98	1.10	0.79	0.96	0.99	1.37	1.11	1.00
1983	1.00	0.99	1.00	0.82	0.98	1.02	1.14	1.07	1.00
1984	0.88	0.95	0.84	0.88	1.00	1.02	1.30	1.06	1.00
1985	0.77	0.99	1.15	0.80	0.99	1.01	1.25	1.08	1.00
1986	0.80	0.97	1.51	0.86	0.97	0.94	1.16	1.09	1.00
1987	0.81	0.98	1.11	0.82	0.99	1.06	1.11	1.09	1.00
1988	1.00	0.94	1.38	0.81	1.02	0.99	1.13	1.11	1.00
1989	0.97	0.95	1.07	0.87	1.01	0.98	1.21	1.07	1.00
1990	1.03	0.97	1.05	0.90	0.98	1.01	1.13	1.05	1.00
1991	1.22	0.98	1.08	0.92	0.99	0.99	1.09	1.05	1.00
1992	1.34	0.98	1.32	0.92	1.00	0.97	1.13	1.03	1.00
1993	1.10	0.97	1.05	0.95	0.99	0.99	1.11	1.04	1.00
1994	0.97	1.00	1.14	0.94	0.98	0.99	1.17	1.00	1.00
1995	1.01	0.98	1.14	0.97	0.96	1.02	1.16	1.01	1.00
1996	0.93	0.98	1.53	0.95	0.98	0.96	1.11	1.03	1.00
1997	0.89	1.03	1.78	0.98	1.02	1.02	1.12	0.90	1.00
1998	1.17	1.08	1.49	0.95	1.03	1.03	1.21	0.86	1.00
1999	0.93	1.03	1.31	0.95	0.97	1.01	1.14	0.97	1.00
2000	2.16	1.06	1.24	0.96	0.96	1.01	1.10	0.96	1.00
2001	1.04	1.02	0.98	0.97	0.97	1.09	1.07	0.97	1.00
2002	1.00	1.07	1.13	0.95	0.97	1.01	1.06	0.97	1.00
2003	0.85	1.09	1.41	0.93	0.94	1.00	1.08	0.96	1.00

[그림 VI-4] 전체 평균소득 대비 산업부문별
소득상대배수(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배)



다. 산업부문별 세부담 분포

1) 소득세 부담

가) 부문별 세부담

도시가구의 가구당 평균 소득세 부담액은 1982년 12만원에서 2003년에는 137만원으로 지난 21년간 약 11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표 VI-4> 참조). 같은 기간 동안 총소득은 395만원에서 3,535만원으로 약 9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표 VI-2> 참조). 이에 따라 소득증가율보다 소득세증가율이 더 높아 실효소득세부담률은 3.13%에서 3.88%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VI-5> 참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세의 과세체계는 각종 인적공제 및 비용공제 제도와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지니고 있어 세부담의 증가율이 소득의 증가율보다 높은 누진과세체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문별 소득세 부담의 차이는 소득수준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부문별로 소득세 부담을 추정해 본 결과 대체로 소득수준의 차이 순서대로 소득세 부담의 순위도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경우에는 이 부문과 평균소득 수준이 비슷한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 부문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은 운수·창고·통신업 부문과 소득수준 및 소득세 부담 순위상으로 순위의 역전현상⁴³⁾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2003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주 관찰되고 있다.

도시가구의 평균실효소득세부담률은 2003년 현재 3.8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문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이 5.51%로 가장 높고,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이 4.46%,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과 제조업 부문이 각각 4.43%와 4.39%, 운수·창고·통신업, 건설업, 기타 부문이 각각 3.68%, 3.51%, 3.20%이고 광업 부문은 1.8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세 부담의 누진성은 광업부문과 전기·가스·수도 부문의 소득 대비 소득세 부담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잘 두드러진다. 평균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도시가구 전체의 평균소득보다 27% 정도밖에 소득이 더 많을 뿐이지만 가구당 평균 소득세 부담은 275만원으로 전체 평균 137만원의 2배 수준이다. 반면에 광업부문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전체 평균소득보다 14.8% 작지만 세부담은 54만원으로 약 2/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공제 및 누진세율 체계 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부문별로 보더라도 고소득 산업부문의

43) 순위의 역전현상은 실효세부담률 측면에서 보면 더욱 명확하다.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의 실효소득세부담률은 4.46%로 운수·창고·통신업은 물론이고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및 제조업 부문보다도 더 높다.

VI.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정책시사점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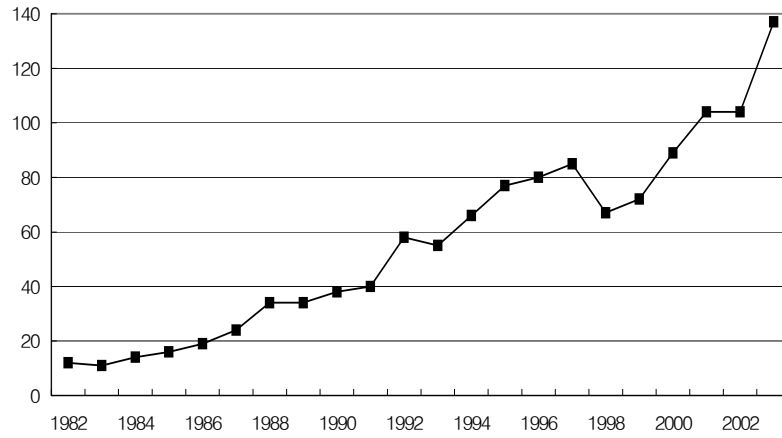
실효소득세부담률은 높고 저소득 산업부문의 실효소득세부담률은 낮게 나타나는 누진적인 과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4> 산업부문별 소득세 부담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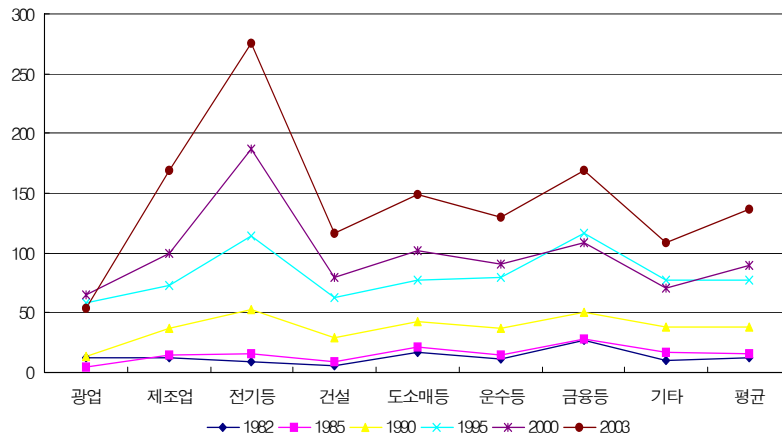
(단위: 만원)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82	12	12	9	6	17	11	27	10	12
1983	15	11	8	8	15	10	15	9	11
1984	8	11	5	11	20	14	20	12	14
1985	4	14	16	9	21	14	28	17	16
1986	10	18	34	13	24	15	26	19	19
1987	13	23	34	15	27	23	31	25	24
1988	35	32	69	19	36	31	42	40	34
1989	39	33	55	24	37	33	49	35	34
1990	13	37	53	29	43	37	50	38	38
1991	15	41	36	33	45	39	45	39	40
1992	63	60	108	48	64	55	76	54	58
1993	28	48	53	45	62	55	75	55	55
1994	47	63	92	52	70	64	95	66	66
1995	58	73	114	63	77	80	116	77	77
1996	55	74	207	66	85	76	114	77	80
1997	40	75	252	70	94	82	103	86	85
1998	77	67	192	54	70	62	92	63	67
1999	30	73	164	64	83	76	94	58	72
2000	65	100	187	79	102	91	109	70	89
2001	64	109	62	91	115	121	127	87	104
2002	64	123	154	80	112	101	132	85	104
2003	54	169	275	116	149	130	169	109	137

[그림 VI-5] 도시가구의 총소득세 부담 증가추이(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그림 VI-6] 산업부문별 총소득세 분포 추이(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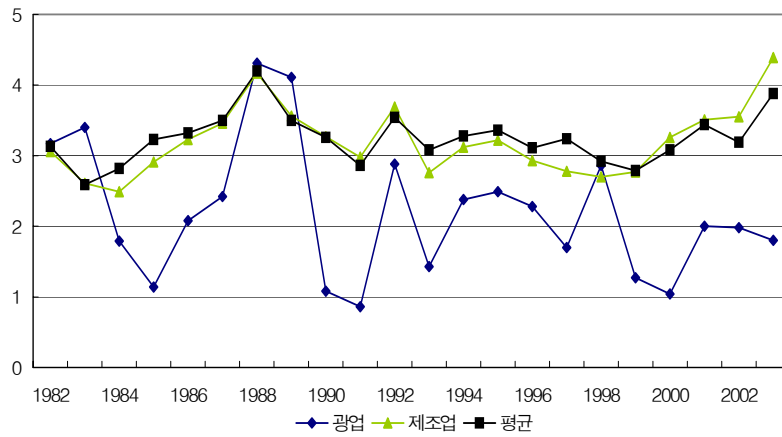
<표 VI-5>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부담률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82	3.17	3.06	2.07	1.96	4.51	2.74	5.06	2.34	3.13
1983	3.40	2.61	1.77	2.11	3.60	2.36	2.94	1.97	2.59
1984	1.79	2.49	1.26	2.53	4.07	2.87	3.17	2.25	2.82
1985	1.14	2.91	2.72	2.19	4.22	2.85	4.43	3.08	3.23
1986	2.08	3.23	3.91	2.69	4.27	2.76	3.91	3.02	3.32
1987	2.42	3.46	4.51	2.75	3.99	3.25	4.14	3.40	3.50
1988	4.31	4.17	6.20	2.98	4.33	3.85	4.64	4.48	4.20
1989	4.11	3.56	5.27	2.83	3.71	3.39	4.13	3.36	3.50
1990	1.08	3.27	4.35	2.73	3.74	3.11	3.79	3.11	3.26
1991	0.86	2.98	2.37	2.55	3.23	2.79	2.92	2.66	2.86
1992	2.88	3.69	4.96	3.14	3.88	3.44	4.08	3.19	3.54
1993	1.43	2.76	2.87	2.64	3.51	3.13	3.82	3.01	3.08
1994	2.38	3.12	3.98	2.73	3.55	3.21	4.05	3.23	3.28
1995	2.49	3.22	4.34	2.81	3.50	3.41	4.32	3.30	3.36
1996	2.28	2.93	5.26	2.70	3.36	3.09	3.98	2.91	3.11
1997	1.70	2.78	5.40	2.69	3.52	3.03	3.47	3.65	3.24
1998	2.86	2.70	5.59	2.47	2.95	2.63	3.28	3.18	2.92
1999	1.27	2.77	4.88	2.64	3.31	2.93	3.23	2.33	2.79
2000	1.04	3.26	5.21	2.86	3.65	3.10	3.42	2.50	3.08
2001	2.00	3.51	2.09	3.07	3.91	3.65	3.92	2.97	3.44
2002	1.98	3.55	4.18	2.59	3.56	3.06	3.82	2.69	3.19
2003	1.80	4.39	5.51	3.51	4.46	3.68	4.43	3.20	3.88

주: 평균실효세율은 평균소득 대비 평균세부담액의 비율로 산출하였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각 개인별 실효세부담률을 산출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는 방법도 있음. 본 연구에서는 경제 전체 평균세부담을 비교하고자 하므로 전자의 방법을 채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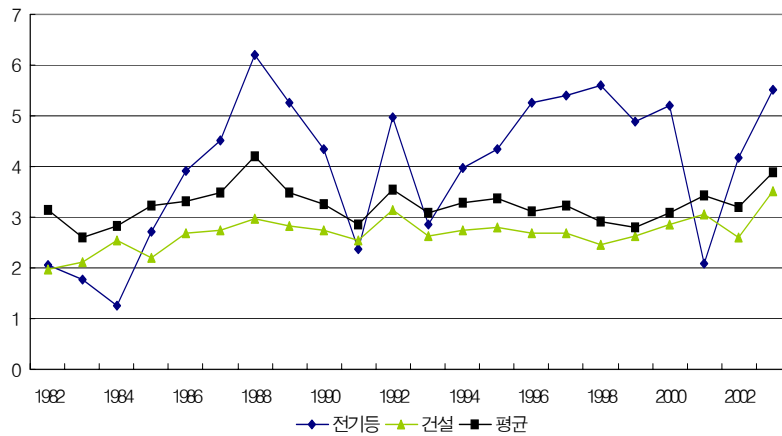
[그림 VI-7] 실효소득세부담률의 비교: 광업과 제조업(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그림 VI-8] 실효소득세부담률의 비교: 전기 등과 건설업(도시가계조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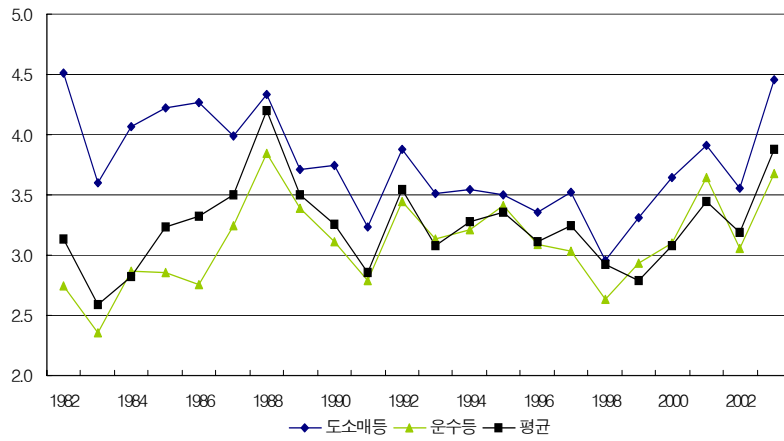
(단위: %)



VI.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정책시사점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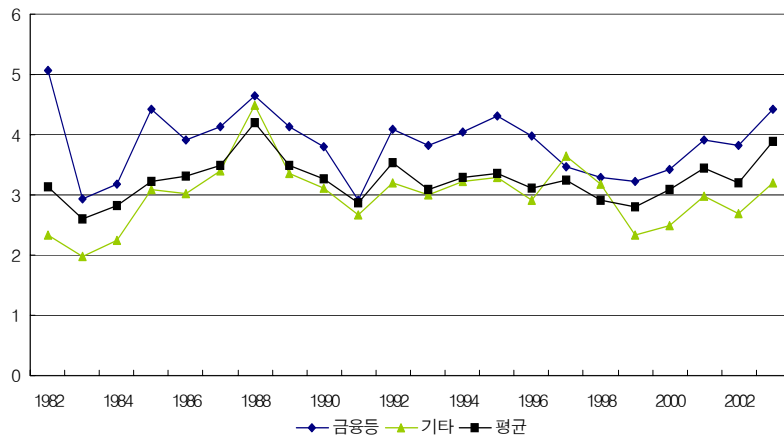
[그림 VI-9] 실효소득세부담률의 비교: 도소매 등과 운수 등(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그림 VI-10] 실효소득세부담률의 비교: 금융 등과 기타(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나) 부문별 세부담률의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앞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실효소득세부담률이 이 부문보다 평균소득이 조금 더 높은 운수·창고·통신업은 물론이고 평균소득이 훨씬 높은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보다도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으면서도 실효소득세부담률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요인은 크게 가구원수, 취업인수, 근로자가구 또는 자영업자가구와 같은 가구유형의 차이 등에 기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외에도 본 연구에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할 때,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에 대한 소득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추정오차로 인해 실제와 상관없이 분석오차에 의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먼저 다른 조건이 같고 가구원수가 더 적다면 다른 부문에 비해 인적공제를 작게 받게 되기 때문에 실효소득세부담률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취업인수가 다른 부문보다 적다면 이 역시 가구당 총체적인 (근로)소득공제수준이 작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실효소득세부담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표 VI-6> 및 <표 VI-7>, [그림 VI-11]과 [그림 VI-12]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가구원수나 취업인수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가구원수나 취업인수의 차이는 실효소득세부담률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허용되지만 자영업자가구의 종합소득세(또는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등과 같은 인적공제가 소득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영업자가구의 면세점이 근로소득의 경우보다 낮게 산출된다.

그런데 <표 VI-8>과 [그림 VI-13]에서 보듯이 도소매·음식·

숙박업 부문은 운수·창고·통신업 부문을 포함하여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자영업자가구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실효소득세부담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가구유형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문별 소득세 부담의 편차를 고려할 때 흔히 소득수준과 소득세 부담 수준의 상대적 차이, 즉 실효소득세부담률의 고저만을 논하기 쉽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경우 운수·창고·통신업 부문에 비해 소득이 더 낮으면서도 소득세 부담은 더 높다거나, 소득수준이 월등히 더 높은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에 비해서도 소득세 실효세부담률이 더 높다는 점만을 들어 현행의 소득세제가 산업부문간에 불형평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부문간의 실효소득세부담률의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가구유형의 차이 등에 따라 어떤 다른 정책적 목적에 따라 유도된 것이라면 이를 반드시 불공평하다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 수준은 근로소득세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는 다분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소득의 대부분이 파악되는 반면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되기 때문에 양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은 자영업자들의 과세소득 탈루율이 얼마이며, 그에 따를 적절한 수준에서의 근로소득 공제수준과 비율이 얼마인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소득유형간의 형평과세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그 범위와 깊이가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부문별

소득분배 구조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만큼 본절에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할 때,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자영업자가구의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탈루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그 부문의 소득세 실효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막연히 사업소득세의 공제수준을 낮은 수준에서 억제할 것이 아니라 소득유형간의 과세형평 제고 문제와 결부하여 소득탈루를 감안한 사업소득세제의 공제체계에 대해 재검토해 보는 것이 보다 형평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자영업자가구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따라서 비록 모든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보다는 소득탈루율이 높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부문은 평균적인 소득탈루율이 낮게 나타나고, 반대로 자영업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부문은 해당 부문의 평균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의 상당 부분을 탈루하는 자영업자가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가구유형별(또는 소득유형별)로 소득세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행의 소득세제는 소득유형별로 소득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세의 형평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세 부담보다 과중 또는 과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자.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를 감안하여 현행의 소득세제가 근로소득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는데 그 정도가 사업소득의 소득탈루 정도를

감안하여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를 허용해 준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자. 만약 이러한 가설이 성립한다면, 소득탈루를 감안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은 근로자가구보다 과중해질 수 있다. 이를 산업부문별 소득세 실효세부담과 비교해 본다면 산업부문별로도 자영업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부문이 그렇지 않은 부문에 비해 소득세 실효부담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산업부문의 실효소득세부담률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만약 위의 가설이 성립하는 경우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영업자의 구성비율이 높은 부문일수록, 또는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높은 부문일수록, 실효소득세부담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소득세법을 토대로 실효소득세부담률을 추정해 본 결과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경우에는 다른 부문보다 평균 소득수준이 조금 더 작으면서도 실효소득세부담률은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경우가 관찰되었다. 이 부문보다 소득수준이 다소 더 높은 다른 부문보다 높다. 이는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소득탈루를 암묵적으로 감안하여 소득공제 수준을 작게 책정한 사업소득세의 실효세부담이 오히려 근로소득세의 실효부담보다 과중하게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구의 비중이 높은 일부 부문에서 실효소득세부담률의 역전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위에서 제기한 가설이 성립할 수도 있는 개연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실효세부담률의 역전현상이 위의 가설에 의해서만 초래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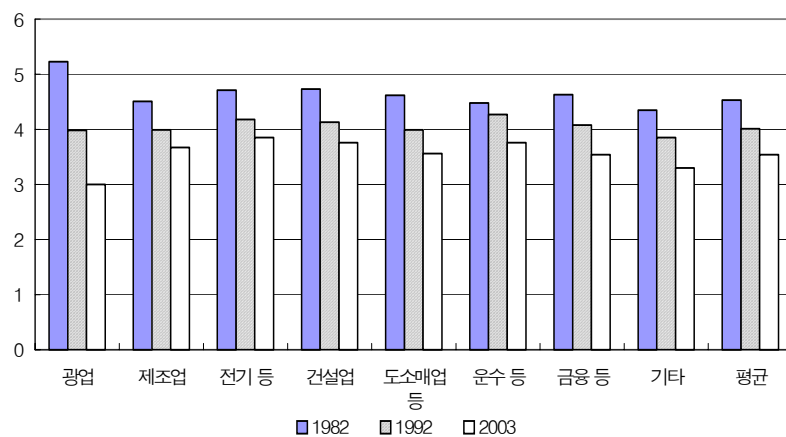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를 감안하여 근로소득세에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주더라도 여전히 근로소득자들이 세부담상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일반인들의 주관적인 믿음에 의심을 제기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잠정적인 가설이 실제로 성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만큼, 소득유형(또는 가구유형)의 차이, 즉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간의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분석방법론적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본 연구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할 때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정보는 역소비함수를 이용한 추정소득에 의존하는 만큼, 소득추정 오차에 의해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의 문제를 점검함에 있어서는 소득추정 방법에 대한 개선된 방법을 동원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일단 본절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간의 형평과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심층연구를 통해 두 가지 소득유형별 소득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VI-11] 산업부문별 가구당 가구원수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명)



<표 VI-6> 산업부문별 가구당 가구원수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82	5.23	4.51	4.71	4.73	4.62	4.48	4.63	4.35	4.53
1983	4.64	4.38	3.89	4.92	4.55	4.65	4.84	4.21	4.47
1984	4.96	4.22	4.44	4.59	4.40	4.50	4.73	4.16	4.34
1985	4.83	4.14	4.86	4.36	4.44	4.64	4.42	4.14	4.29
1986	4.35	4.03	4.84	4.46	4.42	4.48	4.57	4.07	4.23
1987	4.48	4.03	4.41	4.24	4.19	4.43	4.26	4.05	4.14
1988	3.99	4.02	4.59	4.32	4.16	4.34	4.30	4.02	4.12
1989	4.94	3.97	3.93	4.22	4.15	4.25	4.27	3.94	4.07
1990	4.97	4.04	4.18	4.18	4.12	4.34	4.13	3.93	4.08
1991	4.25	3.99	4.27	4.16	4.08	4.35	4.13	3.93	4.06
1992	3.98	3.99	4.18	4.13	3.99	4.27	4.08	3.85	4.01
1993	4.48	3.88	3.75	4.13	3.90	4.08	3.68	3.71	3.89
1994	4.71	3.91	3.62	4.05	3.81	4.01	3.77	3.62	3.84
1995	5.07	3.87	4.02	4.03	3.75	4.02	3.82	3.58	3.81
1996	5.27	3.81	4.15	4.00	3.73	3.95	3.80	3.50	3.76
1997	5.18	3.81	4.09	3.91	3.75	3.92	3.64	3.48	3.72
1998	4.18	3.85	3.79	3.75	3.77	3.86	3.63	3.53	3.71
1999	3.90	3.83	3.89	3.93	3.71	3.79	3.81	3.48	3.69
2000	4.00	3.80	3.85	3.82	3.65	3.83	3.66	3.47	3.66
2001	3.77	3.76	3.51	3.89	3.61	3.82	3.56	3.36	3.6
2002	3.37	3.67	3.61	3.80	3.53	3.81	3.53	3.27	3.53
2003	3.00	3.67	3.85	3.76	3.56	3.76	3.54	3.30	3.54

<표 VI-7> 산업부문별 가구당 취업인수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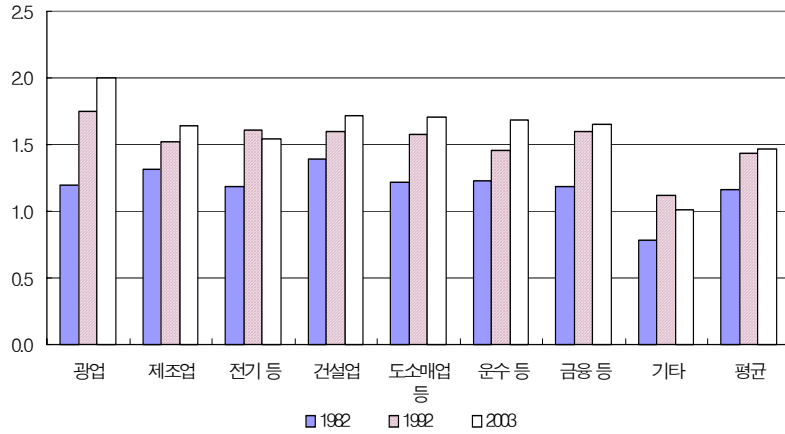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82	1.20	1.32	1.19	1.39	1.22	1.23	1.19	0.78	1.16
1983	1.10	1.31	1.21	1.40	1.26	1.20	1.44	0.78	1.16
1984	1.24	1.34	1.87	1.47	1.21	1.34	1.42	0.79	1.20
1985	1.20	1.30	1.30	1.43	1.32	1.24	1.47	0.82	1.20
1986	1.06	1.43	1.51	1.53	1.51	1.34	1.42	0.89	1.30
1987	1.30	1.49	1.20	1.48	1.56	1.46	1.46	0.91	1.36
1988	1.31	1.51	1.21	1.51	1.58	1.42	1.56	1.12	1.42
1989	1.35	1.53	1.19	1.51	1.65	1.41	1.61	1.10	1.43
1990	1.36	1.53	1.26	1.45	1.58	1.41	1.53	1.05	1.38
1991	2.00	1.55	1.28	1.57	1.61	1.47	1.58	1.08	1.44
1992	1.75	1.52	1.61	1.60	1.58	1.46	1.6	1.12	1.44
1993	1.48	1.55	1.53	1.67	1.68	1.50	1.53	1.03	1.48
1994	1.56	1.60	1.37	1.59	1.71	1.56	1.66	0.94	1.47
1995	1.77	1.58	1.38	1.63	1.65	1.64	1.76	0.99	1.48
1996	1.71	1.61	1.59	1.63	1.71	1.60	1.76	1.06	1.51
1997	1.63	1.65	1.55	1.64	1.73	1.71	1.67	1.10	1.54
1998	1.00	1.57	1.42	1.60	1.65	1.57	1.65	0.96	1.42
1999	1.49	1.57	1.37	1.55	1.66	1.57	1.65	0.87	1.36
2000	1.47	1.65	1.61	1.64	1.71	1.60	1.65	0.94	1.44
2001	1.65	1.60	1.47	1.67	1.73	1.66	1.66	0.92	1.43
2002	1.87	1.61	1.28	1.67	1.72	1.74	1.61	0.96	1.45
2003	2.00	1.64	1.54	1.72	1.71	1.68	1.65	1.01	1.47

<표 VI-8> 산업부문별 자영업자가구의 비중(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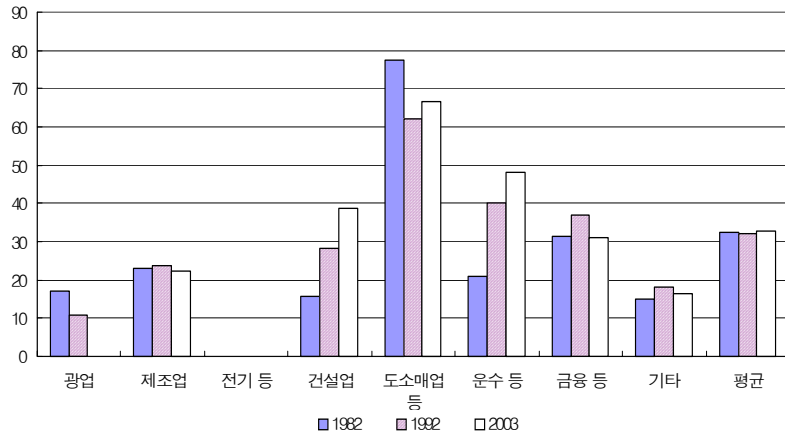
	광업	제조업	전기 등	건설업	도소매 업 등	운수 등	금융 등	기타	평균
1982	17.14	22.96	0.00	15.72	77.56	20.93	31.31	14.97	32.41
1983	5.96	20.56	0.00	20.28	76.19	20.67	31.65	15.67	31.54
1984	0.00	16.98	0.00	19.53	76.80	25.30	20.19	16.06	30.02
1985	0.00	16.72	0.00	12.53	71.90	21.73	35.60	17.16	29.14
1986	2.85	16.19	0.00	19.45	73.62	31.80	32.21	14.61	29.40
1987	0.00	13.06	0.00	18.08	69.41	24.78	25.64	16.74	26.77
1988	4.51	17.01	0.00	15.62	67.08	27.70	20.28	17.45	27.68
1989	15.71	18.48	0.00	27.87	67.21	30.78	41.23	19.44	30.62
1990	7.28	21.87	0.00	31.69	63.84	34.26	33.92	18.53	30.85
1991	21.38	21.07	0.00	28.26	63.24	38.61	32.58	20.05	31.33
1992	10.71	23.71	0.00	28.11	62.22	40.11	36.90	18.26	32.21
1993	0.00	20.56	0.00	28.58	60.76	36.74	24.59	14.60	30.32
1994	43.01	22.49	3.56	29.31	62.41	34.82	23.29	15.60	31.51
1995	38.10	23.18	0.00	32.47	63.59	38.66	25.29	16.06	32.28
1996	40.46	22.66	0.00	30.97	65.75	43.16	25.25	16.33	33.33
1997	29.80	23.61	0.00	31.58	63.06	45.59	23.95	16.92	33.13
1998	17.51	29.42	0.00	33.11	68.40	36.30	32.53	18.09	35.19
1999	0.00	26.87	5.96	35.84	67.64	38.67	32.71	16.52	33.83
2000	0.00	29.29	0.00	35.24	65.38	41.33	28.63	18.10	34.56
2001	0.00	25.36	0.00	37.59	67.55	45.00	31.63	20.52	35.43
2002	0.00	25.63	0.00	31.9	64.53	40.77	31.56	18.96	33.73
2003	0.00	22.18	0.00	38.87	66.73	48.15	31.21	16.44	32.70

[그림 VI-12] 산업부문별 가구당 취업인수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명)



[그림 VI-13] 산업부문별 자영업자가구의 비중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2) 소비세 부담

도시가구의 가구당 소비세 부담액은 1982년 14만원에서 2003년에는 206만원으로 약 15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였다(<표 VI-9> 참조). 같은 기간 동안 소득이 약 9배 수준으로 증가한 데 비해 소비세의 증가추세는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실효소비세부담률도 3.47%에서 5.84%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VI-2]에서 보듯이 도시가구의 가구당 평균 소득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경제위기 기간이었던 1998년에는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VI-14]에서 보듯이 소비세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998년에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일견 소득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세부담 감소폭에 있어서는 소득세에 비해 소비세의 감소폭이 매우 작다. 이는 경제위기 기간 동안 소득에 비해 소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소비세도 소득세보다 비탄력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는 세제구조 자체가 누진성을 지니고 있지만 소비세의 경우에는 대체로 소득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소비세 중 세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일부의 생활필수품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대상으로 단일세율 구조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거의 비례적인 모습에 가깝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⁴⁴⁾.

산업부문별로 소비세 부담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부문일수록 소비세 부담의 절대액이 크다. 그러나 실효세부담률 측면에서는 소비지출, 즉 소비세의 소득비탄력성으로 인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세의 비중은 대체로 동일한 편이다. 따라서 소득세의 경우와

44)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성명재·박형수·전병목(2004)을 참조하기 바란다.

달리 소비세의 경우에는 산업부문별로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효소비세부담률의 차이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는 [그림 VI-16]~[그림 VI-19]에서 보듯이, 각 부문의 소비세 실효세부담률 곡선이 전체의 평균실효세부담률 곡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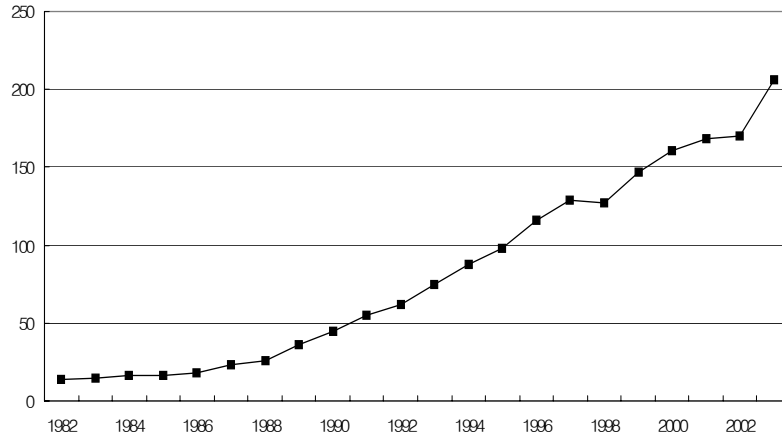
<표 VI-9> 산업부문별 소비세 부담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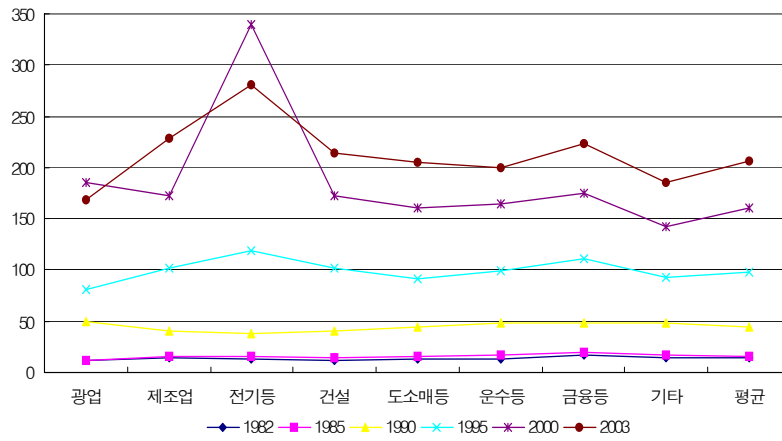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82	12	14	13	12	13	13	17	14	14
1983	19	14	14	13	15	15	17	15	15
1984	19	15	15	16	16	16	18	16	16
1985	12	16	16	14	16	17	19	17	16
1986	18	18	25	19	18	17	21	19	18
1987	22	22	24	21	22	23	31	23	23
1988	28	26	32	24	27	24	31	28	26
1989	28	34	35	32	35	33	45	38	36
1990	50	41	38	40	45	48	48	48	45
1991	66	51	65	52	60	54	65	55	55
1992	67	59	64	56	63	60	77	64	62
1993	91	73	75	77	72	64	88	76	75
1994	74	88	118	91	88	78	98	87	88
1995	81	102	119	102	92	99	111	93	98
1996	116	112	157	121	117	111	132	110	116
1997	111	121	220	136	136	116	139	126	129
1998	123	133	169	131	129	117	148	116	127
1999	221	156	213	155	150	148	171	130	147
2000	186	172	339	172	161	164	175	142	161
2001	212	176	188	182	171	170	182	151	168
2002	175	180	214	183	180	162	186	149	170
2003	169	228	281	214	205	200	223	186	206

VI.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정책시사점 189

[그림 VI-14] 도시가구의 총소비세 부담 증가추이(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그림 VI-15] 산업부문별 총소비세 분포 추이(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표 VI-10> 산업부문별 실효소비세부담률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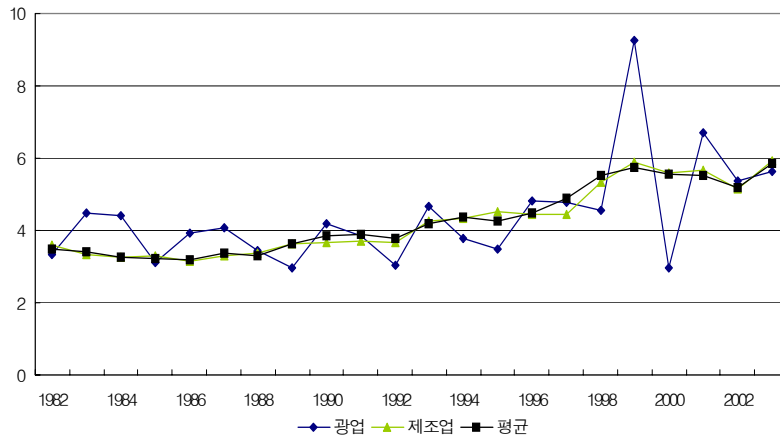
(단위: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82	3.33	3.58	2.95	3.87	3.54	3.43	3.20	3.23	3.47
1983	4.49	3.32	3.32	3.68	3.43	3.46	3.35	3.33	3.40
1984	4.41	3.27	3.66	3.72	3.25	3.25	2.96	3.06	3.25
1985	3.10	3.31	2.76	3.37	3.17	3.29	2.96	3.15	3.22
1986	3.91	3.14	2.89	3.84	3.18	3.06	3.21	3.09	3.20
1987	4.09	3.31	3.23	3.85	3.32	3.18	4.12	3.12	3.36
1988	3.45	3.37	2.91	3.67	3.25	3.02	3.45	3.13	3.28
1989	2.97	3.63	3.34	3.77	3.59	3.43	3.76	3.63	3.62
1990	4.18	3.67	3.12	3.77	3.93	4.05	3.69	3.94	3.84
1991	3.85	3.71	4.28	3.98	4.28	3.87	4.25	3.73	3.90
1992	3.05	3.66	2.95	3.68	3.85	3.77	4.15	3.77	3.77
1993	4.68	4.26	4.04	4.52	4.09	3.66	4.48	4.13	4.19
1994	3.78	4.34	5.12	4.76	4.44	3.87	4.17	4.32	4.36
1995	3.49	4.52	4.55	4.57	4.16	4.21	4.14	3.98	4.26
1996	4.83	4.46	4.01	4.93	4.62	4.52	4.59	4.15	4.49
1997	4.76	4.45	4.71	5.26	5.08	4.30	4.71	5.35	4.90
1998	4.56	5.33	4.92	5.97	5.45	4.91	5.31	5.84	5.51
1999	9.26	5.90	6.35	6.36	6.02	5.72	5.84	5.21	5.73
2000	2.96	5.61	9.42	6.20	5.77	5.57	5.48	5.12	5.54
2001	6.70	5.68	6.35	6.16	5.79	5.14	5.64	5.12	5.52
2002	5.36	5.16	5.81	5.89	5.72	4.92	5.40	4.71	5.20
2003	5.63	5.91	5.63	6.49	6.15	5.67	5.83	5.44	5.84

VI.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정책시사점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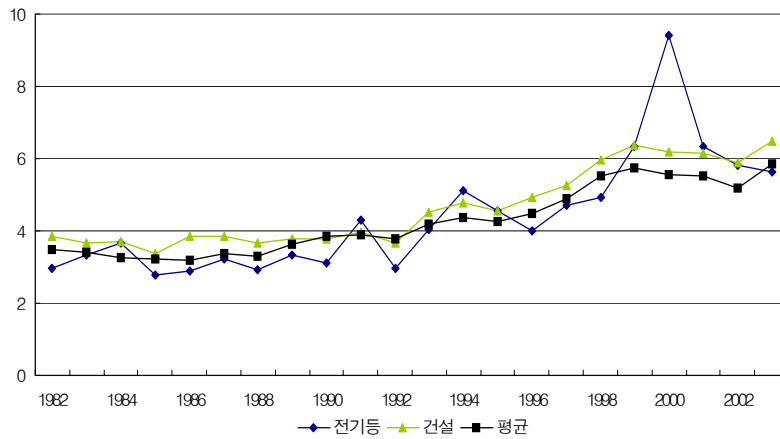
[그림 VI-16] 실효소비세부담률의 비교: 광업과 제조업(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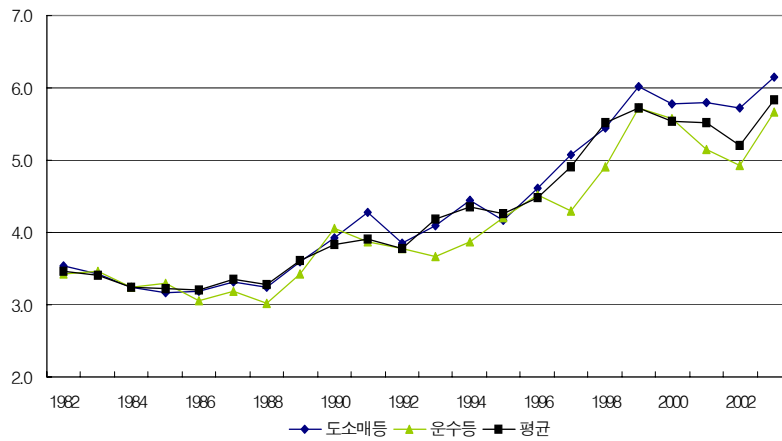
[그림 VI-17] 실효소비세부담률의 비교: 전기 등과 건설업(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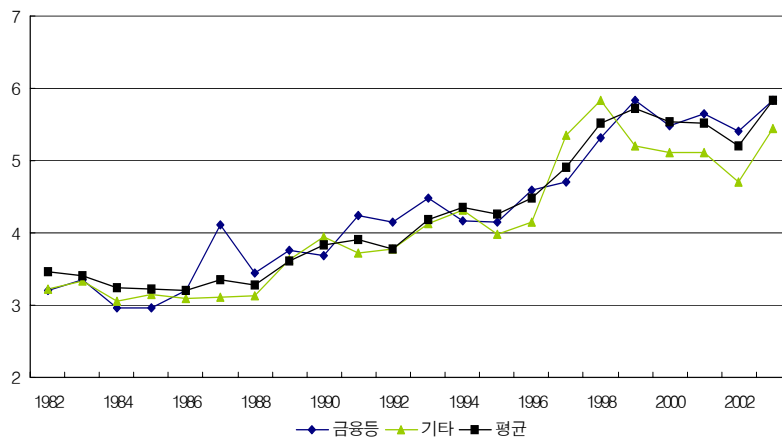
[그림 VI-18] 실효소비세부담률의 비교: 도소매 등과 운수 등(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그림 VI-19] 실효소비세부담률의 비교: 금융 등과 기타(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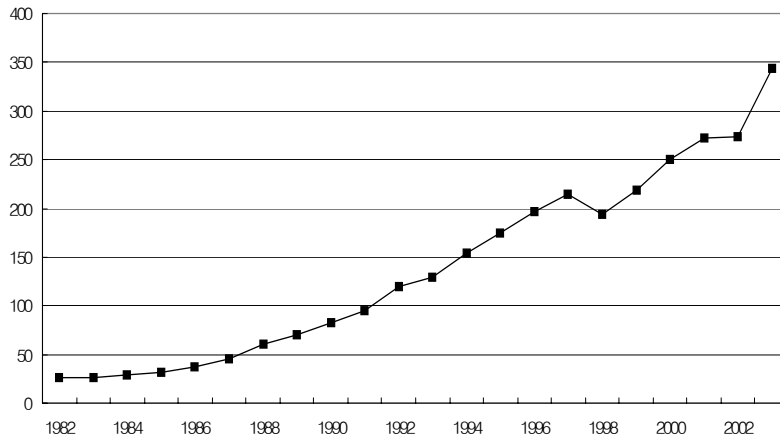
<표 VI-11> 산업부문별 소득세+소비세 부담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82	24	26	22	18	31	24	45	24	26
1983	34	25	22	21	30	26	31	25	26
1984	26	26	20	27	35	30	38	27	29
1985	17	31	32	22	37	31	46	34	32
1986	27	36	59	32	41	31	47	38	37
1987	36	44	58	36	49	46	62	48	46
1988	63	57	101	43	62	55	73	68	60
1989	67	67	90	56	72	66	94	73	70
1990	63	78	91	68	88	84	98	86	83
1991	81	93	101	85	105	93	110	95	95
1992	131	119	172	104	127	114	153	118	120
1993	119	121	128	121	134	119	164	132	129
1994	121	151	210	143	158	142	194	153	154
1995	139	175	233	164	169	179	227	170	175
1996	171	186	364	187	202	187	246	188	196
1997	151	196	472	206	230	198	242	213	214
1998	200	200	361	185	199	179	240	179	194
1999	251	230	377	219	233	224	266	188	219
2000	251	272	526	251	263	255	284	212	250
2001	276	284	250	272	286	290	309	238	272
2002	239	303	368	263	293	262	318	234	274
2003	224	398	556	330	354	331	392	295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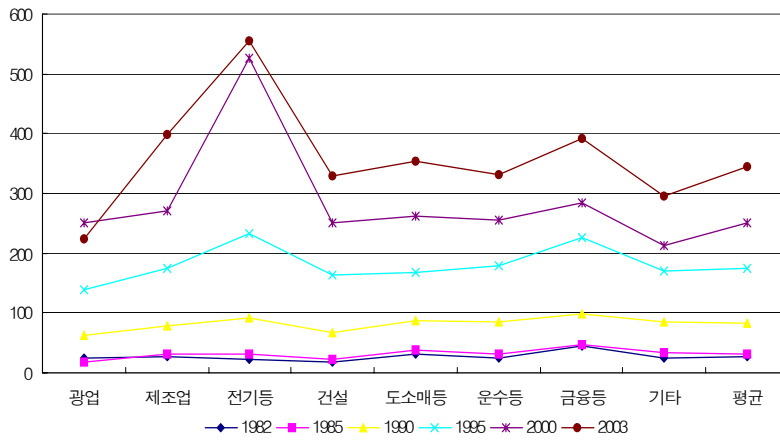
[그림 VI-20] 도시가구의 총소득세+소비세 부담
증가추이(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그림 VI-21] 산업부문별 총소득세+소비세 분포
추이(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만원)



VI.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정책시사점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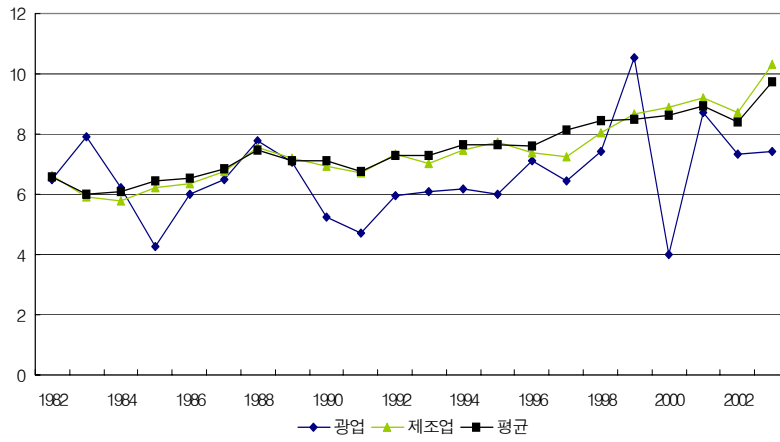
<표 VI-12>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82	6.50	6.63	5.02	5.83	8.05	6.17	8.26	5.57	6.60
1983	7.89	5.93	5.09	5.78	7.03	5.81	6.29	5.30	5.99
1984	6.21	5.76	4.92	6.25	7.32	6.11	6.13	5.31	6.07
1985	4.25	6.23	5.47	5.56	7.39	6.14	7.39	6.23	6.45
1986	5.99	6.37	6.80	6.53	7.45	5.83	7.12	6.12	6.52
1987	6.51	6.77	7.74	6.60	7.31	6.43	8.25	6.52	6.86
1988	7.76	7.54	9.11	6.64	7.59	6.87	8.09	7.60	7.47
1989	7.08	7.19	8.61	6.60	7.30	6.82	7.89	6.99	7.13
1990	5.26	6.94	7.47	6.50	7.66	7.15	7.48	7.06	7.10
1991	4.71	6.69	6.65	6.52	7.51	6.66	7.17	6.39	6.75
1992	5.94	7.35	7.90	6.81	7.74	7.20	8.23	6.96	7.30
1993	6.10	7.03	6.91	7.15	7.61	6.79	8.30	7.14	7.27
1994	6.16	7.46	9.10	7.49	7.99	7.08	8.22	7.55	7.63
1995	5.99	7.74	8.89	7.38	7.66	7.63	8.46	7.28	7.63
1996	7.11	7.38	9.27	7.63	7.98	7.61	8.58	7.06	7.60
1997	6.46	7.23	10.11	7.95	8.60	7.33	8.18	9.00	8.14
1998	7.42	8.03	10.51	8.44	8.40	7.54	8.59	9.03	8.43
1999	10.53	8.67	11.23	9.00	9.33	8.64	9.07	7.53	8.51
2000	4.01	8.87	14.64	9.06	9.42	8.67	8.90	7.62	8.62
2001	8.70	9.19	8.44	9.23	9.70	8.79	9.55	8.09	8.95
2002	7.34	8.71	9.99	8.48	9.29	7.98	9.22	7.40	8.40
2003	7.43	10.31	11.14	10.00	10.61	9.36	10.26	8.65	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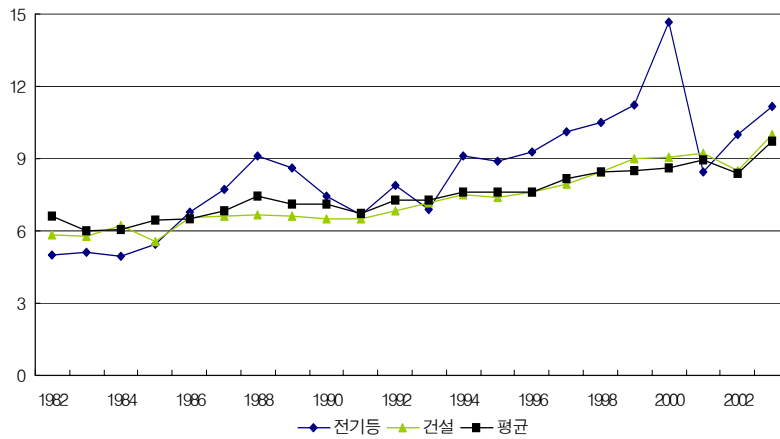
[그림 VI-22]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의 비교: 광업과 제조업(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그림 VI-23]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의 비교: 전기 등과 건설업(도시가계조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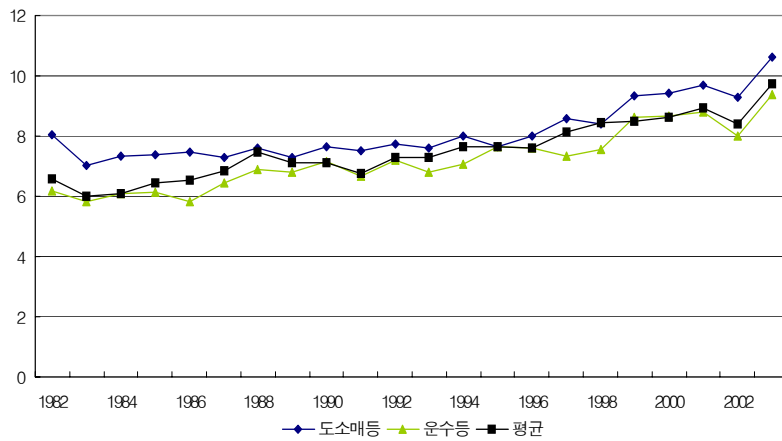
(단위: %)



VI.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정책시사점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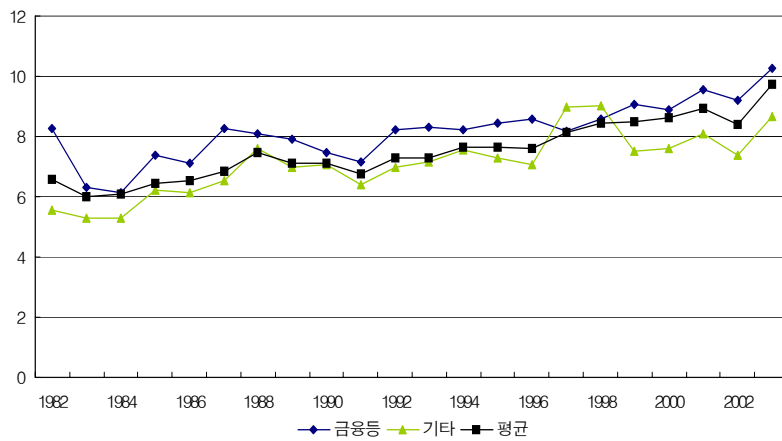
[그림 VI-24]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의 비교: 도소매 등과 운수 등(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그림 VI-25] 실효소득세+소비세부담률의 비교: 금융 등과 기타(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



3) 소득세+소비세 부담

도시가구가 1년간 부담한 가구당 소득세와 소비세 평균 부담액은 1982년 26만원 수준에서 2003년에는 344만원으로 약 13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소득세와 소비세의 실효세부담률도 6.60%에서 9.72%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산업부문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의 실효세부담률이 11.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광업부문은 7.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세의 실효세부담률은 부문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와 소비세를 합산한 실효세부담률의 산업부문별 차이는 대부분 실효소득세부담률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소득세와 소비세를 합산한 세부담의 부문별 고저는 소득세에서 본 바와 대동소이하다.

라. 상대소득 분포의 고찰 : 산업부문 지니계수의 분해를 중심으로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를 8개 산업부문에 대한 분할(partition)을 기준으로 분해(decomposition)해 본 결과, 산업부문간 소득격차에 의해 초래된 도시가구의 소득분배 격차의 정도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Yitzahki 분해법에 의한 추정결과를 보면,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대부분 그룹내 지니계수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룹간 지니의 값이 거의 0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값이 가장 큰 경우도 전체 지니계수의 약 1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또한 각 산업부문의 계층화도(degree of stratification)⁴⁵⁾도

45) 계층화도는 각 산업부문이 다른 산업부문과 정의역이 별로 겹치지 않는 별개의 단일 또는 복수의 고유영역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서 그 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각 부문이 별로 겹치지 않고 서로만의 고유영역을 구축하면서 부문간 소득격차가 전체적인 소득분배 격차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각 부문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혼재하게 되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내 지니란 각각의 그룹에 대한 지니계수의 가중평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룹내 지니계수의 값이 전체 지니계수의 값과 비슷하다 함은 일반적으로 각 그룹내에서의 상대소득 분포의 모습이 전체 집단의 상대소득 분포와 모습이 대체로 비슷함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각 그룹도 소득분포 측면에서 상당히 동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에서 산업부문별 소득세 분포를 논함에 있어 각 부문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소득분배 측면에서 볼 때, 산업 부문간에 나타나는 그 정도의 소득격차가 산업부문간에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산업부문간 평균적인 소득격차보다 각 부문내에서의 개별적인 소득격차가 전체적인 소득분배 격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를 분해하는 또 다른 지수인 Pyatt 분해의 경우에도 그룹내 지니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지만 그룹간 지니계수가 전체 소득분배 격차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일견 Yitzahki 분해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Pyatt 분해에서도 그룹간 지니는 전체 지니계수의 10~20% 수준에 불과한 정도로 작은 값을 보임으로써 그룹간 소득격차가 전체적인 소득분배 격차(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는 작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Pyatt 분해에서는 그룹내 지니계수의 값도 상당히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Pyatt 분해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Yitzahki 분해의 경우보다 항상 그룹내 지니계수의 값이 작게 추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그룹내 상대소득 격차가 전체적인 상대소득 격차의 상당부분을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는 Yitzahki 분해의 경우와 명확히 대조되는 결과이다.

그런데 Pyatt 분해에 있어 세 번째 요소인 중복지니는, Yitzahki 분해의 경우와 달리, 정확히 공식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서 각 부문별 격차에 의한 전체적인 소득분배 격차 기여도가 작아짐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계층화도는 혼재도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체 지니계수에서 그룹내 및 그룹간 지니계수를 차감한 나머지로 표현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니계수를 요인별로 기여도를 분해하는 데 있어 Pyatt 분해의 경우에는 불명확한 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룹내 지니와 그룹간 지니 중 사실상 어떤 것이 전체적인 소득분배 격차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상기의 두 가지 지니계수 분해에 대한 추정결과를 놓고 볼 때 명확히 공식에 의해 파악된 부분만을 놓고 해석한다면 일단 그룹간 소득격차에 의한 소득분배 격차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VI-13> 산업별 지니계수의 Yitzahki 분해(도시가계조사자료)

	그룹내 지니	그룹간 지니	계층화도	계
1982	0.24183	0.04962	-0.00466	0.28678
1983	0.25009	0.03401	-0.00140	0.28270
1984	0.24522	0.03831	-0.00244	0.28109
1985	0.23483	0.04415	-0.00334	0.27563
1986	0.23708	0.03865	-0.00206	0.27368
1987	0.24408	0.03842	-0.00265	0.27986
1988	0.22923	0.04523	-0.00364	0.27082
1989	0.23462	0.03722	-0.00227	0.26957
1990	0.22709	0.02609	-0.00082	0.25236
1991	0.22034	0.02250	-0.00094	0.24189
1992	0.21860	0.02437	-0.00150	0.24147
1993	0.21913	0.02334	-0.00005	0.24242
1994	0.22153	0.02169	-0.00029	0.24293
1995	0.21828	0.02530	-0.00078	0.2428
1996	0.22137	0.02631	-0.00083	0.24685
1997	0.24424	0.03735	-0.00057	0.28102
1998	0.25840	0.05434	-0.00154	0.31121
1999	0.24236	0.02546	-0.00056	0.26726
2000	0.25347	0.02763	-0.00122	0.27988
2001	0.25125	0.02124	-0.00026	0.27222
2002	0.25664	0.02342	-0.00009	0.27997
2003	0.24385	0.03526	-0.00165	0.27747

<표 VI-14> 산업별 지니계수의 Pyatt 분해(도시가계조사자료)

	그룹내 지니	그룹간 지니	중복지니 (overlapping)	계
1982	0.05944	0.05713	0.17022	0.28678
1983	0.06120	0.03773	0.18377	0.28270
1984	0.05815	0.04300	0.17994	0.28109
1985	0.05725	0.05057	0.16781	0.27563
1986	0.05906	0.04376	0.17086	0.27368
1987	0.06019	0.04321	0.17645	0.27986
1988	0.05765	0.05216	0.16101	0.27082
1989	0.05560	0.04209	0.17188	0.26957
1990	0.05282	0.02874	0.17081	0.25236
1991	0.04920	0.02454	0.16815	0.24189
1992	0.04723	0.02666	0.16758	0.24147
1993	0.04467	0.02305	0.17471	0.24242
1994	0.04664	0.02154	0.17475	0.24293
1995	0.04580	0.02390	0.17310	0.24280
1996	0.04702	0.02488	0.17495	0.24685
1997	0.05279	0.03815	0.19008	0.28102
1998	0.06174	0.05970	0.18976	0.31121
1999	0.05735	0.02482	0.18509	0.26726
2000	0.05724	0.02791	0.19473	0.27988
2001	0.05685	0.02090	0.19448	0.27222
2002	0.05767	0.02360	0.19870	0.27997
2003	0.05611	0.03387	0.18749	0.27747

3.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본절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가. 산업부문별 가구구성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구성하는 가구의 산업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고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광업과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이러한 구조는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와 비교할 때 다소의 수준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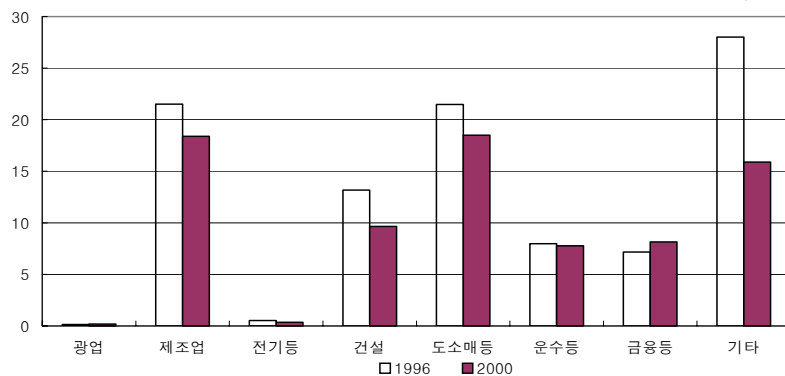
<표 VI-15> 산업부문별 가구구성비(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전체
1996	0.15	21.51	0.53	13.17	21.48	7.97	7.18	28.01	100
2000	0.19	18.39	0.35	9.66	18.49	7.78	8.14	15.89	100

[그림 VI-26] 산업부문별 가구구성비(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



나. 산업부문별 소득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부문별 가구소득을 추정해 본 결과, 전기·가스·수도업 부문과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부문의 평균소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앞에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수준의 차이만 다를 뿐, 질적인 측면에서의 결론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광업 부문의 경우에는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 추정된 것보다 달리 소득수준이 전체 평균소득 수준보다도 다소 더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가계조사자료와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포괄대상 지역 및 표본대상 가구의 가구원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그 밖에도 광업부문의 경우 가구 구성비가 최대 0.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표본에 나타난 광업가구로부터 추정된 평균소득 수준이 전체 광업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수치인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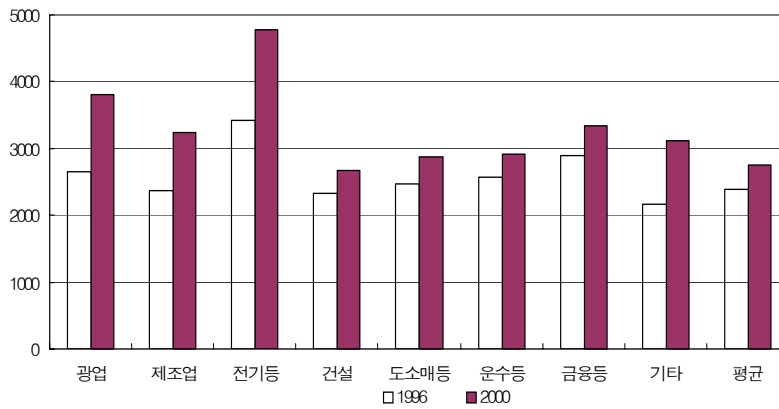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서는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 포함되지 않는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광업 부문의 경우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견 도시가계조사자료보다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업부문이 대체로 사양산업인 경우가 많다는 점과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특이관측치(outlier)가 몇 개만 존재하더라도 소표본(small sample)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통계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광업부문의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데에는 다소 유보적이다.

그 밖의 부문의 경우에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경우와 대체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16> 산업부문별 평균소득 분포 추이(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만원)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96	2653	2370	3418	2321	2461	2568	2892	2157	2392
2000	3814	3245	4771	2672	2878	2916	3333	3109	2747

[그림 VI-27] 산업부문별 평균소득 분포(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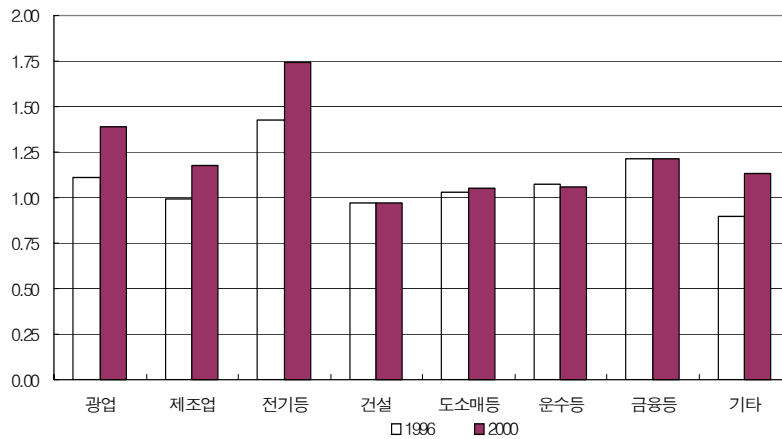


<표 VI-17> 전체 평균소득 대비 산업부문별 소득상대배수(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배)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96	1.11	0.99	1.43	0.97	1.03	1.07	1.21	0.90	1.00
2000	1.39	1.18	1.74	0.97	1.05	1.06	1.21	1.13	1.00

[그림 VI-28] 전체 평균소득 대비 산업부문별
소득상대배수(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배)



다. 산업부문별 소득세 부담 분포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소득세 부담 평균은 1996년 80만원에서 2000년에는 83만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비해 가구당 소득세 부담액이 작게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자료의 차이에도 기인하지만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은 비도시지역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경우에도 부문별로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소득수준의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술하였 다시피 소득세제 자체가 누진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득분포 자체의 차이까지 더해지면서 산업부문별로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는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광업 부문과, 전기·가스·수도업 부문, 건설업 부문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한 반면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문의 소득세 부담은 증가하였다(<표 VI-18> 참조).

실효소득세부담률은 3.35%에서 3.03%로 소폭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경우에도 실효소득세부담률이 3.11%에서 3.08%로 소폭 하락한 것과 다소의 수준 차이만을 제외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표 VI-5> 참조).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의 경우 실효소득세부담률은 5.36%에서 2.94%로 대폭 하락하였다. 1996~2000년 사이에 동 부문의 소득이 3,418만원에서 4,771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소득세 부담액은 오히려 183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하락하였다.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실효소득세부담률이 5.25%에서 5.21%로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던 데 비해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서는 실효소득세부담률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의 경우 가구구성비가 0.3~0.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소표본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경우에서도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부문에서 자영업자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부문의 소득세 실효세부담률도 다른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996년의 경우에는 이 부문의 실효소득세부담률이 다른 부문보다 낮게 나타나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경우 축적된 자료연도가 일천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의 추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과연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과중한지의 여부를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

VI.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정책시사점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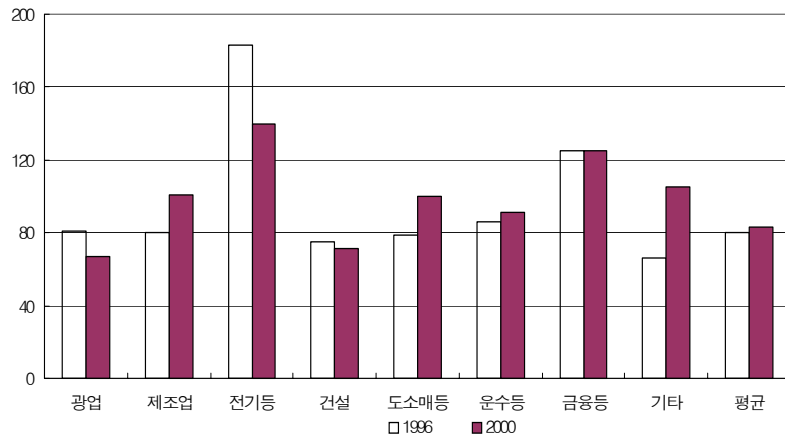
<표 VI-18> 산업부문별 소득세 부담 분포(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만원)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96	81	80	183	75	79	86	125	66	80
2000	67	101	140	71	100	91	125	105	83

[그림 VI-29] 산업부문별 소득세 부담 분포(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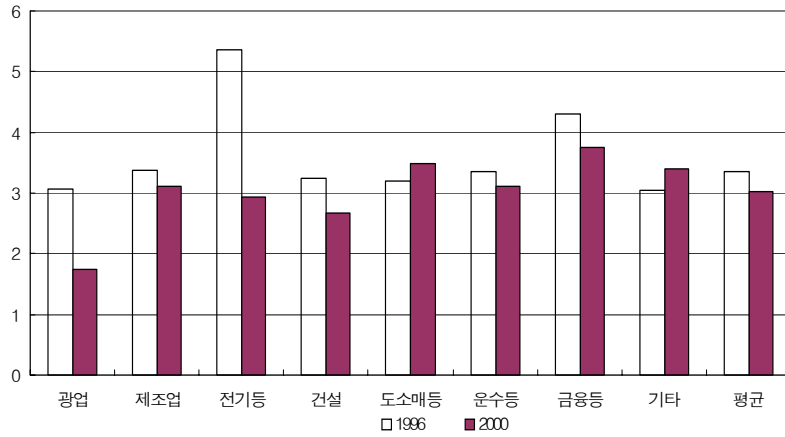
<표 VI-19>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부담률 분포(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기타	평균
1996	3.06	3.38	5.36	3.24	3.19	3.35	4.31	3.05	3.35
2000	1.75	3.12	2.94	2.67	3.48	3.11	3.75	3.39	3.03

[그림 VI-30]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부담률
분포(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



<표 VI-20> 산업부문별 가구당 가구원수
분포(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명)

	광업	제조업	전기·가 스·수도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창 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용역업	기타	평균
1996	4.11	3.38	3.76	3.56	3.27	3.73	3.34	2.84	3.26
2000	3.69	3.37	3.29	3.45	3.13	3.54	3.21	3.26	3.10

<표 VI-21> 산업부문별 가구당 취업인수
분포(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명)

	광업	제조업	전기·가 스·수도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창 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용역업	기타	평균
1996	1.59	1.51	1.57	1.54	1.60	1.56	1.52	0.93	1.39
2000	1.72	1.53	1.45	1.56	1.61	1.58	1.54	1.54	1.32

VI. 산업부문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와 정책시사점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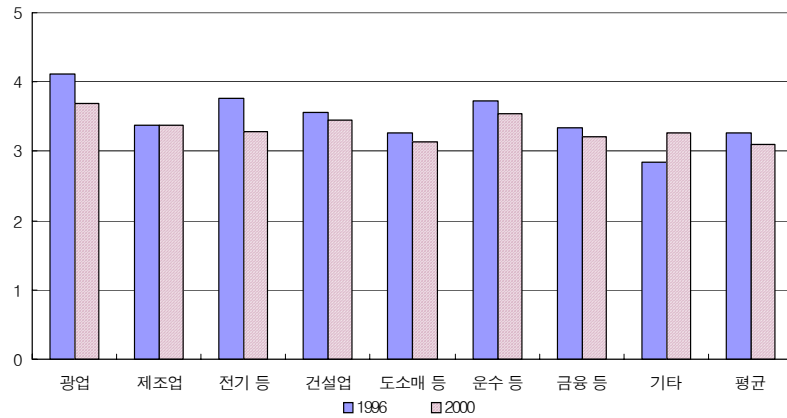
<표 VI-22> 산업부문별 자영업자가구의 비중(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

	광업	제조업	전기·가 스·수도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창 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용역업	기타	평균
1996	24.58	18.85	0.00	23.55	54.90	37.07	21.30	11.31	26.75
2000	20.90	19.02	0.00	24.18	57.73	37.19	21.75	23.22	2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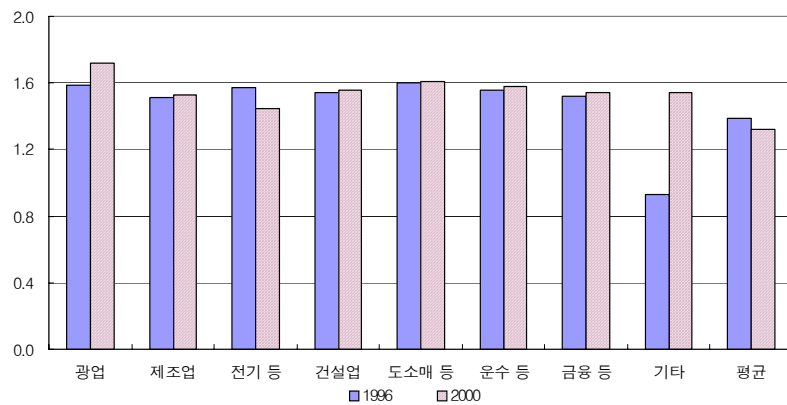
[그림 VI-31] 산업부문별 가구당 가구원수 분포(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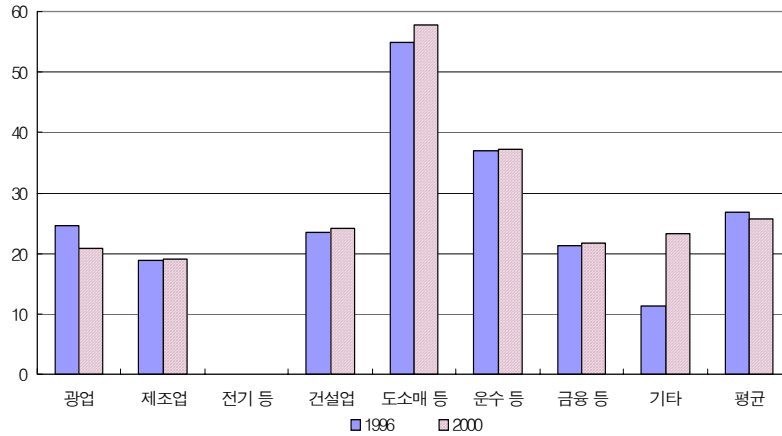


[그림 VI-32] 산업부문별 가구당 취업인수 분포(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명)



[그림 VI-33] 산업부문별 자영업자가구의 비중(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단위: %)



라. 상대소득 분포의 고찰 : 산업부문 지니계수의 분해를 중심으로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Yitzahki 분해와 Pyatt 분해 모두 그룹내 지니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룹간 지니는 전자의 경우 크게 증가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감소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도시가계조사자료와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분석방법과 자료의 종류에 따라 분석결과가 크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명확한 결론을 얻기는 어렵다.

<표 VI-23> 산업별 지니계수의 Yitzahki 분해(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그룹내 지니	그룹간 지니	계층화도	계
1996	0.28613	0.04081	-0.00128	0.32565
2000	0.24730	0.17677	-0.02365	0.40042

<표 VI-24> 산업별 지니계수의 Pyatt 분해(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그룹내 지니	그룹간 지니	중복지니 (overlapping)	계
1996	0.06423	0.04537	0.21606	0.32565
2000	0.04886	0.02930	0.32226	0.40042

4. 정책시사점

앞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산업부문별로 소득격차가 존재하지만 그 격차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소득격차에 비해 세부담의 격차가 다소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소득세제의 누진성에 기인한다.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부담률은 자영업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부문에서 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문으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탈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의 소득세제도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에는 높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에는 소득공제 수준을 낮게 책정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개별사업자 각각에 대한 소득탈루율은 파악할 수 없더라도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율을 알 수 있다면 소득탈루의 정도를 감안하여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근로소득세와의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⁴⁶⁾. 이는 반대로 현행의 소득공

46)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세부담의 관점에서만 타당한 논리이다. 개별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율이 서로 다른 상황하에서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소득세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평균적인 소득탈루율에 맞추어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율을 결정하게 되면 소득유형별로 평균적인 측면에서의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개별 사업소

제 수준이 평균적인 소득탈루율 수준을 적정 수준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유형간에 여전히 소득세 과세의 불공평이 잔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절에서 보았듯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구의 비중이 2003년 현재 66.7%(도시가계조사자료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경우에는 2000년 현재 57.7%)로 가장 높은 반면에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구의 비중이 거의 0에 가깝다. 이는 산업부문별로 가구유형별 구성비가 크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유형간 과세의 형평 차이는 자칫 산업부문간 소득세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자영업자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은 여타 부문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소득세의 실효부담률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의 가구당 가구원수나 취업인수가 다른 부문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구구성의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의 차이로 인한 소득공제의 차이에 의한 세부담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부문의 실효소득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자영업자가구의 비중이 여타 부문보다 높고 또한 소득수준이 동일하다면 자영업자가구에 대한 소득세 과세실효세부담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현행 소득세제의 소득종류별 소득공제 수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수준이 근로자가구보다 조금 더 높으며 실효소득세부담률 또한 자영업자가구가 근로자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가구유형 또

특자들간의 소득탈루율 차이를 무시하게 되므로 사업소득자 내부에서의 과세불공평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는 소득유형간의 소득세 부담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소득세의 누진과세체계를 고려할 때 자영업자가구의 실효소득세부담률이 더 높은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데 그쳤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더 높은 가구유형이 더 높은 실효소득세부담률을 지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수준이 조금 더 낮으면서 자영업자가구의 비중이 높은 부문(예: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실효소득세부담률이 소득수준이 조금 더 높으면서 자영업자가구의 비중이 낮은 부문(예: 운수·창고·통신업 또는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등)보다 오히려 실효소득세부담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는 또한 실제의 소득수준을 포함하여 여타의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를 감안하여 소득유형별로 소득공제 수준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세의 형평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차선책⁴⁷⁾(second best choice)으로서 제안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평균적인 소득탈루율을 파악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만큼 해결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볼 때 현행 소득세제하에서의 소득유형별 소득공제 수준의 차이는 적정 수준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47) 이에 대한 최선책(first best choice)은 물론 각 소득자의 개별 소득수준을 100%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방안이다.

VII. 결 론

1. 요약 및 시사점

소득분배 구조의 현황 및 소득재분배 문제는 관심이 비교적 높은 연구주제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소득분배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기에는 주요 통계자료마다 나뉘대로 중요한 한계점이 있어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득자료의 신뢰성이 가장 높고, 원시자료의 형태로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며 관측기간도 1982년 이래 2003년까지 약 22년이나 되는 도시가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도시가계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실시되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제Ⅲ장에서는 가구주의 연령, 취업형태 및 가구원수 등 가구유형의 여러 특성별로 소득분포의 변화추이를 일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분석방법에 따라 소득분배 형평성의 지수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지니계수의 산정 결과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임으로써 동일한 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결과의 다른 타연구들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제Ⅳ장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이 기간은 소득분배구조 변화의 양상과 원인별로 대략 4기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음

을 보았다. 제1기는 대략 1980년대 후반으로, 이 기간중 지니계수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지니계수가 하락하면서 상대소득격차가 축소된 현상은 초·중졸 가구주 비중의 급감 및 이에 상응하는 고졸 가구주 비중의 증가 등 교육수준의 상승으로써 주로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제2기는 1990년 초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기간으로, 지니계수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향안정세를 취하였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가구주 학력이 서서히 고학력 위주로 바뀌었으며, 아울러 학력계층간 상대소득의 격차가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기간 동안 지니계수의 하향안정세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제1, 2기를 합하여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굳이 세분하자면 1980년대 후반에는 가구주 학력분포의 급속한 변동이, 1990년대 초반에는 학력계층간 상대소득 격차의 빠른 감소가 소득격차 축소의 주된 요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 근거에 작용한 주요 정책수단은 기간에 따라 달랐을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제3기는 좁게 보아서 1997~1998년의 외환위기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소득이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눈에 띄는 사실은 환란으로 인한 타격의 정도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이와 같은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서열화 현상은 환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4기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으로, 제3기부터 시작된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의 서열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직전과 비교하여 교육수준의 분포나 교육수준별 상대소득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수준별로 계층내 소득격차가 커짐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환란 이전에 비하여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러한 경우 준거집단내의 소득분배가 악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소득형평성 악화의 체감 정도는 더 클 수도 있다.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구조와 관련하여 정책측면에서 4개 기간에 걸친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해석하였을 경우, 제1~2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물리적인’ 정부정책이 주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과거부터 꾸준히 고등교육 확대 정책을 견지한 결실로 1980년대 후반에 소득형평성 제고를 달성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제2기에서는 주로 계층간 상대소득 격차 감소를 통하여 소득형평성 제고를 달성하였는데, 이 역시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세·재정 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인 제4기에서는 교육수준 분포의 급속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제4기에서는 계층간 상대소득 수준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위적 재분배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더 이상 좁히기에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의 유인과 구조가 많이 변했다고 사료된다.

결국 제IV장의 분석에 따르면, 적어도 교육수준이라는 요인을 놓고 보았을 때, 1980년대 초·중반 이후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기간에서와 같이 정부정책이 소득분배 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던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향후에도 고학력화를 통해 추가적으로 상대소득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의 절대수준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은 반면에 추가적인 고학력화로 인해 초래되는 제반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작용은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매우 크다. 그러므로 고학력화를 통한 소득격차 축소 정책은 과거에는 효과적이었음에 분명하지만 변화된 현실에서는 더

이상 매력적인 정책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래의 교육정책이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 근거하여 향후에도 교육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재분배를 도모하는 정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IV장의 가구주 학력별 소득분배 구조 분석에 이어 제V장에서는 가구의 소득형태 중 맞벌이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시가계조사자료와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이 소득분배 격차를 완화시켜 주는 방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과 2003년 사이에 도시가구의 취업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35.57%에서 52.04%로 19.39%p 상승하였으며, 지니계수는 0.27104에서 0.26626으로 0.00478지니만큼 하락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최근의 맞벌이 양상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매우 유사한 형태로 맞벌이가구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지니계수를 낮출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가구의 육성·지원은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정책의 중요한 정책방안의 하나로서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V장의 분석결과,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약 중·저소득층에서 맞벌이가구의 비중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이것 역시 소득분배 격차를 더욱 축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두 가지 논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맞벌이 장려정책은 곧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맞벌이 문제는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육아보육 문제가 가

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논의가 매우 단선적이지만 육아보육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면 여성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맞벌이가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육아보육 지원정책 자체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상대적인 지원 효과가 더 크므로 육아보육 지원은 이중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보육 장려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육아보육 비용과 관련된 수요측면에서의 직·간접적 지원에 추가하여, 공급측면에서도 유관 시설의 신설·유지·확대정책 등도 함께 추진하여야 효과적이다. 또한 이 정책은 인구의 노령화 추세 등과도 연계해 볼 때 여성노동력 공급 육성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동의 사용자로 하여금 육아보육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등 유·무형의 형태로 의무를 지우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거시적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이 자칫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의 성장잠재력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육아보육 지원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는 육아보육 시설 설치·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에 대해 비용공제 등과 같은 각종 세제지원 등과 함께 육아보육 시설에 대한 신설이나 확대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육아보육 지원을 통한 맞벌이 장려정책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한 탄력성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제VI장에서는 산업부문별 소득격차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가구주가 종사하는 산업부문의 분포가 자영업 여부 등 가구의 다른 특성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제VI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산업부문별로 소득격차가 존재하지만 그 격차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소득격차에 비해 세부담의 격차가 다소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소득세제의 누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부담률은 자영업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부문에서 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 중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소득을 탈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의 소득세제도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에 대응하여 근로소득세에는 높은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에는 소득공제 수준을 낮게 책정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개별사업자 각각에 대한 소득탈루율은 파악할 수 없더라도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율을 알 수 있다면 소득탈루의 정도를 감안하여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최소한 평균적으로는 근로소득세와의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소득유형별로 과세체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자칫 또 다른 형태의 과세 불공평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현행의 소득공제 수준이 평균적인 소득탈루율 수준을 적정 수준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유형간에 여전히 소득세 과세의 불공평이 잔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행 사업소득세가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보다 실제의 소득탈루율

이 더 높다면 사업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여전히 세부담이 낮을 것이고, 반대로 실제의 소득탈루율이 암묵적으로 가정한 소득탈루율보다 더 낮다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사업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세보다 과중하게 되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간의 소득공제 제도 및 수준의 차이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이 실제와 얼마나 가까운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영수증 복권제도, 과세당국의 탈루소득 포착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표가 크게 양성화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이 하락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수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해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세 실질부담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까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세 부담에 대한 상호비교 연구는 구체화된 것이 별로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히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많이 탈루하고 있어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낮다는 일반적인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을 뿐, 정치한 분석연구는 없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검토해 본 결과,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이고 정치한 연구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일부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부담이 자칫 근로소득세 부담과 관련하여 수평적 과세의 형평 원칙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더 과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수준이 근로자가구보다 조금 더 높으며 실효소득세부담률 또한 자영업자가구가 근로자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가구유형 또는 소득유형간의 소득세 부담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소득세의 누진과세체계를 고려

할 때 자영업자가구의 실효소득세부담률이 더 높은 것이 당연한 결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더 높은 가구유형이 더 높은 실효소득세부담률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소득자들의 소득탈루를 감안하여 소득유형별로 소득공제 수준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세의 형평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차선책(second best choice)으로서 제안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평균적인 소득탈루율을 파악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이것조차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만큼 해결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볼 때 현행 소득세제하에서의 소득유형별 소득공제 수준의 차이는 적정 수준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는 분석에 따른 추정오차에 의한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유형간 소득세 과세의 형평 문제에 대해서는 분석오류의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제약점 및 향후 보완과제

본 연구에서 가구유형, 교육수준, 산업부문 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가구주의 취업형태와 학력, 종사하는 산업부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런데 과연 가구주 한 사람만의 특성을 가지고 가구 전체를 특정한 형태의 가구로 규정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리로써 대답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구구성이 3세대 또는 그 이상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복합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산업화·서구화 및 가족계획에 의한 산아제한 등에

따라 급격히 핵가족화 추세가 가속화되었다. 이는 곧 가구 특성이 복합가구에서 1세대 또는 2세대로 구성된 단일가구화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비록 가구주만의 특성으로 가구 전체의 특성을 규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배우자와는 유사한 인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나이가 어린 자녀가 부모들과 다른 특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영유하는 주된 주체가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주의 특성만으로 가구 전체의 특성을 규정하는 접근법은 어느 정도 정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유형별, 교육수준별, 맞벌이 여부, 산업부문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상기와 같이 부문별로 각각에 대해 분석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아우른 것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성격상 서로 일치시키기 어렵거나 분석의 초점이 서로 달라 종합화하여 고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점에서 일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좀더 완결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각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연구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특정한 하나의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문별 요인변화가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력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일례로 맞벌이가구의 비중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보다 동학적(dynamic)인 분석이 요청된다. 즉, 추세적으로 맞벌이가구 비율의 증가추세를 추정하고, 비맞벌이가구에서 맞벌이가구로 전환하는 가구의 특성과 비율, 맞벌이가구로 전환시 소득증가율,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의 임금하락 가능성과 탄력성 추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주제들은 각기 모두 그 하나만으로도 고도의 심층연구를 요하는 주제들인 만큼 본 연구에서 이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시조연구로서,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고자 하며 상기의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후학들의 연구에 맡기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마지막 산업부문별 소득분배 구조의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즉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성급하지만 사업소득세 부담이 근로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본 연구가 최초로 제기하는 매우 중요한 조세문제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자영업자가구에 대한 실제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위에서 제기한 명제가 일반적인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인 만큼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완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이 근로소득자보다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도 더 높다는 점만 강조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가구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비추어 보아 근로소득세 부담과 사업소득세 부담 사이의 소득유형간 소득세 형평과세 문제는 다분히 관심 밖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 강석훈·박찬용, 『소득분배 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재정논집』, 제18집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pp. 29~49.
- 김종면·성명재, 『장기인력수급 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연구보고서 03-02, 한국조세연구원, 2003.
- 김진영, 『대우패널 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재정논집』, 제17권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2, pp. 47~74.
- 김진영·박창균,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 연구보고서 01-08, 한국조세연구원, 2001.
- 박찬용·강석훈·김태완, 『소득분배와 빈곤의 동학 및 변화 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1-01, 한국조세연구원, 2001.
- _____,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2-01, 한국조세연구원, 2002(A).
- _____,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지니계수 추정에 관한 연구』, 『재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B), pp. 1~38.
- 성명재·박형수·전병목, 『조세제도가 소득분배 및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연구보고서 2003-05,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유경준·심상달·김대일·이중훈·이혜훈·황덕순·한정화, 『취약 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 2004-01, 한국개발연구원, 2004.
- 전영준, 『인구구조 변동과 국민연금: 세대별 후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3권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1997.
- 전영준·김종면,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01-07, 한국조세연구원, 2001.
- 정광수, 『한국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연구: 인구학적 특성 및 분배불평등의 장기적 추세와 경제위기 후의 변화』, 기타연구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0.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최준욱·전병목,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Ⅱ):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3-08, 한국조세연구원, 2003.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 현진권·강석훈,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연구』, 제46권 제3호, 한국경제학회, 1998, pp. 145~167.
- Burniaux, Jean-Marc, Thai-Thang Dang, Douglas Fore, Michael Förster, Marco Mira d'Ercole and Howard Oxley,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89, OECD, 1998.
- Kuznets, Sim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5, 1955, pp. 1~25.

- Lambert, Peter J., *Tru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A Mathematical Analysis*, Basil Blackwell, 1989.
- Milanovic, Branko, "True World Income Distribution, 1988 and 1993: First Calculation Based on Household Surveys Alone," World Bank, 1999.
- Milanovic, Branko and Shlomo Yitzahki, "Decomposing World Income Distribution: Does the World Have Middle Class?" World Bank, 2001.
- Pyatt, Graham, "On the Interpretation and Disaggregation of Gini Coefficients," *The Economic Journal*, 86, 1976, pp. 243~255.
- Pyatt, Graham, Chau-Nan Chen, and John Fei, "The Distribution of Income By Factor Componen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80, pp. 451~473.
- Shorrocks, Anthony 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Population Subgroups," *Econometrica*, Vol. 52, No. 6, 1984, pp. 1369~1385.
- Sung, Myung Jae, "Test of Sample Selection Bias Based on Bootstrapping and Recovery of Distribution Using Nearest Neighbor Estimation Method," Working Paper 02-01,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02.
- Yitzahki, Shlomo and Robert I. Lerman, "Income Stratification and Income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37, No. 3, 1991, pp. 313~329.
- Yitzahki, Shlomo, "Economic Distance and Overlapping of Distributions," *Journal of Econometrics*, 61, 1994, pp. 147~159.

<부록 I> Q지수의 특성

Q지수는 어떤 한 집단이 전체 모집단에서 계층(stratum)을 이루는지의 여부를 나타내주는 지수(index)의 역할을 한다. Yitzhaki and Lerman(1991)은 Q지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Q_s 지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1 \leq Q \leq 1$.

둘째, s 번째 집단 외의 어떠한 관측치도 소득이나 기타 기준이 되는 변수(variate)를 기준으로 할 때 s 번째 집단의 범주내에 들어 오지 않는다면 s 번째 집단의 Q_s 는 1의 값을 가진다. 즉, s 번째 집단의 범주(domain)와 기타 범주간에 아무런 중복(overlap)도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s 번째 집단이 그 자체로서 순수하게 완전히 동질적(homogeneous)인 계층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즉, s 번째 집단과 여타 집단은 각각 100% 이질적인 범주에서 추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른 집단의 범주와 중복되는 정도가 상승할수록 Q_s 의 값은 하락한다.

넷째, 다른 집단에 속한 관측치 중 s 번째 집단의 범주와 겹치는 관측치의 총수가 일정(고정)하다고 할 때, s 번째 집단의 범주내에 있는 여타 집단에 속한 관측치가 지니는 변수(variate)의 값이 s 번째 집단의 평균값에 가까울수록 Q_s 의 값은 작아진다. 이는 Q_s 의 값이 여타 집단과의 중복 여부에도 민감하게 변하지만 중복되는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s 번째 집단의 범주 및 구성이 여타 집단과 완전히 동질

적인 경우에는 Q_s 가 0의 값을 가진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s 번째 집단이 모집단으로 완전무작위적으로 추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여섯째, s 번째 집단의 분산도(divergence)가 여타 집단의 분산도보다 더 큰 경우에는 Q_s 가 음(-)의 값을 가진다. 이는 더 이상 s 번째 집단이 동질적(homogeneous)인 집단이 아님을 시사한다.

일곱째, s 번째 집단이 각각 순수하게 동질적인 두 개의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집단은 각각 아무런 중복 없이 모집단의 양쪽 끝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Q_s 는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Q 지수는 기본적으로 각 집단의 계층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므로 Q 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각 집단에 대응되는 Q 지수의 합은 반드시 0이 되지는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두 집단이 일정한 값을 경계로 분할을 이루면서 범주(domain)가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면 두 집단의 Q 지수는 모두 1이며, 따라서 Q 의 합은 2가 된다.

<부록 II>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기준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는 1996년 0.32565에서 2000년 0.40042로 상승하였다. 이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절대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첫째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는 비도시지역의 읍·면지역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는 포함되어 자료의 포괄범위가 달라지게 됨에 따른 차이 때문이다. 둘째, 자료구축방법의 차이로 인해 절대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기본적으로 일회성 설문지 조사방법을 통해 자료가 구축되는 반면에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양자간에 자료의 신뢰도 차이가 있다. 그 밖에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을 별도로 추정하여 사용하는 반면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서는 가구유형에 관계 없이 신고된 소득정보를 그대로 제공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자료의 구축방법과 정보제공의 범위가 달라 지니계수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부표 II-1>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로 추정한 지니계수

(단위: 가구)

	1996	2000
지니계수	0.32565	0.40042
표본가구 수	24,290	23,720

주: 연간소득 자료를 추정한 결과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1.5% 정도에 이르는 반면 도시가계조사자료에 의하면 그 비율이 0.7%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특히 연소득 3억원 이상인 가구비중은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경우 0.12%에 이르지 만 도시가계조사자료에 의하면 전무하다.

고액소득자의 경우에는 그 존재만으로도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고액소득자의 존재가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소득 1억원 또는 그 이상의 소득자들을 특이표본(outlier)으로 간주하여 분석표본에서 제외하고 지니계수를 추정한 결과, 특히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경우 지니계수의 변화가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표 II-2>와 <부표 II-3>에 의하면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경우 전체 가구 대상의 지니계수는 0.40042인데 연소득 1억원 이상인 1.5% 정도의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대한 지니계수는 0.35311로 11.8% 정도 지니계수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시가계조사자료의 경우에는 고액소득자의 비율이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보다 낮기 때문에 고액소득자 제외시에도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작은 편이다. 2003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가구를 표본에서 제외하면 지니계수는 0.27747에서 0.26333으로 5.1% 정도 하락한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비교해 볼 때 전자가 후자보다 고소득층의 표본구성비율이 높으며 따라서 전자의 지니계수가 후자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의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부표 II-2>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로 추정한 지니계수

1996년				
제외표본소득의 범위	표본제외 가구 수	표본가구의 비중(%)	지니계수	전체 지니와의 차이(%)
20억원 이상	-	-	0.32565	-
10억원 이상	-	-	0.32565	-
9억원 이상	1	0.00375	0.32469	0.29706
8억원 이상	1	0.00375	0.32469	0.29706
7억원 이상	1	0.00375	0.32469	0.29706
6억원 이상	1	0.00375	0.32469	0.29706
5억원 이상	1	0.00375	0.32469	0.29706
4억원 이상	3	0.01126	0.32384	0.55624
3억원 이상	7	0.02627	0.32257	0.94752
2억원 이상	20	0.07086	0.32020	1.67403
1억원 이상	82	0.34528	0.31394	3.59659
2000년				
제외표본소득의 범위	표본제외 가구 수	표본가구의 비중(%)	지니계수	전체 지니와의 차이(%)
20억원 이상	-	-	0.40042	-
10억원 이상	4	0.02327	0.39378	1.65788
9억원 이상	4	0.02327	0.39378	1.65788
8억원 이상	5	0.03335	0.39200	2.10126
7억원 이상	8	0.04653	0.38995	2.61373
6억원 이상	8	0.04653	0.38995	2.61373
5억원 이상	12	0.07353	0.38711	3.32391
4억원 이상	17	0.09582	0.38518	3.80599
3억원 이상	25	0.12430	0.38340	4.24908
2억원 이상	61	0.34367	0.37452	6.46654
1억원 이상	304	1.51060	0.35311	11.81546

<부표 II-3> 도시가계조사자료로 추정된 지니계수

1996년				
제외표본소득의 범위	표본제외 가구 수	표본가구의 비중(%)	지니계수	전체 지니와의 차이(%)
1억 1천만원 이상	-	-	0.24685	-
1억원 이상	1	0.03612	0.24614	0.28887
2000년				
제외표본소득의 범위	표본제외 가구 수	표본가구의 비중(%)	지니계수	전체 지니와의 차이(%)
3억원 이상	0	-	0.27988	-
2억원 이상	1	0.01203	0.27940	0.17018
1억 9천만원 이상	1	0.01203	0.27940	0.17018
1억 8천만원 이상	1	0.01203	0.27940	0.17018
1억 7천만원 이상	1	0.01203	0.27940	0.17018
1억 6천만원 이상	3	0.03096	0.27887	0.36052
1억 5천만원 이상	5	0.06842	0.27791	0.70115
1억 4천만원 이상	9	0.15691	0.27580	1.45513
1억 3천만원 이상	14	0.25123	0.27379	2.17402
1억 2천만원 이상	21	0.39133	0.27106	3.15086
1억 1천만원 이상	23	0.41627	0.27064	3.30018
1억원 이상	35	0.66548	0.26716	4.54336
2002년				
제외표본소득의 범위	표본제외 가구 수	표본가구의 비중(%)	지니계수	전체 지니와의 차이(%)
3억원 이상	0	-	0.27997	-
2억원 이상	0	0.00000	0.27997	0.00000
1억 9천만원 이상	0	0.00000	0.27997	0.00000
1억 8천만원 이상	0	0.00000	0.27997	0.00000
1억 7천만원 이상	0	0.00000	0.27997	0.00000
1억 6천만원 이상	1	0.05229	0.27869	0.45436
1억 5천만원 이상	4	0.14465	0.27667	1.17779
1억 4천만원 이상	4	0.14465	0.27667	1.17779
1억 3천만원 이상	6	0.20335	0.27562	1.55239
1억 2천만원 이상	10	0.36958	0.27300	2.48765
1억 1천만원 이상	14	0.49207	0.27130	3.09546
1억원 이상	22	0.80107	0.26786	4.32520
2003년				
제외표본소득의 범위	표본제외 가구 수	표본가구의 비중(%)	지니계수	전체 지니와의 차이(%)
3억원 이상	0	-	0.27747	-
2억원 이상	1	0.03053	0.27622	0.44888
1억 9천만원 이상	1	0.03053	0.27622	0.44888
1억 8천만원 이상	1	0.03053	0.27622	0.44888
1억 7천만원 이상	3	0.09301	0.27479	0.96461
1억 6천만원 이상	4	0.10611	0.27451	1.06615
1억 5천만원 이상	4	0.10611	0.27451	1.06615
1억 4천만원 이상	4	0.10611	0.27451	1.06615
1억 3천만원 이상	7	0.17990	0.27343	1.45292
1억 2천만원 이상	10	0.24614	0.27256	1.76829
1억 1천만원 이상	23	0.65699	0.26789	3.45135
1억원 이상	41	1.12836	0.26333	5.09322

<부표 II-4> 가구유형별 가구원수 분포
(도시가계조사 전체 자료 기준)

(단위: 명)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완전취업 (A)	부분취업 (B)	취업(A+B)	불완전취 업(B+C)	완전무직 (C)	
1982	4.53	4.38	4.47	4.05	4.45	3.89	3.79	4.83
1983	4.47	4.33	4.45	4.06	4.42	3.75	3.59	4.76
1984	4.34	4.22	4.31	3.89	4.29	3.73	3.68	4.62
1985	4.29	4.17	4.24	3.81	4.22	3.69	3.63	4.6
1986	4.23	4.12	4.2	3.79	4.18	3.64	3.57	4.51
1987	4.14	4.07	4.13	3.93	4.12	3.6	3.49	4.34
1988	4.12	4.06	4.11	4.01	4.11	3.51	3.38	4.28
1989	4.07	3.97	4.05	3.68	4.03	3.34	3.12	4.29
1990	4.08	3.99	4.09	3.75	4.06	3.37	2.99	4.3
1991	4.06	3.97	4.07	3.43	4.04	3.26	3.14	4.26
1992	4.01	3.92	4.01	3.59	3.99	3.28	3.07	4.19
1993	3.89	3.78	3.85	3.52	3.83	3.27	3.09	4.13
1994	3.84	3.74	3.84	3.38	3.8	3.19	3	4.07
1995	3.81	3.71	3.81	3.42	3.78	3.18	2.95	4.02
1996	3.76	3.66	3.78	3.37	3.74	3.07	2.8	3.95
1997	3.72	3.62	3.74	3.38	3.71	3.06	2.8	3.93
1998	3.71	3.59	3.72	3.54	3.69	3.26	2.86	3.93
1999	3.69	3.58	3.73	3.55	3.7	3.23	2.91	3.91
2000	3.66	3.56	3.69	3.42	3.65	3.25	3.12	3.85
2001	3.6	3.47	3.63	3.39	3.6	3.05	2.79	3.84
2002	3.53	3.42	3.58	3.23	3.55	2.93	2.79	3.75
2003	3.54	3.47	3.63	3.35	3.58	3.04	2.68	3.7

<부록 Ⅲ> 도시가구의 가구유형별 취업인수 분포

<부표 Ⅲ-1> 가구유형별 취업인수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단위: 명)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완전취업 (A)	부분취업 (B)	취업 (A+B)	불완전취업 (B+C)	완전무직 (C)	
1982	1.16	1.13	1.31	0.50	1.26	0.18	0.00	1.20
1983	1.16	1.14	1.33	0.66	1.28	0.23	0.00	1.20
1984	1.20	1.19	1.37	0.69	1.34	0.18	0.00	1.23
1985	1.20	1.18	1.34	0.52	1.30	0.18	0.00	1.25
1986	1.30	1.23	1.42	0.43	1.36	0.17	0.03	1.46
1987	1.36	1.30	1.46	0.69	1.43	0.19	0.01	1.52
1988	1.42	1.36	1.48	0.77	1.46	0.21	0.06	1.57
1989	1.43	1.36	1.50	0.78	1.46	0.34	0.07	1.59
1990	1.38	1.30	1.46	0.65	1.39	0.35	0.05	1.58
1991	1.44	1.36	1.51	0.64	1.46	0.32	0.08	1.61
1992	1.44	1.36	1.50	0.75	1.46	0.35	0.08	1.60
1993	1.48	1.40	1.54	0.72	1.50	0.32	0.04	1.66
1994	1.47	1.38	1.57	0.73	1.50	0.40	0.06	1.67
1995	1.48	1.40	1.59	0.74	1.52	0.43	0.14	1.65
1996	1.51	1.42	1.61	0.91	1.54	0.51	0.14	1.70
1997	1.54	1.44	1.64	0.90	1.57	0.53	0.22	1.72
1998	1.42	1.30	1.55	0.98	1.44	0.70	0.27	1.63
1999	1.36	1.23	1.54	0.87	1.41	0.55	0.23	1.62
2000	1.44	1.31	1.60	0.98	1.50	0.63	0.37	1.68
2001	1.43	1.29	1.59	0.86	1.48	0.53	0.27	1.69
2002	1.45	1.32	1.59	0.95	1.53	0.50	0.28	1.71
2003	1.47	1.36	1.60	1.16	1.52	0.74	0.26	1.70

<국문초록>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성명재·김종면

1980년대~1990년대 초에는 지니계수가 하락추세를 보여 상대소득 격차가 축소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지니계수가 저점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최근까지 상대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산업 구조의 급변, 실업률 상승, 장기실업 추세의 확산,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등이 주된 요인이다. 그 밖에 급격한 노령화와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도 분배격차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가구주의 교육수준 분포는 무학, 초등 및 중등교육의 비중이 하락하는 대신 고등교육 이상 학력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향평준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지니계수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이는 초·중졸 가구주 비중의 급감과 고졸 비중의 증가로 설명된다. 1990년 초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 지니계수가 완만하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점차 고학력 위주로 바뀌고 교육계층간 상대소득 격차도 비교적 빠르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외환위기 동안 전 계층의 소득이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교육수준별 소득분배 서열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현상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교육수준의 분포와 교육수

준별 상대소득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각 교육계층내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환란 이전에 비해 지니계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전에는 고등교육 육성정책이 소득분배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교육수준이 이미 상향평준화된 작금에는 고학력화를 통한 소득격차 축소효과가 매우 작다. 따라서 고학력화를 추구할 경우 부작용과 사회·경제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학력화 정책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무교육의 내실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맞벌이가구는 점차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고학력층에서 그런 추세가 두드러진다. 맞벌이가구의 비중 상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대소득 격차 축소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 장려정책은 상대소득 격차 축소의 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맞벌이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노동공급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그 가운데 육아보육지원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다만 정책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별도의 기초·보완 연구가 요청된다.

산업부문별 실효소득세부담률을 비교해 본 결과 일부 부문(도소매·음식·숙박업)은 다른 부문보다 소득수준이 낮으면서도 실효소득세부담률은 더 높은 세부담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부문별로 소득공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원 수, 취업인 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추정 과정에서 나타난 오차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 그 밖에 소득유형의 차이에 의한 소득공제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업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소득공제 수준이 낮다. 이는 암묵적으로 사업소득의 소득탈루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업

소득세 부담의 적정성은 사업소득의 탈루율에 의존한다. 최근에는 납세의식 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수증 복권제도, 과세당국의 탈루소득 포착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사업소득이 크게 양성화되었다. 반면에 사업소득세의 소득공제 수준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전보다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세 실질부담은 상승하였다. 사업소득 포착률의 변화는 자칫 소득유형간 수평과세의 형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득유형별 소득세 부담의 형평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소득 탈루로 인한 소득유형간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주목을 끌었을 뿐 사업소득세의 부담이 과중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경우는 본 연구가 사실상 처음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보완연구를 통해 적정 사업소득세 부담을 위한 과세체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Policies Based on Sectoral Studies in Korea

Sung, Myung Jae and John M. Kim

Income inequality in Korea, which declined throughout the 1980s and early 1990s and remained quite stable during the mid 1990s, has sharply risen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and 1998. The main factors driving this sharp increase were restructuring, a steep rise in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ing numbers of part-time workers, aging of the population, etc.

In late 1980s, the share of household heads with high school or better education increased, offsetting a decline in household heads with middle school or lower educational backgrounds. These changes accounted for the drastic decrease in the Gini coefficient in this period. In early 1990s,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 levels of household heads became quite skewed toward higher education levels, which was reflected in the gradually decline of the Gini coefficient over the same period. However, in 1998, the period of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the Gini rose sharply, as did income disparities among households of different education backgrounds.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internal income inequality, that is,

within-education group inequalities, have risen, although between-education group inequalities have not changed much, and Gini has remained high.

In the past, especially during the 1980s, improved education levels accounted for a large part of the decline in relative income disparities in Korea. However, it is doubtful that policies encouraging higher education will be able to contribute much more to reducing income gaps, mainly because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 levels is reaching a saturation point in the sense that it cannot shift as quickly as it did in the past.

We have also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double-income households has reduced relative income inequality in Korea, at least from the mid 1990s onward. Therefore, a policy of encouraging double income households can contribute to reducing relative income inequality, an example of which would be to subsidize female labor supply, e.g., through child-care subsidies. Our results point up the need for more detailed research for concrete policy measures that support double-incomes.

Another finding of this study is the possibility that a self-employed person may bear a heavier income tax burden than a wage and salary earner, i.e., there is a question of horizontal equity. The effective income tax burden depends on income levels, number of dependents, income sources, and so forth. It is well known that most self-employed under-report their income the tax authority.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law, a smaller income deduction is allowed in business income tax than in wage and salary income tax in Korea. The rationale for the smaller income deduction for business income tax is that it offsets the tax evasion by at least part of the self-employed. Therefore, the justification for lower income deduction in business income tax also depends on the level of tax evasion of the self-employed.

Up to now, only the issues of the tax evasive behavior of the self-employed and the resulting inequity in tax burdens have drawn much attention, whereas only little interest has been given to the whether deduction allowances that presume tax evasion by the self-employed actually achieve equitable results. Our results indicate that this issue warrants further investigation at a more detailed level.

<著者略歴>

成 明 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Wisconsin-Madison대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金 宗 勉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Chicago大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研究報告書 04-03

부문별·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2004년 12월 24일 인쇄
2004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성명재·김종면
발행인 최 용 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1318]-[717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전화: 2186-2114(대), 팩시밀리: 2186-2179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 지 사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의 2004

ISBN 89-8101-977-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9,000원